

연구보고서

#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8월 30일(화)

연구기관 : (사)문화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 강윤주

공동연구원 : 김도형

박경신

이원재

최준영

협력연구원 : 이운서

이혜정





# 목차

---

## I.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 2. 연구범위 • 6
- 3. 추진과정 및 연구방법 • 8

## II. 선행연구 분석

- 1.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200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3
- 2. 예술인 범위 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연구 (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9
- 3.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33
- 4. 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1, 문화체육관광부) • 41

## III. 예술활동증명 제도 현황 및 쟁점

- 1. 예술활동증명 제도 현황 • 53
- 2. 예술활동증명 제도 관련 쟁점 • 76

## IV. 예술활동증명 제도 관련 의견수렴

- 1. 그룹인터뷰 • 83
- 2. 설문조사 • 104
- 3. 현장 예술인 간담회 • 134
- 4. 지자체 예술인복지 사업담당자 간담회 • 136

## V.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 1. 제도 개선방안의 구성 및 개요 • 141
- 2.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 단기 • 143
- 3.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 중장기 • 191

## VI. 참고자료

- 1. <예술인 복지법> 개정 제안 내용 정리 • 197
-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 제안 내용 정리 • 208
- 3.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 내용 정리 • 214
- 4.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제안 내용 정리 • 217
- 5. 설문조사지 ; 예술인 • 229
- 6. 설문조사지 ; 심의위원 • 237



## 표 목차

---

[표1-1] 그룹인터뷰 개요 · 8

[표1-2] 설문조사 개요 · 8

[표1-3] 간담회 개요 · 9

[표2-1] 예술인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현황 · 14

[표2-2] 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없는 예술인의 비율 · 15

[표2-3] 예술인 정책의 영역과 과제 · 17

[표2-4] ‘한국표준직업분류 2007’을 활용한 예술인 직업 예시 · 21

[표2-5] 예술인의 소득 분류(예시) · 24

[표2-6] 예술활동 주 업무로 하는 사업체 업종코드 · 25

[표2-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예산 현황(2012년) · 27

[표2-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기별 경상비 추계 · 27

[표2-9] 연구 자문회의 추진 일정 · 28

[표2-10] 공연·무대 예술인 대상 경력증빙자료의 보관 여부 · 30

[표2-11] 공연·무대 예술인 대상 경력증빙자료의 사용 경험 · 30

[표2-12] 예술인 DB 시스템 구축 로드맵(안) · 32

[표2-13]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지역분포 · 34

[표2-14] 장르·심사위원별 예술활동증명 완료비율 · 35

[표2-15] 의견수렴 현황 · 36

[표2-16] 각 부문별 예술활동증명 제도 세부 개선방안(안) · 37

[표2-17] 예술인 복지정책 예산(2020년~2021년) · 42

[표2-18]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목표(안) · 43

[표2-19]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디딤돌’ 사업 지원 현황(장르별) · 46

[표2-20]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사업 수혜자 현황 · 46

[표2-2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 현황 · 46

[표2-2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 수혜자 현황 · 46

[표2-23]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산 및 참여자수 추이(2014~2020) · 47

[표2-24] 불공정행위 유형별 신고건수(2021.07.31. 기준) · 47

[표2-25]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2018-2021) · 47

[표2-26] 예술인 설문 추가의견 결과 : 지원대상·예술활동증명 · 48

[표2-27] 예술인 설문 추가의견 결과 : 중앙·지역 · 49

[표2-28] 예술인 설문 추가의견 결과 : 지원체계·지원사업 · 49

[표3-1] 예술활동증명 제도 도입 및 변화 과정 · 53

[표3-2]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현황(2022.8.16. 03시 기준) · 67

[표3-3] 성별 예술활동증명 현황(2022.8.16. 03시 기준) · 67

[표3-4] 분야별 예술활동증명 현황(2022.8.16. 03시 기준) · 67

[표3-5] 월별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추이(2018년~2021년) · 70

[표3-6]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위촉 현황(2022년 5월 2일 현재) · 72

[표3-7] 예술활동증명 협력 협·단체 지정 및 추진 현황(2022년 6월 현재) · 74

[표3-8] 예술활동증명 협력 협·단체 심의 현황(2022년 6월 8일 기준) · 75

[표4-1]	그룹인터뷰 개요	· 83
[표4-2]	그룹인터뷰 스크립트 코딩 내용(주제 구분)	· 85
[표4-3]	그룹인터뷰 스크립트 코딩 내용(활용도 구분)	· 85
[표4-4]	그룹인터뷰 코딩 수치(전체)	· 86
[표4-5]	그룹인터뷰 코딩 수치(주제별)	· 86
[표4-6]	그룹인터뷰 코딩 수치(활용도별)	· 86
[표4-7]	그룹인터뷰 코딩 수치(코로나19 상황별)	· 86
[표4-8]	그룹인터뷰 쟁점별 코딩 내용 ; 속도	· 87
[표4-9]	그룹인터뷰 쟁점별 코딩 내용 ; 범위	· 89
[표4-10]	그룹인터뷰 쟁점별 코딩 내용 ; 절차	· 92
[표4-11]	그룹인터뷰 쟁점별 코딩 내용 ; 기준	· 95
[표4-12]	그룹인터뷰 쟁점별 코딩 내용 ; 지역	· 97
[표4-13]	그룹인터뷰 쟁점별 코딩 내용 ; 기타	· 99
[표4-14]	예술활동증명 설문조사 개요	· 104
[표4-15]	예술활동증명 설문 참여 예술인 분포	· 107
[표4-16]	예술활동증명 설문 참여 심의위원 분포	· 108
[표4-17]	예술활동증명 지역 확대를 위해 필요한 내용(지자체별 답변)	· 136

[표5-1]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 단기	· 141
[표5-2]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 중장기	· 142
[표5-3]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 현행유	· 142
[표5-4]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구분 관련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 143
[표5-5]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구분 관련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 144
[표5-6]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구분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인정기준 관련 운영지침 개정안	· 145
[표5-7]	예술활동증명 인정기준 관련 시행규칙 [별표1] 개정안 - 미술, 사진, 건축	· 151
[표5-8]	예술활동증명 인정기준 관련 시행규칙 [별표1] 개정안 - 음악, 국악, 영화, 및 연예	· 152
[표5-9]	2022년 지역축제 개최 계획	· 155
[표5-10]	예술활동증명 인정기준 관련 운영지침 개정안 - 미술, 사진, 건축	· 157
[표5-11]	예술활동증명 인정기준 관련 운영지침 개정안 - 연극	· 158
[표5-12]	예술활동증명 인정기준 관련 운영지침 개정안 - 영화, 연예	· 159
[표5-13]	예술활동증명 인정기준 관련 운영지침 개정안 - 음악, 국악	· 160
[표5-14]	2017~2021년 예술활동증명 신규신청 및 재신청(갱신) 예술인의 수	· 163
[표5-15]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관련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164
[표5-16]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관련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안	· 165
[표5-17]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관련 규정 비교	· 166
[표5-18]	심의위원회 관련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168
[표5-19]	연도별 예술활동증명 업무 투입인력 증감 현황	· 172
[표5-20]	2022년 예술활동증명 처리·잔여 추이 시뮬레이션	· 172
[표5-21]	예술활동증명 관련 부가 업무 및 수행 중인 타 업무 현황	· 173
[표5-22]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 처리 현황(평균)	· 174
[표5-23]	예술활동증명 민원 현황('21년)	· 174
[표5-24]	연령별 예술활동증명 현황(2022.8.15. 기준)	· 176
[표5-25]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 177
[표5-26]	예술활동증명 업무 위탁 근거 마련 관련 법률개정안	· 179

[표5-27]	예술활동증명 신청 관련 규정 개정 전후 비교	· 179
[표5-28]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데이터 활용 관련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 184
[표5-29]	예술활동증명 신청 가능 외국인 예술인	· 186
[표5-30]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관련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 187
[표5-31]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관련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 189
[표5-32]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관련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 189
[표5-33]	허위 신청 관련 규정 개정 전후	· 190

# 그림 목차

---

[그림1-1]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의 수 · 3

[그림2-1] 연구배경 흐름도 · 13

[그림2-2] 예술정책에서 예술인 정책의 위상 · 15

[그림2-3] 예술인의 취업 형태 · 16

[그림2-4]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 · 16

[그림2-5]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의 범위 · 20

[그림2-6] <예술인 복지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조항 · 29

[그림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원 마련 방안 · 29

[그림2-8] 예술활동증명 시스템 등록 절차 개념도 · 31

[그림2-9]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추진체계 · 31

[그림2-10]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 34

[그림2-11]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연령대 · 34

[그림2-12] 예술인 복지 - 창작간 선순환 구조의 구축의 도식화 · 43

[그림2-13]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2022~2026)의 비전 체계(안) · 44

[그림3-1] 연도별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완료 예술인의 수 · 68

[그림3-2]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의 장르별 증감 · 68

[그림3-3]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의 연령별 증감 · 69

[그림3-4] 신청분류에 따른 분포(2021년 예술활동증명 완료 69,197명 대상) · 69

[그림3-5]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 71

[그림3-6] 2021~2022년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전체) 성별, 연임 비율 · 72

[그림3-7] 2011~2022년 예술활동증명 분과별 심의위원 성별 분포 · 73

[그림3-8] 2011~2022년 예술활동증명 분과별 심의위원 연령대 분포(평균 55세) · 73

[그림3-9] 2011~2022년 예술활동증명 분과별 심의위원 지역별 분포 · 74

[그림3-10] 2021년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의 신청방법별 평균소요일 · 76

[그림3-11] 예술활동증명 심의과정(절차) 개선방안 ; 개념 · 78

[그림3-12] 예술활동증명 심의기준에 대한 예술인, 심의위원 설문조사 결과 · 79

[그림4-1] 그룹인터뷰 코딩 분류 · 85

[그림4-2] 예술활동증명 설문조사 내용 ; 예술인 · 104

[그림4-3] 예술활동증명 설문조사 내용 ; 심의위원 · 105

[그림4-4] 설문 참여 예술인의 예술분야별 분포 · 105

[그림4-5] 설문 참여 예술인의 연령대별 분포 · 106

[그림4-6] 설문 참여 예술인의 활동지역별 분포 · 106

[그림4-7] 예술활동증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예술인(1) · 109

[그림4-8] 예술활동증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예술인(2) · 110

[그림4-9] 예술활동증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1) · 110

[그림4-10] 예술활동증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2) · 111

[그림4-11] 예술활동증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예술인, 심의위원 비교 · 111

[그림4-12] 예술분야·예술활동유형 구분의 세분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12

[그림4-13]	예술활동증명 방법별 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예술인)	· 113
[그림4-14]	예술활동증명 방법별 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예술인 상세	· 113
[그림4-15]	예술활동증명 방법별 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14
[그림4-16]	예술활동증명 심의기준 문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14
[그림4-17]	예술활동증명 심의기준 문턱의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15
[그림4-18]	예술활동증명 수입인정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16
[그림4-19]	전문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예술인	· 117
[그림4-20]	전문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 118
[그림4-21]	전문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비교	· 118
[그림4-22]	예술활동증명에 참여한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19
[그림4-23]	재신청 절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19
[그림4-24]	심의위원 구성요소별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20
[그림4-25]	심의위원 구성요소별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예술인 상세	· 121
[그림4-26]	심의위원 구성의 성별 다양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21
[그림4-27]	민간 협·단체 소속 및 활동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22
[그림4-28]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예술인, 심의위원	· 122
[그림4-29]	예술활동증명 적정 소요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24
[그림4-30]	예술활동증명 적정 소요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연령대별	· 124
[그림4-31]	본인의 예술활동증명 소요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25
[그림4-32]	지각 정도에 따라 응답한 예술활동증명의 실제 소요 시간	· 125
[그림4-33]	예술활동증명 개선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26
[그림4-34]	예술활동증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1)	· 127
[그림4-35]	예술활동증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2)	· 127
[그림4-36]	예술분야·예술활동유형 세분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 128
[그림4-37]	예술활동증명 방법별 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 129
[그림4-38]	심의기준 문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 129
[그림4-39]	심의기준 문턱 기준의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 129
[그림4-40]	예술활동 수입인정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 130
[그림4-41]	전문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 131
[그림4-42]	심의위원 구성요소별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 132
[그림4-43]	심의를 지각된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 132
[그림4-44]	예술활동증명 적정 소요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 133

[그림5-1]	예술활동증명 장르 세분화에 대한 예술인, 심의위원 설문결과	· 147
[그림5-2]	심의 공정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예술인	· 156
[그림5-3]	예술활동증명 갱신 시 유효기간 연장 제안 ; 5+5+10	· 162
[그림5-4]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만료자 추이	· 162
[그림5-5]	예술활동증명 프로세스 바 개선(예시)	· 170
[그림5-6]	2021~2022년 예술활동증명 분과별 심의위원 성별 분포	· 175
[그림5-7]	2021~2022년 예술활동증명 분과별 심의위원 연령대 분포(평균 55세)	· 176
[그림5-8]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구성요소별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77
[그림5-9]	예술활동증명 개선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92





## I .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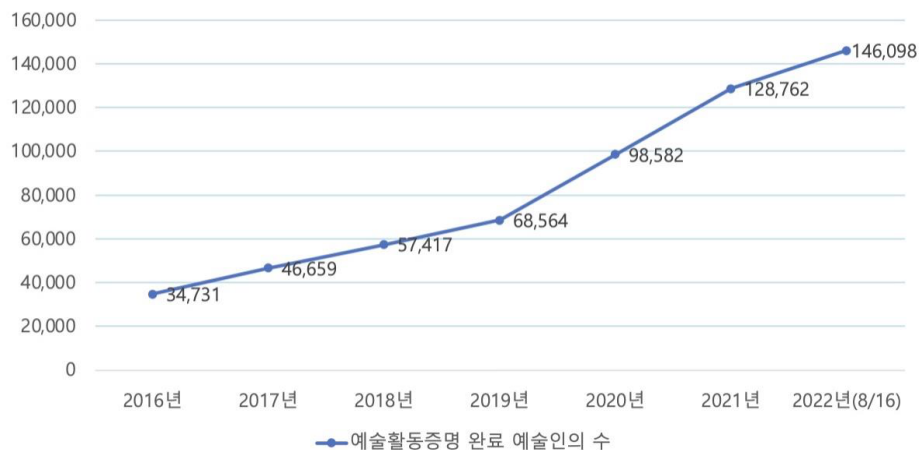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3. 추진과정 및 연구방법



## 1. 연구배경 및 목적

-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함<sup>1)</sup>.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선행제도로서 기능하고 있어 현장 예술인 및 지역 문화재단, 예술인지원기관 등의 관심이 높음.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의 수는, 2016년 이후 매년 약 1만 명 정도씩 늘어나다가 2020년 이후 완료 예술인의 수가 3배로 증가함.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약 3만 명이 늘어났으며 2022년 8월 16일(03시) 현재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의 수는 146,098명에 이르렀음.

[그림1-1]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의 수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의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선행제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임. 최근 지역 내 예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또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을 정할 때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준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2020년과 2021년의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의 폭발적인 증가는 코로나19 대유행 관련한 복지/지원사업들이 기본 대상을 예술인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으로 정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추측할 수 있음<sup>2)</sup>.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지원조건으로 예술활동증명이 활용되었으며,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예산이 크게 증액되어 선정 예술인의 수 또한 증가하였음.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1.jsp>

2) 이번 연구에서 진행한 예술인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2020년과 2021년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것이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재난지원금 등) 참여라는 단일한 이유로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발표 시점에 신청자 수가 급증한 것은 분명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예술인들 중 51.7%가 “예술인으로서의 인정을 위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다고 답을 했음.

- 예술인 복지정책의 확대와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예술인 지원사업의 실행 등과 함께 예술활동 증명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제도 개선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심의과정의 지연, 심의제도의 신뢰성 제고, 지역별·장르별·세대별 격차에 대한 진단, 예술활동 실적에 대한 세부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한 예술현장의 의견수렴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필요한 시점임.
-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제조건이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시행(2020.1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및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사업 시작(2021) 등 예술인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성장/고도화하는 가운데, 기존 예술인 복지정책의 선제조건이었던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접근의 수월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 운영의 엄밀성 또한 높여야 하는 이중적인 요구에 직면한 상황임.
- 이에 예술활동증명 방식(예술활동 실적, 수입 등)·세부 기준·유효기간·실적인정 범위 등에 대한 정밀한 연구,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그리고 법령과 지침 개정안을 도출하는 연구라는 목표를 두고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함.

#### 1-1. 변화된 예술환경에 부합하는 예술활동증명 방식(예술활동 실적, 수입 등)·세부 기준·유효기간·실적인정 범위 등에 대한 정밀한 연구

- 온라인 기반의 예술활동 증가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방식의 변화, 재전시·재상영 작품에 대한 장르별 특성 인정 등 예술현장에서 요구하는 예술활동증명 방식·세부 기준·유효기간·실적인정 범위 등에 대한 검토와 연구 진행
-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술활동 위축을 고려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의 개정(2021.12.27. 시행)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 실적증명을 위한 산정 기간이 늘어나기도 했음.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최근의 예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

#### 1-2. 심의절차를 포함한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 현장 예술인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임. 여기에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심의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불편한 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현행 심의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명성과 개방성’, ‘공정성’, ‘효율성’이라는 키워드를 충족할 수 있는 심의제도 개선방안 마련
  - 현행 심의제도는 장르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기 힘든 예외적인 사례들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위원회를 연간 1회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분과위원회별 심의위원의 수는 2015년까지 5명 이하로 유지되었으나, 2017년부터 분과별

심의신청 건수를 감안하여 최대 10명까지 둘 수 있게 하였고, 이후 2021년부터는 심의위원 인원 상한이 폐지되었음.

- 분과위원회별 온라인 심의횟수, 심의건수, 심의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 1-3.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 법령·지침 개정안 도출

- 연구를 통해 나온 개선방안 중 관계 법령·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 입안 및 관계 법령 등의 개정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법령 및 예규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1호~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2조의3,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문체부 예규) 등
-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 정의 및 예술인의 범위(<예술인 복지법> 적용 대상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제도 적용 대상 예술인의 분리)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 도출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화예술의 정의’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한 일정한 범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심의방식 및 기준 등). 하지만 당장에 장르 구분을 없애거나 기존과 180도 달라진 방식의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도 존재함.
  - 서면계약 문화가 완벽히 정착되지 않고 저작자나 실연자로서 성명 표시가 불명확한 예술계의 특성상 자신의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예술활동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도출함.
  - 예술인 복지제도와 연계 검토를 통한 소득 기준 완화 및 NFT나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예술활동 증가를 반영한 소득 기준 추가 여부를 검토함.
  - 예술인에 의한 예술활동의 결과물의 권리화(상표권·디자인권 등록 등)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유무 이외 별도의 기준 추가 여부를 검토함.
- 지자체에서 지역 내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별도의 예술인 지원사업의 대상 및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에 지역 예술인 활동증명 제도 도입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함.
  -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지역 이관과 관련하여 예술인 DB 관리(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예술인 복지사업 담당자들과의 간담회, 지역문화재단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연구진의 의견을 도출함.

## 2. 연구범위

-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제도 현황 및 개선 요구사항 분석, 현행 예술활동증명 방식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예술활동증명 장르별 세부 기준 분류의 재설정 검토, 장르별 실적인정 범위 타당성 분석 및 운영지침 개정 대안 제시, 최근 예술환경에 부합하는 장르별 세부 기준 및 증명 유효기간 대안 제시,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 특히 심의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사례 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 등 추진을 과업 범위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 2-1. 예술활동증명 제도 현황 및 개선 요구사항 분석

-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의의, 연혁, 제도 운영 현황 분석
- 현장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분석

### 2-2. 예술활동증명 방식

- 현행 예술활동증명 방식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 예술인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명 방식 대안 제시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 대안 제시

### 2-3. 예술활동증명 장르별 세부 기준 및 유효기간

- 현행 예술활동증명 장르별 세부 기준 및 증명 유효기간의 문제점 분석
- 최근 예술환경에 부합하는 장르별 세부 기준 및 증명 유효기간 대안 제시
- 장르별 세부 기준 분류의 재설정 검토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대안 제시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규정 체계 정비

#### 2-4. 예술활동증명 실적인정 범위

- 공모전, 온라인 개인매체(유튜브, 블로그 등), 공공지원 사업, 레지던시 프로그램, 대안공간 전시, 졸업작품, 동일 주최 연속 전시, 경연대회·축제·행사에서의 공연 등에 대한 장르별 실적인정 범위 타당성 분석, 제도화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대안 제시

#### 2-5.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

- 현행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한계 분석
-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 특히 심의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예술대학 졸업자의 예술활동증명 인센티브 방안 검토 및 제시
- 그 외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대안 제시

### 3. 추진과정 및 연구방법

#### 3-1. 예술활동증명 현황 자료 분석

- 기존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관련 정보 분석 : 장르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특징 도출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관련 메타데이터 정보 활용
-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의의, 연혁, 운영 현황 분석 : 예술활동증명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의 주요 변화에 대한 파악. 선행연구 분석 및 예술활동증명 관련 운영체계, 회의록 등 자료 활용

#### 3-2. 예술현장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그룹인터뷰 : 예술활동증명 사업담당자, 예술인, 심의위원 등 61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인터뷰 진행. 예술활동증명 제도 쟁점 중심의 사전 질문지를 통한 온라인 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일부 인터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표1-1] 그룹인터뷰 개요

기간	2022년 3월 25일 ~ 2022년 6월 13일
대상	사업담당자 그룹(5명),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그룹(31명), 관련 협·단체 그룹(5명),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그룹(5명), 심의위원 그룹(15명) 등 총 61명
방식	온라인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원로예술인, 장애예술인, 관련 협·단체 그룹은 오프라인으로 진행) 4~5인씩 그룹인터뷰 진행. 연구진 1~2명 참여. 2시간 내외 소요 예술활동증명 제도 관련 쟁점 중심의 사전 질문지 구성하여 진행

- 설문조사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및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 예술인 7,586명, 심의위원 57명이 설문에 참여함.

[표1-2]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심의위원
조사대상	2021.1.1. ~2022.7.17일까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60,765명	현(2022년) 심의위원 전체 113명
유효표본수	7,586명(참여율:12.5%)	57명(참여율:50.4%)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2.7.18~8.1.(15일 간)	2022.7.15~8.1.(18일 간)



- 간담회 :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관련 예술인 간담회(2회) 및 지자체 예술인 복지사업 담당자 간담회(1회) 개최

[표1-3] 간담회 개요

구분	내용
예술인 간담회(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2년 6월 22일(수) 14:00~16:00</li> <li>· 장소 :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대학로)</li> <li>· 내용 :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현황 및 쟁점에 대한 논의,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예술인 의견수렴</li> </ul>
예술인 간담회(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2년 8월 18일(목) 14:00~17:00</li> <li>· 장소 : KOTE 내면의 서재 (인사동)</li> <li>· 내용 : 예술활동증명 관련 예술인 설문조사 등 내용 공유,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초안) 발표 및 토론, 예술인 의견수렴</li> </ul>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2년 6월 24일(금) 13:00~16:00</li> <li>· 장소 : 아우름 비즈 (서울역 부근)</li> <li>· 내용 : 예술활동증명 제도 포함 지역 예술인 복지정책 관련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li> </ul>

### 3-3.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예술활동증명 방식 · 세부 기준 · 유효기간 · 실적인정 범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중 완료/미완료 데이터 분석, 변화된 예술환경 및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예술활동증명 방식의 가능성 타진
  - 현행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유효기간, 실적인정 범위 관련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 및 심의제도 개선방안 마련
  - 현행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 및 심의제도 관련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 운영 및 심의제도의 투명성,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 제시
  - 외국인 관련 기준에 대한 논의 및 대안 마련
  - 예술활동증명 갱신기간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
-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 법령·지침 개정안 마련
  - 개선방안 중 관계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마련 및 제안
  - 예술활동증명 실적인정 범위 관련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대안 제시



## Ⅱ . 선행연구 분석

---

1.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2. 예술인 범위 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연구
3.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연구
4. 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 1.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200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1. 연구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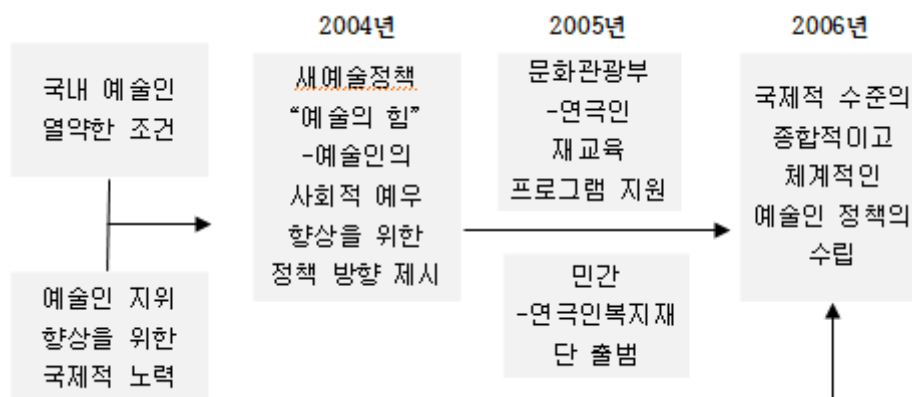
- ‘예술인 정책’의 정의
  - 보고서에서는 예술정책 안에서도 프로젝트 기반의 예술창작지원 부분과 예술시설의 건립 및 운영지원 부분은 제외하고, 인적 자원 즉 개인 예술인에 대한 공적 지원 부분을 ‘예술인 정책’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음.
- 예술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대상으로서의 ‘예술인’ 정의
  - 보고서는 예술인의 개념과 범주를, 새로운 작품을 창·제하는 ‘창작예술가’와 이미 창작된 작품을 연기·연주 등을 통해 재현하는 ‘실연예술가’로 나누고 있음.
- 예술인 정책에 대한 현황과 정책과제에 관한 외국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함.
- 우리나라의 ‘예술인 정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검토하고 있음.

### 1-2. 연구의 주요 내용

#### 1-2-1.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존에 단편적이고 구체성 없이 논의되던 ‘예술인 정책’을 체계화시키고, 위상을 확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연구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림2-1] 연구배경 흐름도



\*출처: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 정책 체계화를 위한 목적 설정

- 예술인의 안정적인 생활 조건 조성을 통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라는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개발 및 추진할 토대 마련
-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 수준 유지 및 국내 적용 모델 개발
- 정책 대상으로서의 예술인 개념 및 직업 특성 연구를 통해 정책 및 통계조사의 이론적·과학적 토대 마련

1-2-2. 정책 개발을 위한 관련 전문가 워크숍 개최

-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예술인 정책 해외 사례, 예술인권익대변조직의 현황과 전망, 예술인의 법적지위와 고용환경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3회의 워크숍을 개최함.

[표2-1] 예술인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현황

구분	개요
제1차 전문가 워크숍 (2006년 6월 29일)	주제: 예술인 정책 해외 사례와 그 시사점 1. 유네스코의 예술인 지위에 관한 정책과 그 시사점 2. 캐나다 ‘예술인 지위법’ 사례와 그 시사점 3. 프랑스 예술인 지위정책과 시사점
제2차 전문가 워크숍 (2006년 8월 22일)	주제: 예술인 권익대변조직의 현황과 전망 1. 국내 예술단체 운영 실태와 예술인 권익단체로서의 전망 2. 외국의 예술인 권익 대변 조직의 사례와 우리 사회에의 적용 가능성 3. 예술단노조의 운영 현황과 과제 4. 사례발표: 한국방송영화연극공연예술인노동조합의 운영사
제3차 전문가 워크숍 (2006년 9월 29일)	주제: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1. 노동법과 예술인의 법적 지위 2. 고용보험제도와 예술인 3. 노동부의 직업훈련정책과 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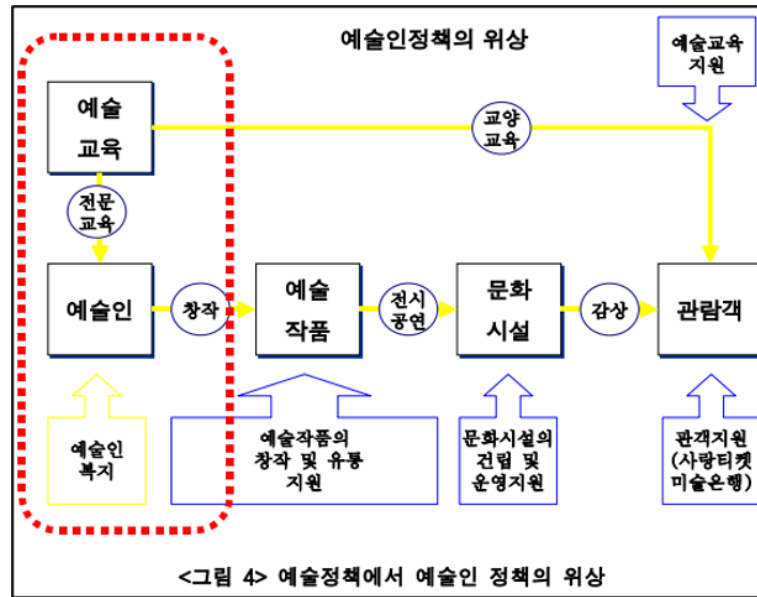
\*출처: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표 재구성)

1-2-3. 예술인 정책이 지닌 위상 정립

○ 예술인 정책 현황 분석

- 예술인 대상 지원정책은 아직 개념 정립조차 미약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그림을 도식화한 자료로 제시

[그림2-2] 예술정책에서 예술인 정책의 위상



\*출처: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 1-2-4.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예술인 정책 수립 근거 마련

○ ‘예술인의 수입 현황’을 통해 예술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분석

- 예술활동 이외의 수입까지 포함한 예술인 개인 수입은 1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4분의 1인 25.6%로 나타났음을 확인하며, 대부분 예술인이 예술활동 이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다고 분석함.
- 또한 적지 않은 예술인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

[표2-2] 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없는 예술인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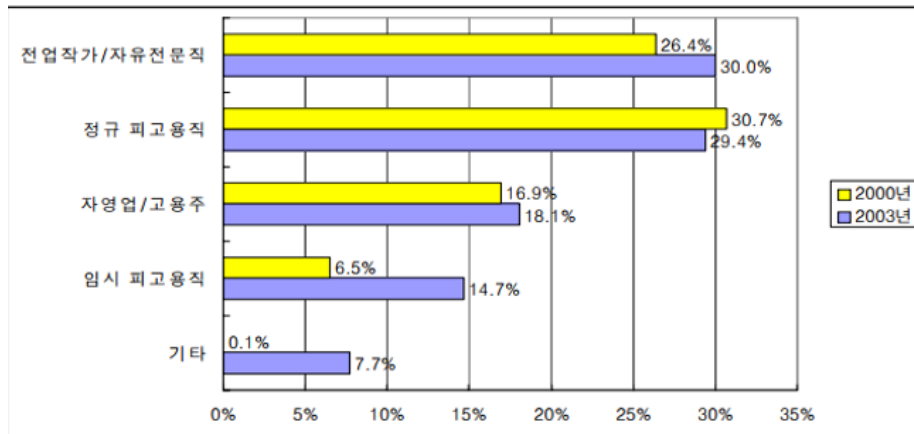
구분	2003년 조사(%)	2000년 조사(%)
전체	30.9	18.1
문학	52.0	43.1
미술	4.0	27.6
사진	56.5	58.6
건축	28.0	11.3
국악	6.0	4.5
음악	31.0	5.8
연극	31.1	7.8
무용	43.5	2.0
영화	47.2	6.5
연예	9.4	10.3

\*출처: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 ‘예술인의 취업 형태’ 데이터로 예술인의 고용상황 분석

- 부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예술인의 직업 특성과 취약한 생활 기반 상황에 대해 ‘예술인 취업 형태’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
- 예술인 직업 현황 중 교육직 종사자는 전체의 30%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비교적 양호한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설명

[그림2-3] 예술인의 취업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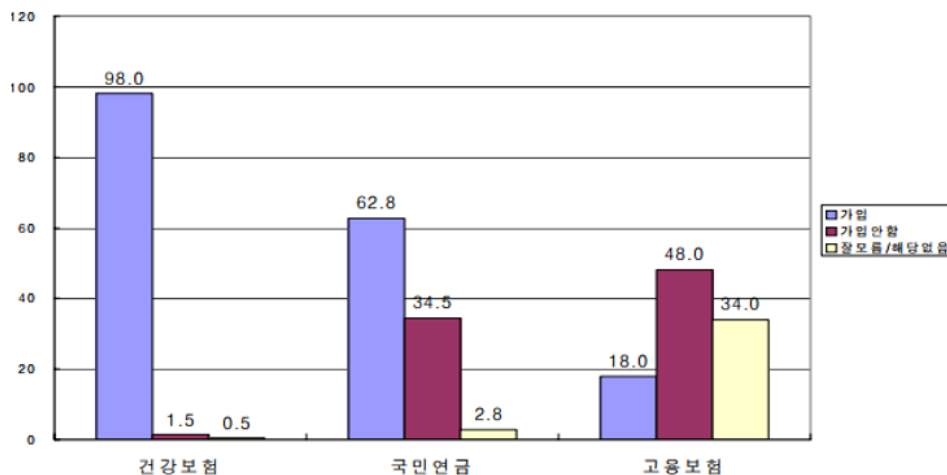


\*출처: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 ‘사회보험 가입률’ 데이터를 통해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현황 분석

- 가입률을 확인한 결과 예술인들은 의료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

[그림2-4]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



\*출처: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 1-2-5. 국내 예술인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첫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재인식에 기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필요
- 둘째, 자유로운 창작의 시간을 최대한 허용하면서 일정 수준의 생활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예술인의 라이프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
- 셋째, 인적 자원 정책의 관점에서 출발하되 예술인의 커리어 주기를 고려한 정책 개발 필요

#### 1-2-6. ‘예술인 정책’의 하위영역 분류 및 주요 추진과제 제시

- 하위 영역 분류 제시
  - 첫째, 예술인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영역
  - 둘째, 예술인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영역
  - 셋째,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영역
  - 넷째,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영역

[표2-3] 예술인 정책의 영역과 과제

영역	주요 추진과제
1. 예술인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1-1. 예술인 관련 통계 조사의 개선
	1-2. 예술인 정책의 지속적 연구
	1-3. 예술인 정책 관련 국제교류 활성화
2. 예술인의 복지환경 개선	2-1.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예술인 복지 강화
	2-2. 예술인 고용지위 및 고용환경의 개선
	2-3. 예술인 권익대변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3-1.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
	3-2. 예술인 재교육 및 훈련의 지원
	3-3. 예술인 창작과 관련한 세제 지원
	3-4. 신진예술인에 대한 지원
	3-5. 예술인 내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예술인 사회적 지위 향상	4-1. 예술인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 정비
	4-2. 예술인의 사회적 기여 활성화 지원
	4-3. 예술인 현장 사업의 개선

\*출처: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 1-3. 시사점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적지 않은 예술인이 예술활동 이외 활동으로 수입을 얻고 있고, 예술 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조사대상 전체의 4분의 1인 25.6%로 나타남.
- 이 같은 분석 결과는 현재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수입증명 기준을 선택하는 예술인이 많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추정해볼 수 있음.

## 2. 예술인 범위 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연구 (2012, 문화체육관광부)

### 2-1. 연구의 특징

- 연구는 <예술인 복지법>(2011년 제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추진. 또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동법 제8조와 제15조에 의하여 규정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예술인 복지법> 시행 관련 동법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예술인에 대한 기준과 범위(안) 마련이 필요해짐.
- 연구범위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정의에 따른 “예술인”이 대상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설정. 시간적으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1년까지의 10년간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2-2. 연구의 주요 내용

#### 2-2-1. 예술인의 정의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예술인의 정의’에 따라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한 자”란 ‘직업’으로서 예술활동을 전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이란 수입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말하며, 예술 창조 자체를 목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전업예술인도 존재한다고 설명. 그렇게 때문에 단순히 수입의 양만을 기준으로 ‘업으로서 예술활동’의 한계를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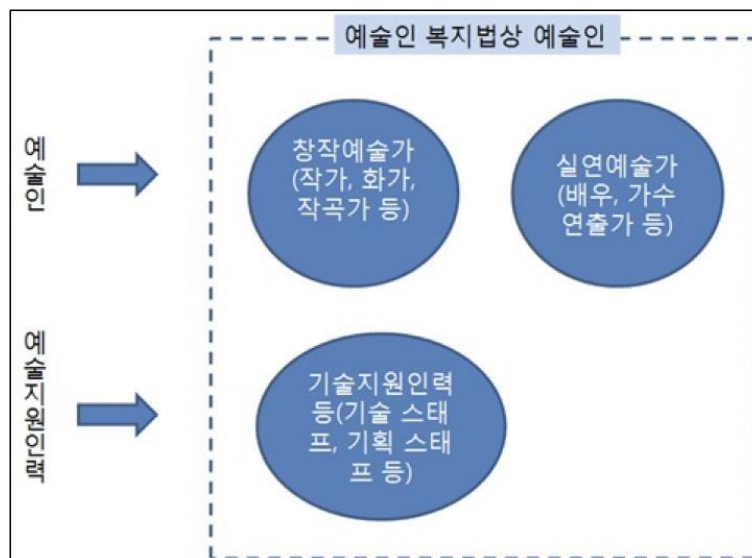
#### 2-2-2. 예술인의 범위

- 활동 분야에 따른 ‘예술인’의 범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예술”의 12개 분야 가운데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과 결합되는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의 10개 분야라고 설명함. 그러나 정해진 10개 분야가 명료하지 않다고 분석함.
-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의 ‘응용미술’은 공예와 디자인 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아 공예와 디자인이 예술활동의 영역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함.
- 또한 국악과 음악이 별개 장르로 구분된 것을 보았을 때 ‘음악=양악’이라고 추정하나, 용어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분석함. 이러한 개념들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공예와 디자인에 해당하는 하위 분야가 모두 ‘예술’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은 활동 특성에 따른 분류라고 말하며, ‘등’에 해당하는 분야를 직접적인 예술활동 참여자는 아니지만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규정하며 기획스태프, 예술교육가 등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등’을 통해 기획·경영 스태프도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함.
- 예술교육에 종사하는 ‘예술교육 인력’의 경우 <예술인 복지법>상 별도 규정이 없고,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현재 법 체계로 이 그룹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해석
- 그러나 창작예술인·실연예술인이 본인의 예술활동에 종사하면서 이중적으로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창작 및 실연’의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

[그림2-5]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의 범위



\*출처: 예술인 범위 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예술인 범위의 근거 조항으로 삼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으로 ‘예술’의 범위를 명료화할 필요성을 강조
- ‘한국표준직업분류 2007’을 통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범위에 포함되는 세부 직업을 표시함.

[표2-4] '한국표준직업분류 2007'을 활용한 예술인 직업 예시

구분	직업 그룹	표준직업분류(세세분류)	예시 직업
창작예술가	작가	방송작가(28111), 작가 및 평론가(28112), 그 외 작가 및 관련 전문가(28119), 번역가(28120)	시인, 소설가, 평론가, 수필가, 극작가, 드라마 작가, 구성작가, 시나리오 작가, 작사가, 코미디 작가, 문학 번역가, 영상 번역가, 게임 시나리오 작가, 만화 스토리 작가
	화가 및 조각가	화가(28411), 조각가(28412), 서예가(28413), 만화가(28431), 만화영화작가(28432)	화가, 조각가, 서예가, 단청원, 탕화원, 회화 복원가, 조각 식각가, 식각사, 만화가, 애니메이터, 미디어 아티스트
	사진가	사진작가(28421), 사진가(28423)	사진작가, 사진가 * 사진기자 제외
	건축가	건축가(23111)	건축가, 건축사
	디자이너	자동차디자이너(28511), 가구디자이너(28512), 그 외 제품 디자이너(28519), 직물디자이너(28521), 의상디자이너(28522), 액세서리디자이너(28522),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28524), 인테리어디자이너(28531), 디스플레이어(28532),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28533), 광고디자이너(28541), 포장디자이너(28542), 북 디자이너(28543), 삽화가(28544), 색채 전문가(28545), 활자디자이너(28546), 웹디자이너(28551), 멀티미디어 디자이너(28522), 게임그래픽 디자이너(28553)	* 디자이너 안에서 범위 재설정 문제는 추후 검토
	공예가	도자기 공예원(79111), 조화 공예원(79112), 목 공예원(79113), 석 공예원(79114), 양초 공예원(79115), 종이 공예원(79116), 그 외 공예원(79119), 귀금속 세공원(79121), 보석 세공원(79122)	*공예가 안에서 범위 재설정 문제는 추후 검토
	작곡가	작곡가 및 편곡가(28452)	작곡가, 편곡가, 관현악 편곡가, 음악 각색가
	안무가	무용가(28471)	안무가

실연예술가	무용수	안무가(28472)	발레 각색가, 무용수, 발레무용수, 대중 무용수, 백댄서
	연주가 및 성악가	연주가(28453), 가수(28461), 성악가(28462)	연주가, 목관악기 연주가, 타악기 연주가, 금관악기 연주가, 건반악기 연주가, 현악기 연주가, 성악가, 가수, 합창단원
	감독 및 지휘자	감독 및 연출가(28311), 지휘자(28451)	연극 연출가, 영화 감독, 방송 프로듀서, 공연장 예술감독, 관현악단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
	배우	배우(28321), 개그맨 및 코미디언(28322), 성우(28324)	연극배우, 탤런트, 영화배우, 성우, 코미디언, 개그맨, 만담가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	국악인(28441), 국악 연주가(28442), 국악 작곡 및 편곡가(28443), 전통예능인(28444)	국악 작곡가, 국악 편곡가, 국악인, 소리꾼, 국악 연주가, 전통 연극인, 전통 무용인 * 전통무예인은 제외
	기타 실연예술가	마술사(28991), 그 외 문화.예술 관련 종사원(28999), 모델(28323), 그 외 배우 및 모델(28329), 보조 연기자(28394)	곡예사, 마술사, 비보이, 모델, 보조연기자
기술지원 등 예술지원인력	기획 스태프	이벤트전문가(27352), 행사 전시 기획자(27352), 감정사(27412), 예술품 중개인 및 경매사(27443), 큐레이터(28211), 연예인 매니저(28912)	공연 대리인, 전시기획자, 미술품 감정사, 예술품 중개인, 예술품 경매사, 화랑 관리인, 박물관 관리인, 큐레이터,
	기술 스태프	기술감독(28312), 촬영기사(28340), 음향 및 녹음기사(28350), 영상 녹화 및 편집기사(28360), 조명기사(28371), 영상기사(28372)	편집감독, 조명감독, 촬영감독, 음향감독, 무대감독, 촬영기사, 영상기사, 조명탁조정원, 녹화기사, 편집기사
	그 외의 예술 스태프	무대의상 관리원(28391), 소품 관리원(28392), 방송.영화연출 보조원(28393), 특수분장사(42242), 분장사(42243), 입장권 판매원(52123)	무대의상관리자, 소품담당자, 연출보조원, 분장사, 무대가발 담당자, 특수분장사, 입장권 판매원

\*출처: 예술인 범위 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2-2-3. 해외 사례를 통한 예술활동증명 기준 모색

- 핀란드에서 예술가의 지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리 카투넨(Sari Karttunen)의 ‘예술가를 정의하는 문제에 보편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주장을 인용
  - 가리 카투넨은 “예술가를 정의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심지어는 정치적이기조차 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선택된 정의가 가져올 치우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함(Sari Karttunen, 1998:16-17).

- 또한 프라이와 포머레네(Frey and Pommerehne)의 발표자료를 ‘직업으로서 예술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정의로 소개

- ① 예술 활동에 투입한 ‘시간’의 양(A mount of time devoted to artistic work)
- ② 예술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Earnings from artistic work)
- ③ 일반 대중으로부터 얻은 예술인으로서의 ‘평판’(Reputation among the general public)
- ④ 다른 예술인들에 의한 인정(Recognition among other artists)
- ⑤ 생산된 예술 작품의 ‘질적 수준’(Quality of artistic work)
- ⑥ 전문 예술인 단체나 협회 등의 구성원 자격(Membership in a professional artists’ group or association)
- ⑦ 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자격(특히 교육 관련 자격증) [(Professional qualifications (especially educational credentials)]
- ⑧ 스스로 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평가’(Subjective self-identification as an artist)(Bruno S. Frey and Werner W. Pommerehne, 1989:146-147)

- 이파카(IFACC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에서 조사한 예술정책 보고서 <세금 및 급여 관련 예술인 정의>를 특정한 용도나 목적 아래 시도된 실용적인 예술인 정의의 사례로 소개
  - 이파카 보고서를 통해 세제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그 적용 대상의 규정으로서의 예술인 정의는 국가마다 너무나 다름을 전제한다고 설명함.

- ① 멤버십을 통한 정의(Definition through membership) : 공인된 예술인 협회(예, 전문예술가협회)의 멤버십을 통해 예술인을 정의하는 경우. 1992년 발효된 캐나다의 ‘예술인 지위 법’(제18조)에서 독립 예술인의 직업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는 예술인협회에의 가입 여부이다.
- ② 위원회에 의한 정의(Definition by committee) : 전문가나 동료 예술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예술인으로서의 지위를 결정하는 경우. 네덜란드에서는 독립적인 자문기구가 ‘예술인의 소득 규정에 관한 법’을 적용 받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에 관해 결정하며, 멕시코에서는 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현금 대신 예술 작품으로 세금을 지불하는 제도에 적용되는 예술인의 자격을 결정하고 있다.
- ③ 당국에 의한 정의(Definition by authority) : 세무 당국이 세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예술인으로서의 자격을 결정하는 경우. 아일랜드의 예술인 면세 제도에서는 세무당국이 예술인의 자격을 결정한다.
- ④ 예술적 산출물(작품)에 의한 정의(Definition by association with artistic output) : 예술 작품, 저작물 등 예술적 활동의 산출물에 의해 예술인을 정의하는 경우. 이 경우 예술인이란 예술(예술작품, 저작물 등)을 만들어 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의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연예술인보다는 창작예술인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 ⑤ 예술 활동의 본성에 의한 정의(Definition by the nature of arts activity) : 예술인에 의해 수행되는 예술적 활동이 ‘비즈니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되었을 때, 직업적인 예술가로 간주하는 경우. 이 경우 중요한 판단은 예술 활동의 목적이 영리 획득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는지 하는 것들이다.

#### 2-2-4.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의 기준 제시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정의의 특징은 '업(業)으로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한다는 것이며, 업(業)이란 '생업'의 의미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
  - 그러나 예술인은 '전문직'의 특성을 가지나 제도화된 자격관리시스템이 없고, 존재할 수도 없어 직업 집단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설명
- 예술활동의 특성상 수입 획득을 위해 투여한 시간의 양, 수입의 양의 기준을 일괄 적용한 객관적 측정이 어렵다고 보고 있음.
- 때문에 예술활동증명 방법은 다양한 요소의 기준점을 제시하여 그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모두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의 범위는, 예술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예술인을 타 직업 집단과 구분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설명함.
- '예술활동 수입' 기준의 경우 예술인의 수입 가운데 '예술 활동의 수입'을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가를 관건으로 보고 있음. 예술인의 수입을 '예술활동 수입', '예술관련 수입', '비예술 수입'으로 구분함.

$\text{예술가 개인 수입} = \text{예술활동 수입} + \text{예술관련 수입} + \text{비예술 수입}$
--

[표2-5] 예술인의 소득 분류(예시)

구분		예술 활동 수입	예술 관련 수입	비예술 수입
창작예술가	작가	인세, 원고료, 지원금, 상금	강의사례비, 교습사례비, 심사사례비 등	예술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
	화가	작품판매금, 전시참여사례금, 전속계약금, 지원금, 상금	강의사례비, 심사사례비 등	예술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
	작곡가	작곡료, 음원사용료, 전속계약금, 지원금, 상금	강의사례비, 심사사례비 등	예술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
실연예술가	무용가	전속계약금, 출연료, 지원금, 상금	강의사례비, 교습비, 심사사례비 등	예술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
	배우	전속계약금, 출연료, 지원금, 상금	강의사례비, 교습비, 심사사례비 등	예술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
	가수	전속계약금, 출연료, 음반 및 음원판매료, 지원금, 상금	강의사례비, 교습비, 심사사례비 등	예술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
	연주가	공연비, 전속계약금, 음반판매, 지원금, 상금	강의사례비, 교습비, 심사사례비 등	예술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

\*출처: 예술인 범위 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국세청 소득신고로 가능한 예술활동수입의 증빙 방법 추정
  - 보통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이 어렵지 않음. 그러나 예술인의 예술 소득과 비예술 소득을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인정이 가능한 예시로, 예술활동 참여 관계가 명기된 프로그램 자료를 제출하거나 업종 분류상 전문예술단체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부를 예술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함.
  - 예술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사업체의 업종코드로 아래 표를 제시

[표2-6] 예술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사업체 업종코드

코드번호	종목(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92130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및 공급업	· 유·무선 방송용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거나, 직접 제작 또는 구입한 프로그램을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0.1	32.4
921402	악극단	· 쇼, 무용 등 공연단체(외국군 상대 흥행활동 포함)	94.3	36.2
921403	극단		96.7	36.2
921502	일반영화 제작	· 일반 영화 제작 - 셀룰로이드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불문하고, 공중송행, 교육, 훈련, 시사뉴스, 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 또는 방영할 일반영화(광고용 제외)의 제작(만화영화의 제작도 포함) - 극영화, 문화영화, 영화관상영용의 비디오필름 제작, 복제	89.0	27.8

\*출처: 예술인 범위 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문예진흥기금 및 국고 수혜 실적에 의한 수입 증빙
  - 문예진흥기금 또는 국고 보조를 받는 경우 이 자체로 개인 예술가의 소득이 되며 전액 예술활동 수입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수혜 실적을 개인이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설명
  - 그러나 단체 차원에서 받은 보조금은 개인별 수혜 실적을 따로 확인할 수 없음.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과 국고보조금 지급 시 몇 가지 행정절차를 보완하고, DB 시스템을 개선하면 잘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예술활동 수입에 의한 증명 기준 제안] 수입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관건으로 설명. 수입이 불규칙하고 낮다는 점에서 ‘예술인’과 유사성을 갖는 ‘농어업인’ 사례를 참고하여 준용할 것을 제안
  - 농어업인 사례를 준용할 경우 “연간 예술활동 수입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그러나 농어업인의 특성과 다른 점은, 예술인의 경우는 연 단위로 보아도 불규칙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는 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이 점을 고려하여 ‘연간수입 120만 원’을 ‘최근 3년간 수입 36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
- [예술활동 실적에 의한 증명 기준 제안] 예술인들은 일반적으로 수입을 얻기 위해 예술활동을 하지 않거나 수입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없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수입만으로 예술활동

여부를 증명하면 수입활동이 전혀 없지만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법>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분석하고 있음.

- ‘예술활동 실적’을 예술인 판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공중에게 공개된 결과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 예를 들어 “어느 화가가 자신의 작업실에서 ‘작품’을 만들기만 하고 ‘전시’를 하지 않았거나 시인이 자신의 노트나 컴퓨터에 작품을 창작하여 저장하여 놓은 경우에는 공개된 ‘예술 활동 실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공개된 ‘예술활동 실적’이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표(公表)’의 개념을 활용해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으로 규정한다고 설명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기준은 ‘경력자’가 아닌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함. 이 때문에 예술활동 실적 또한 최소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함.
- 공적 재원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소정의 심사와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객관적 판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원받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증빙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하나의 공연에 참여한 다수의 인력은 별도의 증빙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 현재 공적 지원체계 안에서는 개별 인력의 참여 여부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 [자격에 의한 증명 기준 제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자격을 관리하는 제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 자격에 의한 실적증명 방식은 추후 더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한편 예술학과를 졸업했다는 것만으로 직업으로서 ‘예술인’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음.

## 2-2-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분석

- 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재단의 권한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지원이 당도록 관리해야 함을 강조
- 국가가 지원하고 설립한 재단에 대해 정부의 책임성을 가져야 하고, 민간에 의해 운영되어온 복지사업과는 차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
- 또한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중심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 확충의 필요성 제시.
- 경상비 추계의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례를 참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직원 1인당 인건비를 약 5,000만 원, 운영비는 4,100만 원으로 책정하였음을 설명
  - 2013년~2022년까지 10년간 경상비를 계산한 결과 총 355억 원 정도로 추계 예상
  - 2015년~2022년까지의 인건비는 최소 인원인 49명의 연간 인건비 24.5억 원을 적용하여 예상
  - 소요 예산 재정 가운데 경상비는 전액 국고 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표2-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예산 현황(2012년)

구분	인원	인건비	운영비
금액	26	1,322	1,070

\*인원은 2012년 7월 기준

\*출처: 예술인 범위 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표2-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기별 경상비 추계

구 분	2013-2015	2016-2018	2019-2022	계
인건비	3,150	3,150	9,800	16,100
운영비	2,580	2,580	8,040	13,200
사무실임차료	958	958	2,330	4,246
사무실 인테리어비	100	0	100	200
전산장비 구입비	1,000	0	0	1,000
심의위원회비	360	180	240	780
계	8,148	6,868	20,510	35,526

\*출처: 예술인 범위 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2-2-6. 전문가 자문 및 설문,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 추진

○ 연구 자문회의 8회 추진

[표2-9] 연구 자문회의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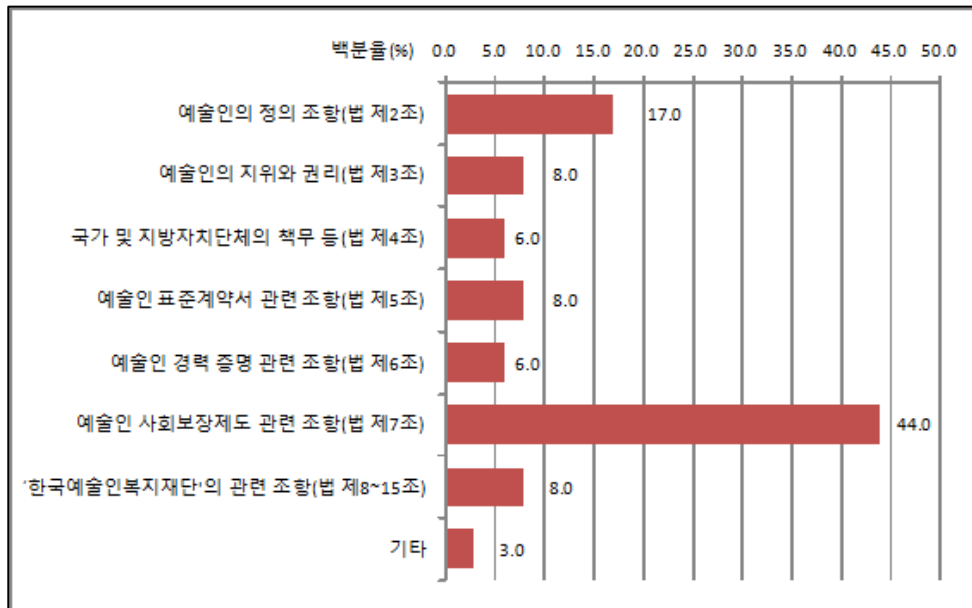
구분	일시	장소	참석
1	2012.07.30 14:00~16:00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7층 회의실	최인석(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수석), 김윤기(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	2012.08.16 10:00~11:30	영화진흥위원회 회의실	이경철(영화진흥위원회 회계팀장)
3	2012.09.03 10:00~12:00	마포디자인취업센터	김능현(건축가협회 이사), 강홍구(사진작가), 신제남(한국전업미술가협회), 김윤희(민족미술인협회)
4	2012.09.03 14:00~16:00	〃	박유승(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 김정렬(한국연주자협회 사무국장), 김태호(방송코미디협회 총장)
5	2012.09.05 10:00~12:00	예술가의집	김석진(한국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계창(한국뮤지컬협회 이사), 김정희(한국무용협회 사무국장)
6	2012.09.05 14:00~16:00	〃	김현수(정가악회 회원), 이희병(한국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 김현기(고래야 대표),
7	2012.09.10 14:00~16:00	마포디자인취업센터	문제갑(한예조 정책의장, 탈런트협회정책의장), 김원찬(가수협회) *
8	2012.09.17 16:00~17: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산실	전병호(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팀장)

출처: 예술인 범위 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전문가 설문 진행

- 예술정책 전문가, 기획인력, 문화재단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 <예술인 복지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조항으로 ‘사회보장제도 관련’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술인의 정의’에 대한 답변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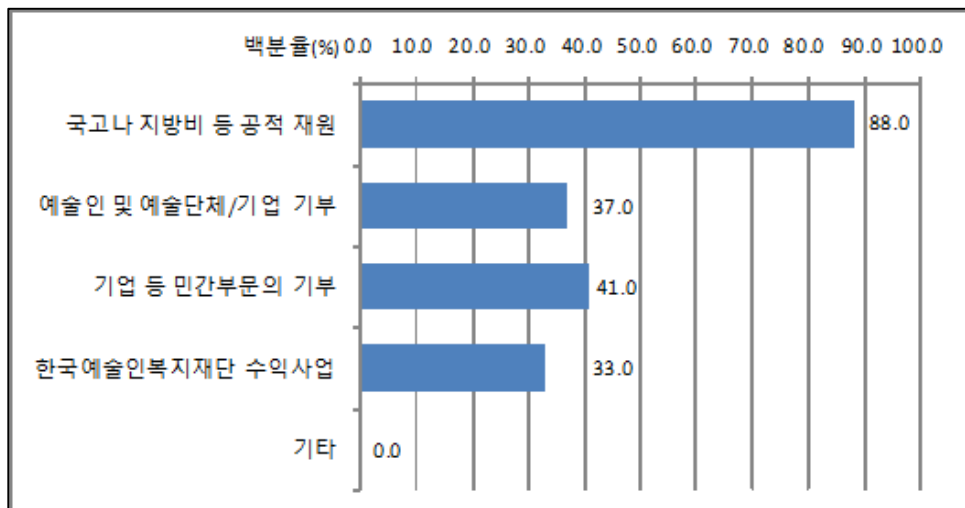
[그림2-6] <예술인 복지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조항



\*출처: 예술인 범위 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항목에서 ‘국고나 지방비 등 공적 재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원 마련 방안



\*출처: 예술인 범위 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바라는 점을 개방형으로 물은 결과 ‘재원 마련에 있어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원 투여가 절실히 요구됨’, ‘예술장르 간 충돌이 우려됨’, ‘지역거점이 있어야 함’ 등의 답변이 있었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의견도 다수 확인됨.

## 2-2-7. 예술인 DB 시스템

- 예술인 시스템은 개방형으로 전체 서버구축 기간 1년 소요, 초기 구축 사업비용 15억 원이 투입됨.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을 선 구축한 뒤 예술인경력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오픈했다고 밝힘. 초기에는 예술인 경력 관리로 시작한 뒤, 향후 축적된 자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예술인 전문 DB로 개발하여 활용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음.
-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의 목적은 ‘예술인 증명이 아닌 최소한의 예술활동을 통해 예술인임을 확인’해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
- 한국노동연구원이 공연·무대예술 분야 예술인을 조사한 결과 93.5%가 경력증빙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있다’고 응답. 동 조사에서 해당 자료를 경력 증빙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70.8%가 ‘그렇다’고 답변. 예술인에게 경력 증명이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표2-10] 공연·무대 예술인 대상 경력증빙자료의 보관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보관	174	93.5
미보관	12	6.5
합계	186	100.0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예술인 경력증명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표2-11] 공연·무대 예술인 대상 경력증빙자료의 사용 경험

구분	빈도	퍼센트
있음	126	70.8
없음	52	29.2
합계	17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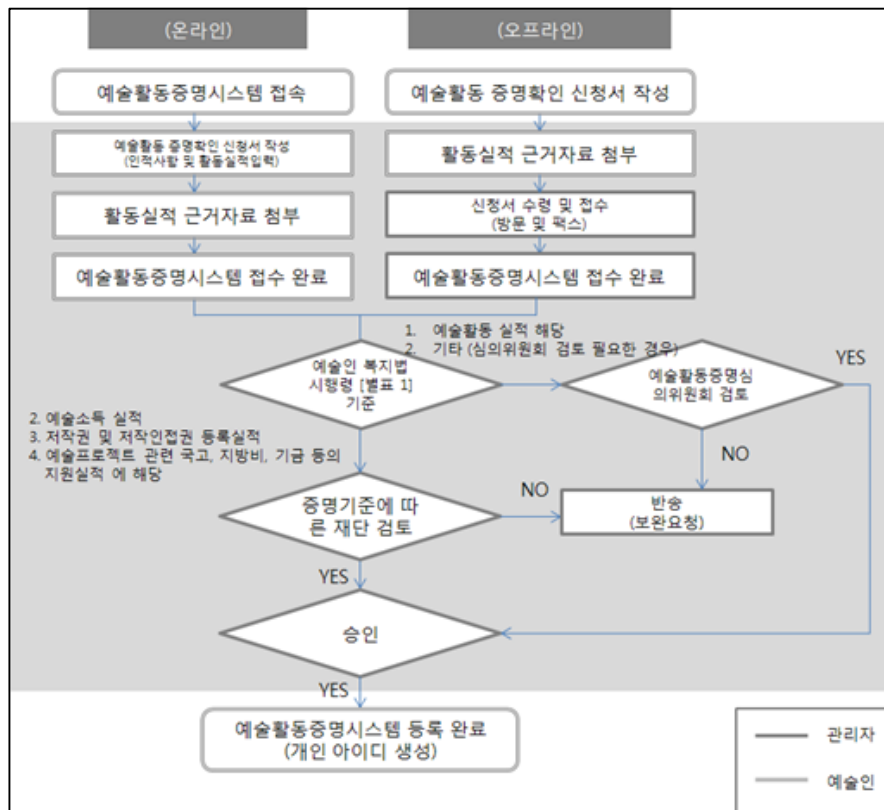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예술인 경력증명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2-2-8. 예술활동증명 시스템 구성 및 운영체계 제시

- 예술프로젝트 관련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지원 실적을 입력하는 란에 인정되는 공공지원금(중앙문예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예기금(지역문화재단), 국고보조금(문화관광부 및 소속기관), 지자체보조금(광역자치단체), 지자체보조금(기초자치단체), 기타국고 및 공공기관지원금, 해외기관 및 단체지원금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 민간재원의 경우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

- 이와 함께 ‘타 시스템 연계 운영방안’도 제시하고 있음.
- 산재가입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통합토탈서비스시스템’
- 국고지원 수혜실적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card.mcst.go.kr)’
- 저작권 실적 확인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DB(http://db.copyright.or.kr)’
- 문예진흥기금 수혜실적 확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artskorea.or.kr)’

[그림2-8] 예술활동증명 시스템 등록 절차 개념도



\*출처: 예술인 범위 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그림2-9]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추진체계



○ 예술인 DB 시스템 추진 계획 설계

[표2-12] 로드맵(안)

구분	기간	환경조성기	확산기		고도화기	
		2012	2013	2014	2015	2016
ISP발주	3~6개월					
홈페이지 구축	3개월					
DB서버구축	12개월					
재단홍보 및 가입 독려	6개월					
예술활동증명시스템구축						
예술인경력시스템구축	계속					
관련 DB와 연동	계속					
시스템인프라개선, 보안	계속					

\*출처: 예술인 범위 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2-3. 시사점

- 보고서 결론 말미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과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 재원 확보를 제시하고 있음. 해당 보고서에서 제시한 경상비는 10년 전 추계로서, 변화한 환경과 조건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합리적 설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또한 초기 설립 단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참조하여 짜였기 때문에 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맞는 예산 구조를 진단하고 재설계해야 함.
- 소개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분석 내용을 통해 ‘예술인’과 ‘예술활동’은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특성을 가졌다고 설명하며, 각각의 논지마다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현재 예술활동증명에서는 예술교육활동을 예술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창작예술인, 실연예술인이 본인의 예술활동에 종사하면서 이중적으로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창작’ 및 ‘실연’의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
- ‘자격에 의한 증명 제시’ 부분에서는 예술학과를 졸업했다는 것만으로는 직업으로서의 ‘예술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교육과정 이수자가 ‘업’으로서의 예술 활동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석.



### 3.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3-1. 연구의 특징

- 보고서가 정책과제 도출 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둔 지점은,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여러 예술인 복지정책의 사전 제도로서 갖는 위상을 고려하여 기존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장 이해관계자들에게 야기되는 불신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설명함.

#### 3-2. 연구의 주요 내용

##### 3-2-1.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배경

- 예술활동증명 제도 전개 과정 및 특징
  -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술인 정책이 단순 생활지원 및 활동지원을 넘어서 창작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로 확대되었고,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광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재단이 정책 지원대상을 정할 때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준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대한 현장 예술인, 관련 기관의 관심도가 높아짐을 설명함.
- 2012년 제도의 특기할만한 변화는 두루뭉술했던 기존 ‘예술인’의 범위를 정교화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기준을 보완했다고 보고 있음. 또한 2014년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상의 가장 큰 변화로 제도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장르별 분과심의위원회의 체계적 심의과정을 꼽으며 기존 심의과정에 대한 불공정 시비, 장르별 특수성을 심의위원회 체계화를 통해 보완하고자 했다고 설명함.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개선안의 과제들이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음.

##### 3-2-2. 제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사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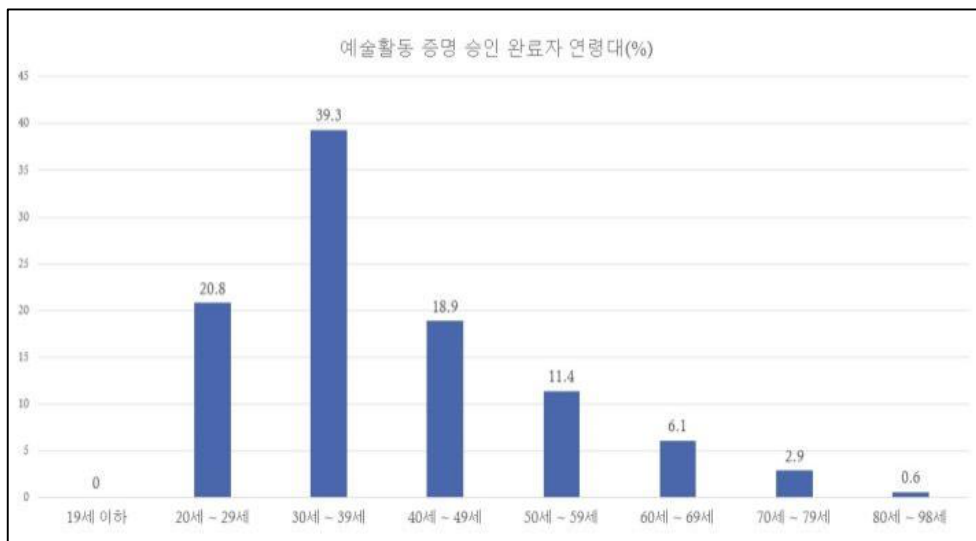
- 예술활동증명 2012년~2018년 데이터를 통한 시사점
  - 해당 데이터에서 발견한 시사점으로, 예술활동증명 제도에서 장르별·지역별·세대별 격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 창작 여건이 상대적으로 갖춰져 있고 예술인과 공동 작업 형태로 창작활동을 하는 장르 외 예술인들도 제도에 견인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을 이야기함.
  - 또한 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분권체계 강화와 일정 경력 이상의 활동 중단 예술인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도 함께 시사점으로 도출함.

[그림2-10]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출처: 예술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그림2-11]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연령대



\*출처: 예술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표2-13]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자 지역분포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강원도	803	1.5	1.5
경기도	12,130	23.4	24.9
경상남도	2,653	5.1	30.0
경상북도	604	1.2	31.2
광주광역시	805	1.6	32.7

대구광역시	1,240	2.4	35.1
대전광역시	999	1.9	37.0
부산광역시	3,293	6.3	43.4
서울특별시	23,185	44.6	88.0
세종특별자치시	100	0.2	88.2
울산광역시	835	1.6	89.8
인천광역시	2,090	4.0	93.8
전라남도	581	1.1	95.0
전라북도	1,132	2.2	97.1
제주특별자치도	346	0.7	97.8
충청남도	565	1.1	98.9
충청북도	574	1.1	100.0
합계	51,935	100.0	

\*출처: 예술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 심의 관련 데이터를 통한 시사점 도출

- 해당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심의위원은 대학교수의 비중(38.7%)과 예술가의 비중(29.8%)이 높았고, 임기는 대체로 1년을 유지(45.1%)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체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함.
- 심의 실적 현황 특징을 살펴본 결과 심의위원별 예술활동증명 완료비율은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장르별 완료비율은 장르 내에서 개별 심의방식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제한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함.

[표2-14] 장르 · 심사위원별 예술활동증명 완료비율

분과	~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계
건축				2				2
공연			1	2			2	5
국악					3	4	1	8
대중음악		2	1	4		3		10
디자인/공예			2	3	2			7
만화			2	1	3			6
무용					2	5	1	8
문학				3	3	1	1	8
방송				2	4	2		8
사진	(1)			1	4			5(1)
연극			2	3		5	2	12

영화				3	2	4	9
일반미술				3	5	1	9
일반음악			1	2	4		7
전통미술			1(1)	2	2		5(1)
기타	(1)		1(1)	1	1		4(2)

\*출처: 예술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 3-2-3.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 이해관계당사자 조사 별도 수행

- 각 장르별 98개 단체에 대해 온·오프라인 조사를 진행하여 총 15개 단체의 답변을 확인
- 현황 조사 및 당사자 FGI, 간담회, 의견조사를 통해 총 4개 영역의 17가지 개선방안 도출  
(예술활동증명 제도 플랫폼(시스템) 개선 2건, 예술활동증명의 기준 개선 8건, 심의제도 개선 4건, 중장기 발전 과제 3건 마련)

[표2-15] 의견수렴 현황

주요 이해관계자 FGI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연극 분야): 2018년 7월 20일</li> <li>- 예술인(시각예술, 문학(웹소설), 영상): 2018년 8월 7일</li> <li>- 전라북도문화재단: 2018년 8월 16일</li> <li>- 제주문화재단: 2018년 8월 21일</li> <li>- 부산문화재단: 2018년 9월 21일</li> <li>- 예술인(기술스텝): 2018년 10월 30일</li> </ul>
의견수렴 간담회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의견수렴 간담회: 2018년 11월 22일</li> </ul>
유관단체 의견수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장르별 98개 단체(온라인, 팩스 병행):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초까지</li> <li>- 15개 단체에서 답변 회신</li> </ul>

\*출처: 예술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 3-2-4. 예술활동증명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방향 제시

- 제도의 변화가 다소 점진적일지라도 구체적으로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발전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제도의 수월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에 집중
  - 장기적으로 예술활동증명 과정의 분권화를 통해 지역 예술환경 특징이 반영된 인증체계 구축
  - 주요 예술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거버넌스를 만들고, 정책에 대한 지지를 함께 구축

[표2-16] 각 부문별 예술활동증명 제도 세부 개선방안(안)

부문	개선안	사유와 제안 방향	의견	지침개정여부
① 시스템의 개선	1. 데이터 생성 및 관리체계	중복되는 기입 정보를 최소화하고 각 신청 항목의 위계를 조정하여 필수정보와 일반정보 간의 체계를 정립함	시스템 개선을 통한 반영 필요	비대상
	2. 데이터 활용 체계 개선	예술활동증명 데이터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라는 점을 감안하여 ISNI 체계를 수용하는 한편, 주 활동내용과 신청 시점의 활동 내용 간 불일치 등 데이터 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상·하위 체계의 보완	시스템 개선을 통한 반영 필요	비대상(데이터 관리 지침을 별도 고려)
② 예술활동증명 기준 개선	1. 심의 장르 체계의 개선	우선 현재 공연, 대중예술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무대기술 스태프 경우에는 실제 작업이 혼합적으로 이루어짐에도 이를 분할하여 심의하는 형태임. 하지만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 규정'상에는 분명 기술지원 인력과 기획인력에 대한 항목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인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음.	현 지침상 별도 심의조항이 존재함으로 심의 분과 신설이 필요함	개정 대상
	2. 활동실적 간주 범위의 확대	시나리오 작가의 경우에도 a) 유관되는 분야와 겹치는 경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동시에, b) 서면화되지 않는 활동의 누락에 대한 보완이 제시되었음.	미실현 창작활동에 대한 사항은 장르별로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보완사항
	3. 기존 장르 체계 외의 신생 장르 진입장벽 완화	여전히 새로운 장르의 출현에 대한 기존 문화예술 생태계 내의 거부감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차별적인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웹소설, 웹툰은 장르라기보다 매체, 지침에 이미 반영됨.	비대상 (운영상 개선대상)
	4. 동일작품의 초청 공연·전시·상영 반영 필요	영화나 시각 분야의 작가들은 동일한 작품을 다른 맥락이나 조건에서 재전시, 재상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동일 작품'이라는 이유로	무용에서 기반영 된 사항을 고려하여 유사 사례에 적용할	보완사항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장르의 특수성상 적절하지 않음	수 있도록 함,	
5. 중복자료 요청의 최소화 마련 (예술활동증명, 파견예술인 등)		a) 예술활동증명과 연계되는 창작준비금 지원 등 사업에서 예술활동증명과 동일한 서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생략할 필요가 있음. b) 또한 현행 지원체계 중에서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바탕으로 지원자격을 산정하는 방식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시차가 크지 않을 경우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스템과 기타 지원사업 신청 시스템의 기본자료를 연동하도록 함	비대상사업 (운영과 개선대상)
6. 축제, 행사를 통한 예술활동증명인증 기준에 대한 사항 필요		현재의 예술활동증명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화되어 있어 실제 창작활동의 적정성을 갖추지 못한 활동들조차 손쉽게 예술활동증명 인증으로 포괄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음	심의위원회에 따라 신진예술가들의 활동을 보는 시각편차가 있는 경우이기도 하며, 동 사안은 더 논의 후 지침이나 실무반영 여부 결정	현행 유지
7. 기존 장르 내 소분류체계 마련		현재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은 중복 장르 혹은 복합장르 활동에 대한 소분류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새로운 장르 영역 설치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가 마련되기 어려움	기존 장르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활동직무를 구체화하는 것은 이미 적용하고 있는 직무 현황을 고려해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정사항 (별표 등으로 반영)
8. 경력인정제도를 통해서 중견 예술인 보호 강화		경력이 인정되나 최근래의 활동 실적이 없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기 어려운 중견예술인에 대해 '경력인증제도'를 적용하여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중견예술인들에 대한 신분보장과 더불어 추가 창작활동에 대한 유인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현재에도 '경력단절예술인'에 대한 특례'가 있으나 이를 보완하여 경력인증제도로 강화함	개정사항

③예술활동증명 심의제도 개선 방향	1. 제출서류의 간소화 조치	2018년 3월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활동증명에 수반되는 사항 중 소득수준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서류 접수가 없어도 검토가 가능한 상황임	재단의 정책 반영사안	비대상
	2. 심사결과백서 (보고서) 발간	심사제도의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데, 예술활동증명 인증자들은 공통적으로 심사위원의 구성 방법과 누가 심사위원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매우 컸으며 심의기준을 적용하는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사후적인 심의 평가제도 및 심의위원회에 대한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개정사항
	3. 지역예술현장 기반의 심의위원 구축 필요	특히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지역의 특수한 조건들을 고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역으로 그럴 경우 해당 지역에 지나치게 관대한 심의결과가 나올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됨	추가논의 대상	추가 논의
	4. 효율적인 심의 수행을 위한 과정 분류	현재 심의위원의 심의대상이 장르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과도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임. 특히 서류 미비를 제외하고,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심의가 가능한 사례들도 모두 심의위원의 심의대상이 됨에 따라 효과적인 심의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서류심사 과정을 별도로 두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줄일 필요가 있음	개정사항 (필요하다면 시행령 개정)
④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	1. 효과적인 지역분권체계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a) 지역의 정책 사업과 관련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제도와 지역의 예술인 복지정책이 ‘호응할 수 있는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b) 심사과정을 지역문화재단으로 분권화하는 것은 반드시 재단의 실무적인 보완이 없으면 문화재단에 지나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큼 - 예술활동증명 제도와 연계되는 정책사업들을 목적의식적으로 발굴하여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효용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임	필요성은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지원 기구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함	장기과제

2. 예술인복지 거버넌스의 구축	현재 규정상 반영되어 있는 ‘협력예술단체’ 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기보다는 이를 포함하여 예술인복지 정책하에서 예술인 단체 및 조직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확대해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함.	정책 결정 사항	개정사항 (협력단체 조항 삭제)
3. 원로예술인에 대한 복지 대책 체계화	현재의 일시적 자원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생활 모니터링 등을 연계한 복지체계의 구축이 더욱 효과적임 -지속적으로 창작하는 원로예술인의 경우에는 창작지원금으로 연계하고 창작활동을 종료한 은퇴 예술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노인복지제도로의 접근과 더불어 정기적인 생활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장기적인 논의사항 (기존의 읍면동 복지전달 체계와의 통합방안 마련)	해당없음

\*출처: 예술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 3-3. 시사점

- 해당 보고서의 경우 부문별로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 중 지역분권체계 마련은 장기과제로 분류하며, 심사과정을 지역문화재단으로 분권화할 경우 재단의 업무 부담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고 설명함. 현재도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신청 건수를 지역으로 분배한다는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행정과 체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 2019년도도 데이터 활용 및 개선에 대한 제안이 확인됨. 현재의 신청시스템이 과거 10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관리 중인 DB 역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예술활동 증명 신청시스템, 경력시스템, 예술인 DB 등 재단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



## 4. 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2021, 문화체육관광부)

### 4-1.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향후 5년간(2022~2026)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로서 작용
- 2018년 발표된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및 함께 발표된 〈새 예술정책 (2018~2022) :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에서 제시된 기조와 방향 아래 수립.
  - 이에 따라 ‘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에서는 “예술과 예술인이 가진 본원적 존재 가치에 대한 성찰로부터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와 방향성을 모색함”이라고 방향을 설명
-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의 국내 예술인 복지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
- 향후 5년(2022~2026) 동안 적용될 예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틀(frame work) 구축을 목표함
- 현장 관계자의 참여, 예술계 논의 및 소통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의 과정은 상향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으로 구성

### 4-2. 연구의 주요 내용

#### 4-2-1. 예술인 복지정책의 의의

- 예술인 복지정책의 연혁과 의의
  - 예술인 복지정책은 〈예술인 복지법〉 제 1조에 의거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함.
  - 이에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보호 및 복지지원”이며, 정책 목표는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을 통한 예술발전 기여”라고 설명하고 있음.
  - 2021년 9월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총 예산액은 1,098억 원으로 확인되며, 아래 표와 같이 매해 증가하고 있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981년 예술인 의료보험조합 설립</li><li>• 1984년 영화인복지재단 설립</li><li>• 1991년 예술가 지위향상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회의</li><li>• 2002년 한국문화예술인 복지조합 설립 추진(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민예총, 예총), 16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공약으로 ‘문화예술인 복지조합 설립’ 제시</li><li>• 2003년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li></ul> |
|--|

- 2004년 노무현 정부 『새예술정책 : 예술의 힘』 14대 과제로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제시,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공약으로 예술인공제회 제도 도입 제시
- 2005년 '조각가 故구본주 유가족과 삼성화재 간의 손해 소송사건', (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출범
- 2007년 전국미술인노동조합 출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
- 2008년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예술인 공제회 설립' 제시
- 2009년 「예술인 복지법(안)」발의
- 2011년 최고은 작가 및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이진원씨의 죽음, <예술인 복지법> 제정(2011.10.28.)
-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 2014년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오픈, 예술인 긴급복지제도 도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시행,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정
- 2015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구 예술인 긴급복지제도),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문화예술인 패스사업 이관,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예술인 확대,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개정안 발의
- 2017년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개소,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소
- 2018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확산,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추진위원회 출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실시
- 2019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시범사업 시작,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발의
- 2020년 서면계약 의무 위반 신고 상담창구 개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시행
- 2021년 8월 31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2021.3.18. 검색); 박영정(2012); 안태호(2006)<sup>3)</sup>;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2007)<sup>4)</sup>; 차민경(2020)을 참고하여 재구성

[표2-17] 예술인 복지정책 예산(2020년~2021년)

세부사업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357	12,914	19,750	20,507	24,978	25,121	27,713	39,934	80,738	109,815
예술인 파견지원	-	-	3,469	4,569	7,760	7,732	7,685	7,685	8,065	8,085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	-	300	253	506	506	506	506	506	506
창작준비금	-	-	-	10,767	12,400	12,345	13,600	16,600	46,076	69,400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	-	-	-	-	-	750	450	950
예술활동증명 운영	-	-	-	-	300	300	300	400	400	400
예술인패스	-	-	-	-	180	200	54	54	54	54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	-	970	870	1,080	1,080	975	1,547	2,280	2,280
사회보험 가입 지원	-	-	1,037	500	1,000	1,000	1,009	1,006	1,031	1,058
예술인고용보험 안내센터 운영	-	-	-	-	-	-	-	200	0	130
예술인복지정책 연구	-	-	-	-	-	-	-	-	0	40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357	1,100	1,763	1,775	1,636	1,858	2,343	2,467	2,612	2,687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	-	-	-	-	-	8,500	19,000	24,000
예술인의료비지원	-	-	-	-	-	-	-	-	150	150
예술인역량강화	-	-	-	-	-	-	10	75	75	75

3) 안태호, 우리 사회 예술가의 현주소와 문제: 故 구본주 사건을 중심으로, Korean Culture & Arts Journal. 2006년 5월호.

4) 예술경영지원센터·문화체육관광부(2007),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 4-2-2.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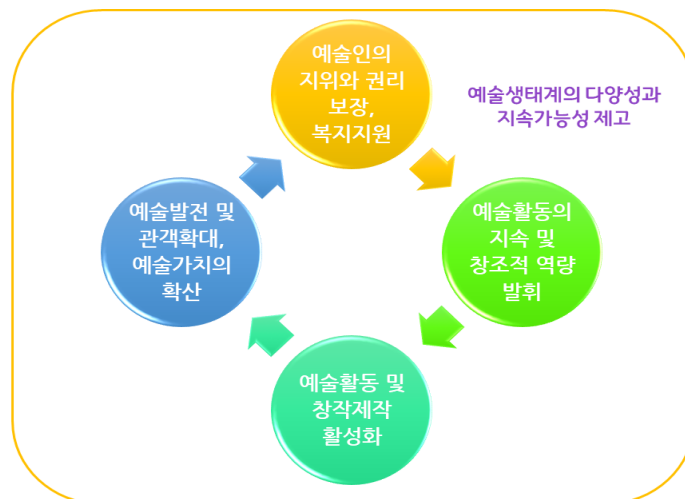
##### ○ [비전] 직업적 권리보장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 향후 예술인 복지정책은, 예술인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예술의 가치를 보호 및 확산시키기 위해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을 내세움.

##### ○ [방향]

- 협의의 복지를 넘어 예술인의 정당한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종합적 예술인 정책으로의 확장
- 전문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리보장 강화
-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반영
- ‘예술인 복지-창작간 선순환 구조’ 추구를 통해 예술생태계 지속가능성 제고
- 지역분권 기조 대응 및 참여와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그림2-12] 예술인 복지 - 창작간 선순환 구조의 구축의 도식화



\*출처: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1.

#####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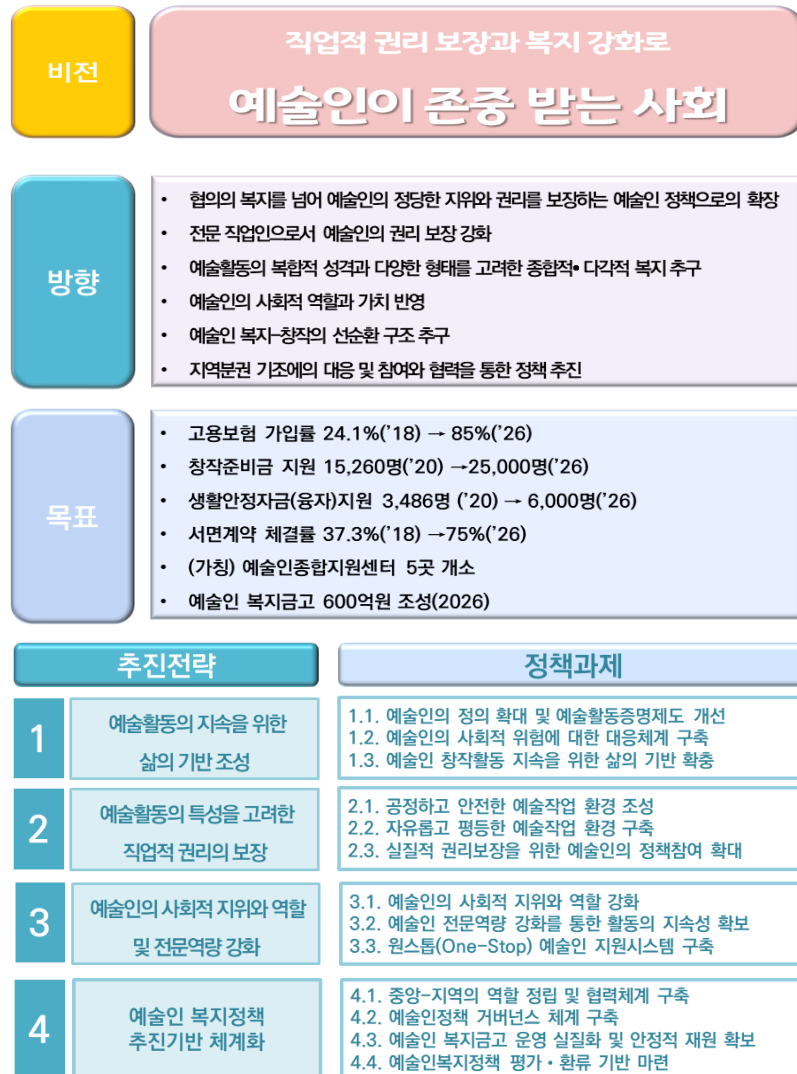
[표2-18]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목표(안)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 가입률 24.1%(2018) → 85%(2026)</li> <li>- 창작준비금 지원 15,260명(2020) → 25,000명(2026)</li> <li>-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3,486명(2020) → 6,000명(2026)</li> <li>- 서면계약 체결률 37.3%(2018)→ 75%(2026)</li> <li>- (가칭) 예술인종합지원센터 5곳 개소</li> <li>- 예술인 복지금고 600억 원 조성('26)</li> </ul>
----	---

○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4개의 추진전략과 13개의 정책과제를 제시

- 추진전략1. ‘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한 삶의 기반 조성’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삶의 기반 확충을 과제로 삼음.
- 추진전략2. ‘예술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적 권리의 보장’ 아래 안전하고 평등한 작업 환경과 예술인의 정책참여 확대를 정책과제로 내세움.
- 추진전략3.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역할 강화에 힘쓰고, 활동 지속성을 확보하며, 원스톱 예술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내세움.
- 추진전략4.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기반 체계화’를 위해 중앙-지역 역할 정립 및 협력체계 구축, 예술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 복지금고 운영 실질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평가와 환류 기반 마련을 과제로 제시.

[그림2-13]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2022~2026)의 비전체계(안)



\*출처: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1.

#### 4-2-3. 구체적인 예술인 복지정책의 필요성

##### ○ 예술과 예술인의 가치 보존 및 확산의 필요성 제시

- 세계 각국에서 예술과 예술인을 공적 재원을 통해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로 ‘예술이 우리 삶과 사회에 필수 불가결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예술을 생산하는 이들이 ‘예술인’이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작품 생산 및 활동이 필요하며, 이들의 활동이 지속되도록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

##### ○ 열악한 소득수준과 프로젝트 기반 단속적 고용형태 지적

- 예술인들의 특수한 직업 형태(프리랜서)를 언급하며, 매우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직업 환경이라고 설명. 장기간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경우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강조
- 이는 예술창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기 위하여 복지정책이 필요함을 강조.

##### ○ 예술분야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정책 필요성 제시

- 사회보장이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 규범적 실천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으로서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같은 부분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함.
- 따라서 예술분야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예술인 복지정책의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

#### 4-2-4. 예술인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시

##### ○ 성과

- <예술인 복지법> 제정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 예술활동증명 제도 도입을 통한 예술인 복지정책의 대상 구체화
- 창작준비금(창작디딤돌) 지원을 통한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 제고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시행, 사회보험 가입 지원 및 의료지원 제공
- 예술인 보육지원 제공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통한 생활비용 부담 경감
-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확산(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및 확대,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 예술인 신문고를 통한 불공정행위 상담 및 처리
-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등 예술인의 권익 보호 노력
-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표2-19]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디딤돌' 사업 지원 현황(장르별)

(단위:명, '20.12월 기준)

연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합계
2015	297	973	56	1	540	101	67	811	385	63	50	179	3,523
2016	252	800	46	1	790	143	91	1,070	387	123	72	225	4,000
2017	301	748	54	-	846	144	91	1,151	441	146	92	-	4,014
2018	399	869	41	1	894	188	114	1,242	432	218	103	-	4,501
2019	480	982	64	-	1,204	222	121	1,464	511	339	113	-	5,500
2020	984	2,352	169	0	4,153	691	380	3,128	971	745	435	1,252	15,260

\*출처: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1.

[표2-20]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사업 수혜자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도별 신규가입자	429	409	89	238	166	222	1,682	2,400

\*출처: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1.

[표2-2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 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신청자 수	1,421명	1,555명	2,001명
수혜자 수	1,138명	1,092명	1,504명
문화예술사업자	63개	49개	62개
근로자인 예술인	905명	786명	798명
프리랜서 예술인	233명	306명	706명

\*출처: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1.

[표2-2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 수혜자 현황

2021.03.31. 기준

구분	2019		2020		2021	
	인원	금액(백만원)	인원	금액(백만원)	인원	금액(백만원)
소액생활자금	1,440	3,976,790,183	2,331	5,681,690,622	550	2,143,800,000
코로나19	-	-	1,090	7,125,650,000	53	330,100,000
주택자금	57	3,647,520,000	65	5,080,436,000	-	-
합계	1,497	7,624,310,183	3,486	17,887,776,622	603	2,473,900,000

\*출처: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1

[표2-23]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산 및 참여자수 추이(2014~2020)

(단위: 백만원, 명, 개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	3,469	4,569	7,760	7,732	7,685	7,685	8,065
참여자수	337명	509명	1,014명	1,000명	1,000명	1,001명	1,023명
참여기관	179개	191개	284개	287개	232개	207개	208개

\*출처: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1

※ 참여자수 : 사업 선정 및 약정체결 후 1회 이상 지원금 수혜 인원

[표2-24] 불공정행위 유형별 신고건수(2021.7.31 기준)

구분	합계	불공정계약강요	수익배분 거부	예술창작활동 방해	정보의 부당이용
2014	91	4	87	0	0
2015	95	6	87	1	1
2016	150	8	134	6	2
2017	165	24	135	3	3
2018	241	67	145	23	6
2019	201	22	124	46	9
2020	248	21	207	15	5
2021	165	15	141	8	1
누적(건수)	1,356	167	1,060	102	27
비율(%)	100	12.3	78.2	7.5	2

\*출처: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1

[표2-25]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2018~2021)

(단위: 건, '21.7.31 기준)

구 분		법률상담	소송지원	심리상담	의료	기관연계	기타	합계
2018년	조치현황	10	2	8	0	0	20	40
2019년	조치현황	18	4	10	2	0	14	48
2020년	조치현황	32	4	12	1	0	12	61
2021년	조치현황	21	7	14	0	0	15	57

\*출처: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1

#### ○ 한계

- 예술인 복지정책의 정책 목표 및 지향, 철학적 토대 취약
- 정책 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의 정의 및 기준에 대한 논란
-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 권리보장에 대한 관점 미흡
- 예술활동의 복합적 특성과 다양한 형태의 고려 미흡
- 예술인 복지정책의 재정기반의 취약성

- 타 분야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취약
- 중앙집권적 전달체제로 지역분권에 대한 준비 취약
-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의 미약

#### 4-2-5. 코로나 19(COVID-19)로 발생한 문화예술계 충격과 영향 분석

-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전세계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득감소
- 대유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안정망이 깨지고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그룹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분석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접촉·비대면 서비스와 구독경제 등 새로운 경제활동과 문화가 생겨나 급속하게 성장/확산하였고, 이는 문화예술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함. 그러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일부 계층·그룹이 소외되는 경향도 함께 발견되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의 열악한 기반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였다고 분석.

#### 4-2-6. 예술인 설문 추가의견(주관식) 결과 : 예술활동증명 제도 관련

- 지원대상·예술활동증명 관련하여 추가의견을 묻는 항목에서 ‘전문예술인과 비전문예술인 구분의 불명확성’, ‘예술활동증명 강화’, ‘예술활동증명의 검증 엄격화’, ‘지속적/장기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에게 지원이 되어야 함’이라는 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제출. 제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현장 예술계의 목소리와 대조되는 의견으로 시사할 만한 지점.

[표2-26] 예술인 설문 추가의견 결과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전문예술인과 비전문예술인 구분의 불명확성 학생과 일반 창작자를 구분해야 예술활동증명 제도 강화 예술활동증명 발급 신속성 제고 예술인증명 방법의 다양화 예술활동증명 검증 엄격화 예술활동증명 연장 시 60세 이상 예술인에게 지속적 창작활동 요구 어려움 프리랜서 증명 어려움 고령 예술인 복지 확대 청년 예술인 복지 확대 전업 예술인 복지 확대 장애 예술인 복지 확대 신인 작가 지원 확대 지속적/장기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에게 지원이 되어야 함
---------------	--

\*출처: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1



- 중앙-지역 관련 항목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지자체와의 협력 확대’ 등 분권체제, 지역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음.

[표2-27] 예술인 설문 추가의견 결과 : 중앙-지역

중앙-지역	<p>중앙과 지방의 환경적 상황에 따른 구분 지원이 필요하다</p> <p>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p> <p>지자체와의 협력 확대</p> <p>예술인 지원사업의 공모에 시도별 기준이 상이</p> <p>각 지자체 간 예술인 지원 격차</p> <p>지역 예술인을 위한 복지 확대</p>
-------	---

\*출처: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1

- 지원체계·지원사업을 묻는 항목에서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인력 확대’라는 의견에서 알 수 있듯,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 절차나 방식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보임.

[표2-28] 예술인 설문 추가의견 결과 : 지원체계·지원사업

지원체계/지원사업	<p>예술인복지재단의 인력 확대</p> <p>예술인과 예술행정직과의 수직적 관계 개선</p> <p>지원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p> <p>장기적 안목에서 지원</p> <p>예술인 옴부즈맨 제도 운용</p> <p>연초 및 연말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발생</p> <p>예술인복지 사각지대의 파악, 실태조사</p> <p>맞춤형 지원사업 확대</p> <p>지원신청자료 제출 및 절차의 간소화</p> <p>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신청 등 지원 필요</p> <p>재원확보 필요</p> <p>재정확대</p>
-----------	--

\*출처: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1

#### 4-3. 시사점

-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비전, 방향, 목표와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복지재단과 관련한 개선 및 지원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음. 2012년 설립 이후 10년이 된 현재, 대부분의 예술인 복지정책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에 대한 진단과 평가,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으로 보임.

- 예술인 복지정책 사업비용은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해 증가하는 추세. 예산이 늘어나며 사업 규모가 커진 만큼 해당하는 경상비가 적절하게 함께 책정되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해 보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경상비가 고려되어야 함.
- 본 보고서에서 예술인 복지정책의 한계로 ‘정책 대상으로서의 예술인 정의 및 기준에 대한 논란’, ‘예술활동의 복합적 특성과 다양한 형태의 고려 미흡’, ‘타 분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취약’ 등을 언급함. 대부분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개선점으로 꼽히는 부분. 예술인 복지정책 관련 사업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대부분이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아 한계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Ⅲ. 예술활동증명 제도 현황 및 쟁점

---

1. 예술활동증명 제도 현황
2. 예술활동증명 제도 관련 쟁점



## 1. 예술활동증명 제도 현황

### 1-1. 예술활동증명 제도 도입 및 변화 과정

-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2012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 차례 큰 폭의 제도 개선과 두 차례 운영지침 개정 수준의 제도 개선이 있었음. 이를 통해 현재 형태의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운영 중임. 전체적으로는 제도 도입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큰 폭의 변화가 없었으나 2020년과 2021년 연속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예술활동증명과 연계한 예술인 복지/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예술활동증명 신청자의 수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음(물론, 예술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운영 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 시기별 주요한 제도 변화 과정은 아래 [표3-1]과 같음.

[표3-1] 예술활동증명 제도 도입 및 변화 과정

구분	내용
2012년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도입 ; 소득기준과 실적기준을 증명 방식으로 채택(자격기준은 제외) ;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기준은 <저작권법>을 준용 ; 예술활동 수입기준은 '농어업인 사례'를 참조(월120만원)
2014년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1차)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3,4,5항 삭제(저작권 등록 인정, 국고·지방비·기금 예술실적 인정 부분) ; 만화분과 신설, 음악·국악·영화·연예분과 기준 수정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정(12월). 예술활동증명 신청방식, 심의위원회, 활동증명 인증 유효기간 기준 신설 등
2015년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 예술활동증명 특례에 대한 간이 심의절차 도입 ; 불공정행위 관련 특례 신설 ; 예술활동증명 허위 신청자에 대한 제한사항 규정
2017년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 심의위원 규모 확대(3~5인 → 3~10인) ; 발표 매체 기준 변경(첨단매체 폭넓게 포함하되 블로그 등 개인매체는 인정하지 않음)
2020년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2차) ; 재신청 기간 연장(만료 3개월 전 → 만료 6개월 전) ; 행정심의 도입 ; 심의위원 성별 비율 명시(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 코로나19 기간 중 취소된 공연도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1년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3차) ; 협력 협·단체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을 추가하여 심의기관을 확대 ; 온라인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심의기준 신설 ; 분과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상한선을 폐지(3~10인 → 3인 이상)

### 1-1-1.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도입 ; 2012년

- 2012년 11월 1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출범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도입됨.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9.)를 통해 사전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2012. 11. 18. 제정)과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2012. 11. 18. 제정)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 정하였음.
- 예술활동증명 대상의 선정은 예술활동 실적 증빙, 예술활동 관련 소득 증빙, 자격 증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었으며, 예술활동증명 제도 도입 시에는 ‘소득기준’과 다양한 형태의 ‘실적기준’이 채택되었음. ‘자격에 의한 기준’은 업무 수행 능력을 증명하지만, 활동 상황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음.

#### 1) 실적 증빙에 의한 예술활동증명

##### (1) 예술활동 실적증명 기준

- <예술인 복지법>의 수혜 대상인 ‘예술인’의 인정을 위한 실적 증빙 기준은 <저작권법>의 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p><b>예술인 복지법 시행령</b>  [시행 2012. 11. 18.] [대통령령 제24170호, 2012. 11. 12., 제정]</p> <p><b>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b>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li> <li>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li> <li>3.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저작권접권을 등록한 자</li> <li>4.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li> <li>5. 제4호에 따른 실적이 있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li> <li>6. 그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실적을 인정한 자</li> </ol> <p>② 재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예술 활동 실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p> <p>③ 저작물 공표 횟수의 하한 등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은 ‘경력자’가 아닌 ‘입문자’를 대상 기준으로(‘입문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소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일반적으로 현직을 나타내는 기준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나, 예술활동의 경우 실적이 반드시 주기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근 3년 이내의 실적’(1년에 1건 이상)으로 산정 대상 기간을 확대함.
  - 영화연출, 음악회의 지휘 등 활동량 자체가 많지 않은 경우나 문학작품집·개인전·음반 등 여러 작품이 엮인 실적의 경우 등에서는 기준량 자체를 낮춰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됨.

(2)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 실적에 따른 기준<sup>5)</sup>

- 개별 예술활동 실적증명 외에도 국고, 지방비, 기금의 수혜 실적을 증명함으로써 예술활동 실적증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이는 공적 재원의 지원을 받은 예술 프로젝트의 경우 선정 과정에서 소정의 심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미 객관적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 것임.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1. 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5호, 2012. 11. 16., 제정]

[별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4.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세부 기준
가.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국고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지방비의 보조를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문화예술진흥기금, 복권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공공 기금의 보조를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5.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는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로 한다.

- 단, 공연과 같이 단체 단위로 지원받은 경우 프로젝트 참여자는 개인의 참여에 대한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다고 정함.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에 따른 기준<sup>6)</sup>

- 등록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실적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할 수 있게 함.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기준은 ‘공표’ 이전의 저작물도 일부 포함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발급되는 ‘저작권 등록증’이나 ‘저작인접권 등록증’ 사본 제출을 통해 증빙이 매우 간편한 방법에 해당함.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기준에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음. 기간 제한 없이 일괄 3건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그 권리가 사후 50년까지 지속).

5)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4.3.31.)을 통해 삭제됨.

6)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4.3.31.)을 통해 삭제됨.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1. 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5호, 2012. 11. 16., 제정]

**[별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3.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세부 기준**

가.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른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나. 「저작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연자로서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 2) 수입에 의한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의 수입의 특징을 ① 간헐적인 수입, ② 적은 수입, ③ 수입원의 다양성으로 진단
- 예술활동 수입증명 기준에서, 최저소득 기준을 설정할 시 예술인이 예술활동만으로 얻은 수입액이 타 직업군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영. ‘2009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시점인 2008년도 월 최저임금액이 787,930원(주 40시간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예술인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수입을 얻고 있음.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수입이 낮고 불규칙한 유사성을 가진 ‘농·어업인’ 사례를 참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은 ‘농업인’을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제3조 제1항 제3호)’으로 규정. 이를 반영해 예술인 수입 기준을 연간 120만 원 이상으로 삼음. 그러나 예술인의 경우는 수입이 해마다 불규칙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1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 원 이상’으로 정함.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1. 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5호, 2012. 11. 16., 제정]

**[별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세부 기준**

가.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자

나. 최근 3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이 50% 이상인 자



## 1-1-2.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1차) ; 2014년

- 2014년 3월과 12월, 예술활동증명 제도와 관련한 첫 번째 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됨. 우선 2014년 3월,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예술인복지TFT’의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첫 번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12월에는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이 제정됨.

### 1) 광범위한 예술인의 기준 범위를 수정

- 예술활동증명이 포함하는 예술인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여 직업예술인으로 보기 힘든 생활 예술인까지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직업예술인으로 판단하기 모호하거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일부 기준을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삭제함.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 3. 31.] [대통령령 제25280호, 2014. 3. 28., 일부개정]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3.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저작권접관을 등록한 자 삭제 <2014. 3. 28.>
  4.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삭제 <2014. 3. 28.>
  5. 제4호에 따른 실적이 있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 삭제 <2014. 3. 28.>
  6. 그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실적을 인정한 자
- ② 재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예술 활동 실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저작물 공표 횟수의 하한 등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삭제된 조항 및 삭제의 이유는 다음과 같음.
  - 3호 ; 저작권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등록 건수를 예술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
  - 4호, 5호 ; 국고, 지방비, 기금 보조 예술활동 실적까지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TFT 의견 반영

### 2) 만화 분야 신설

-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2013.8.6.)으로 문화예술의 정의에 ‘만화’가 포함되면서, 예술활동증명의 분야에 만화를 추가하고 심의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 만화 분야 신설 및 세부 기준 제시
  - 세부 기준과 관련해서는 만화연합, 우리만화연대 등 협·단체 및 관계자와의 협의 진행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 3.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8호, 2014. 3. 31., 일부개정]

**[별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만화	<p>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다.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p> <p>라.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자</p> <p>마.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만화 비평 발표의 경우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제작 및 전시에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p>

3) 음악, 국악, 영화, 연예 분야 세부 기준 수정

- 음악 및 국악 분야 실연자(가창, 연주자)에 대한 기준 보완, 영화 분야 매체별 창작환경(장편영화의 준비 및 작업기간 고려 등) 반영, 대중음악의 공연을 연예 분야로 분류하던 것을 음악으로 재정리, 그리고 연예 분야 방송 대본 실적에서 연속극의 경우 최근 5년으로 실적인정 기간을 늘리는 것 등의 수정이 이루어짐.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 3.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8호, 2014. 3. 31., 일부개정]

**[별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음악, 국악	<p>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p> <p>나.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p> <p>다.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p> <p>라.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자</p> <p>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p> <p>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p>

영화	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된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제7호에 따른 단편 영화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된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된 영화를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된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연예(演藝)	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 4)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정 ; 2014년 12월

-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전문성 제고 방안,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에 적용할 수 있게 함.

##### (1)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절차 정비

- 모든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 기존 규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음. 관련해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제출처를 <시행령>에 명시하고,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에 해당하는지 가부를 결정하는 주체를 ‘심의위원회’로 명시함.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 [대통령령 제25800호, 2014. 12. 3., 일부개정]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상에 명시함.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규정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9호, 2014. 12. 26., 일부개정]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4. 12. 26.]

#### (2) 다원 장르 예술가의 예술활동증명 인정 가능성 제고

-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많은 예술창작 환경을 반영하여, 다원 장르 예술가의 예술활동 실적인정 기준을 마련. 이전에는 한 가지 예술분야, 한 가지 직무를 기준으로만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했음.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 3.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8호, 2014. 3. 31., 일부개정]

#### [별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아래 표의 2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나 세부 기준란의 2 이상의 목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아 해당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를 들어, 3년에 3편이 하한일 경우 3년에 1편의 실적이 있으면 1/3점으로 한다)하여, 그 환산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인 자도 포함한다.

### (3) 분야별 세부 기준 개정

- 문학 ; 기존에는 5년간 5편 이상의 문학작품 또는 문학비평으로 일괄 적용하던 기준을 시와 소설, 희곡 등 다양한 세부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기간을 정함.
  - 시(동시), 시조, 수필 ; 5년 동안 5편
  - 소설(동화, 청소년), 평전 ; 5년 동안 1편(단편은 3편)
  - 희곡 ; 3년 동안 1편
  - 평론 ; 5년 동안 3편
- 미술, 사진, 건축 ; 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 3년 동안 3회의 전시 기획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3년 동안 1회 이상의 기획으로 규정을 완화함.
- 음악, 국악 ; 대중음악에서 방송프로그램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 지휘자의 경우 3년 1회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3년 동안 3회로 기준을 강화함.
- 영화 ; 영화 제작 후 상영관을 통해 상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IPTV 등)을 반영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 개정함.
- 연예 ; 방송을 통한 연예활동에만 한정하던 기준을 ‘연예 공연’ 관련 출연, 연출, 기술지원, 기획인력에 관한 기준으로 확대함.
- 만화 ; 만화 제작과 전시를 구분하여 별도 기준을 제시. 만화 제작에 참여한 기술지원 인력(어시스턴트)의 경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참여’를 기준으로 추가 적용함.

### 1-1-3.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 2015년

#### 1) 예술활동증명 특례에 대한 간이 심의절차 도입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이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긴급한 사유로 제한된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있는 예술인들도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 이에 산재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신문고 관련한 예술활동증명 특례 조항을 만들고 이를 별도의 간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함. 해당 특례 외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 완료를 다시 받아야 함.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시행 2015. 5. 28.]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7호, 2015. 5. 28., 일부개정]

#### **제3장 심의위원회**

**제9조(복합 심의 등)** ① 예술 활동 실적이 여러 문화예술 분야에 걸쳐 있어 복합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의 직업이 속하는 분야와 작품이 속하는 분야가 다를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 ③ 해당 분야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가 불확실하거나 기존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장 근접한 분야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특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특례의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 1인과 재단 직원 1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5.5.28.)

## 2) 불공정행위 관련 특례 신설

-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시행 2015. 5. 28.]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7호, 2015. 5. 28., 일부개정]

### 제4장 인정기준

- 제31조(금지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5.5.28.)
- ② 금지행위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5.5.28.)

## 3) 허위 신청자에 대한 제한사항 규정

- 부당한 방법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한 증명을 무효로 하고, 향후 일정 기간 재단 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부당한 증명 신청 및 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시행 2015. 5. 28.]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7호, 2015. 5. 28., 일부개정]

### 제5장 효력

- 제34조(허위자료 제출 시 효력)**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의 예술 활동 증명은 무효이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5.5.28.)

## 1-1-4.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 2017년

### 1) 심의위원 규모 확대

- 15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분과별로 심의건수가 균등하지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분과별 심의위원 규모를 '3인에서 5인'에서 '3인에서 10인'으로 확대하기로 함. 전체 심의위원회 회의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함.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시행 2015. 5. 28.]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7호, 2015. 5. 28., 일부개정]

### 제7장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분과위원회는 3명에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학, 미술(일반),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등 15개로 한다.

**제8조(전체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 2) 발표 매체 기준 변경

- 발표 매체의 인정기준에 대해 다양한 첨단 매체를 포함하되, 블로그 등의 개인 매체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함.

## 3) 만화 분야 기술인력 지원에 대한 기준 삭제

- 복합 실적에 대한 인정기준에서 만화 분야 기술지원 인력 관련 기준 제한이 삭제됨.

## 1-1-5.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2차) ; 2020년

-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폭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행정심의 절차가 도입되면서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지는 현행 예술활동증명 심의체계가 정해졌으며, 재신청 기간 연장(3개월 → 6개월)으로 예술활동증명 효력 만료로 인해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했음.
- 코로나19의 유행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행사의 취소가 잇따르는 상황을 반영하여 재난 시기 취소된 예술활동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신설함.

### 1) 재신청 기간 연장

-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신청 기간이 짧아 복지사업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재신청 기간 연장을 통한 해소를 모색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시행 2020. 1. 1.]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55호, 2019. 12. 23., 일부개정]

#### 제5장 효력

**제3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효력은 상실된다.

### 2) 행정심의 도입

- 예술활동 실적 심의 전, 단순 건수 미달 등 정량적 요건에 대한 행정심사를 선행하여 심의 기간 단축 및 심사 능률성 제고. 행정심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함.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시행 2020. 1. 1.]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55호, 2019. 12. 23., 일부개정]

#### 제3장 심의위원회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체위원회로 운영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행정심의를 재단에 일임하고 행정심의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 3) 심의위원 성별 비율 명시

- 여성가족부의 ‘특별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 개선사항’(2018)을 반영하여, 심의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함.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시행 2020. 1. 1.]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55호, 2019. 12. 23., 일부개정]

#### 제3장 심의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분과위원회는 3명에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학, 미술(일반),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등 15개로 한다.

#### 4) 재난 기간 취소된 예술활동의 인정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이용객 또한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해 예술인들이 복지사업 신청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놓이지 않도록 재난 기간 동안 취소한 예술행사를 예술활동 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운영지침 조항이 신설됨.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시행 2020. 3. 3.]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56호, 2020. 3. 3., 일부개정]

#### 제4장 인정기준

#####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예정된 발표, 전시, 공연 등의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재난으로 인하여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예술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1-1-6.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3차) ; 2021년



### 1) 협력 협·단체 추가를 통한 심의기관 확대

-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력 협·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을 추가하여 심의기관을 확대함.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11개 지역문화재단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행정심의에 참여하게 됨.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시행 2021. 3. 3.]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69호, 2021. 3. 3., 일부개정]

#### 제2장 신청

**제4조(협력 협·단체의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단체 중 엄격한 회원관리(가입 조건, 자격 심사 등)를 전제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협·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격의 전문예술(인) 협·단체
  2. 해당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다수가 소속된 협·단체
  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
-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협력 협·단체에 대해 표본 검증, 민원 발생 시 검증 등 신뢰도 확인을 통해 협력 지속 여부를 결정하되, 최초 3년은 매년 협약을 갱신하며, 3년 연속 협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로는 3년 주기로 협약을 갱신한다.
- ③ 협력 협·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다.

### 2) 온라인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심의기준 신설

- 온라인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심의기준을 신설함.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시행 2021. 3. 3.]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69호, 2021. 3. 3., 일부개정]

#### 제4장 인정기준

#####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이 지원하는 비대면 예술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선정 내역, 참여 확인서, 예술활동 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3) 분과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상한선 폐지

- 심의인력 증원을 통한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 상한선을 폐지함.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시행 2021. 12. 27.]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73호, 2021. 12. 27., 일부개정]

#### 제3장 심의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분과위원회는 3

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난 기간을 예술활동증명 실적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

-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 관련 추가 운영지침 개정이 이루어짐.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 중 예술인의 예술활동 위축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제출할 실적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재난 기간(재난이 해제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은 예술활동증명 실적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시행 2021. 12. 27.]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73호, 2021. 12. 27., 일부개정]

**제4장 인정기준**

**제13조(기준 기간의 산정)**

-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 후 같은조 제4항에 따라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이나 같은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 후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은 기준 기간의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1-2. 예술활동증명 현황

### 1-2-1.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및 완료자 현황

- 2022년 8월 16일(03시) 기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총 146,098명. 지역별로는 서울이 54,131명(37.05%)으로 가장 많음. 남성과 여성은 각각 66,553명(46.1%)과 77,828명(53.9%)로 여성이 더 많으며, 장르별로는 음악, 미술, 연극, 문학의 순서임.

[표3-2]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현황(2022.8.16. 03시 기준)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인천	전북	대구	대전	전남
54,131 (37.05%)	33,103 (22.66%)	8,514 (5.83%)	7,594 (5.20%)	6,419 (4.39%)	5,057 (3.46%)	4,481 (3.07%)	3,830 (2.62%)	3,506 (2.40%)
강원	광주	충남	충북	경북	제주	울산	세종	합계
3,149 (2.16%)	3,477 (2.38%)	2,668 (1.83%)	2,610 (1.79%)	2,487 (1.70%)	2,229 (1.53%)	1,988 (1.36%)	855 (0.59%)	146,098

[표3-3] 성별 예술활동증명 현황(2022.8.16. 03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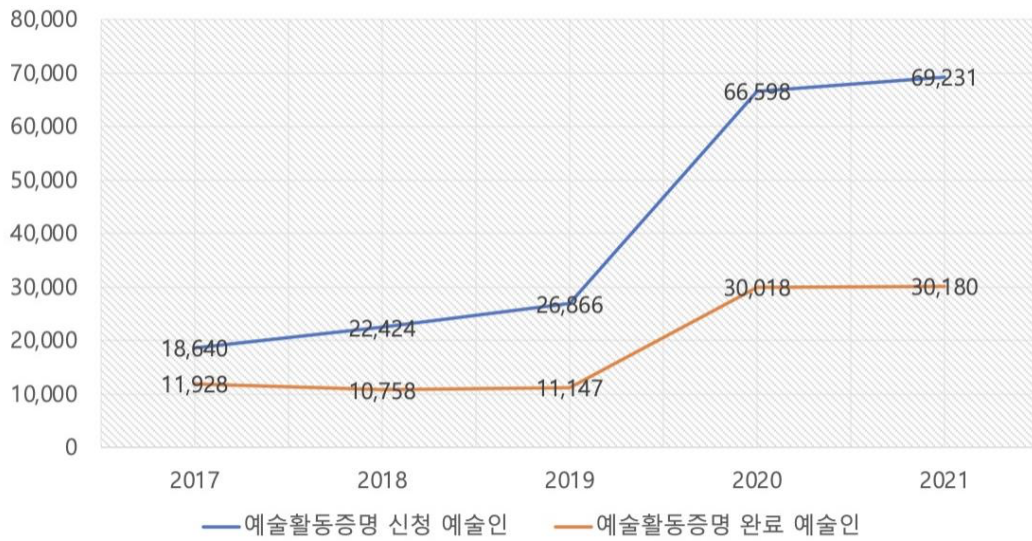
구분	명	%
남성	67,123	45.9
여성	89,975	54.1

[표3-4] 분야별 예술활동증명 현황(2022.8.16. 03시 기준)

음악	미술	연극	문학	영화	복수
37,253명	31,282명	18,061명	14,031명	9,618명	9,221명
연예	국악	무용	만화	사진	건축
7,622명	7,191명	5,603명	3,113명	3,036명	6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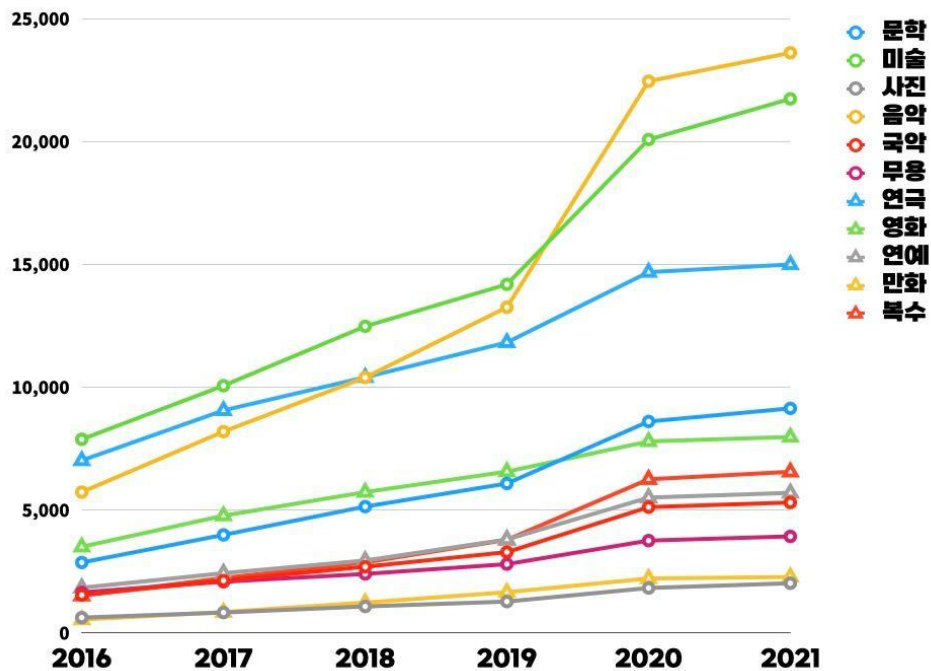
- 2017년~2022년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과 완료 예술인의 수를 살펴보면, 특히 2020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신청 예술인의 폭증). 여기에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예술인 복지정책 및 지원사업의 참여요건으로 예술활동증명이 활용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예술인 재난지원금 발표 직후 예술활동증명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을 볼 때, 예술활동증명과 코로나19 지원사업 간 연동을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한 분석임.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예술인으로서의 인정’을 예술활동증명 신청 이유로 꼽은 예술인이 절반 이상이었음.

[그림3-1] 연도별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완료 예술인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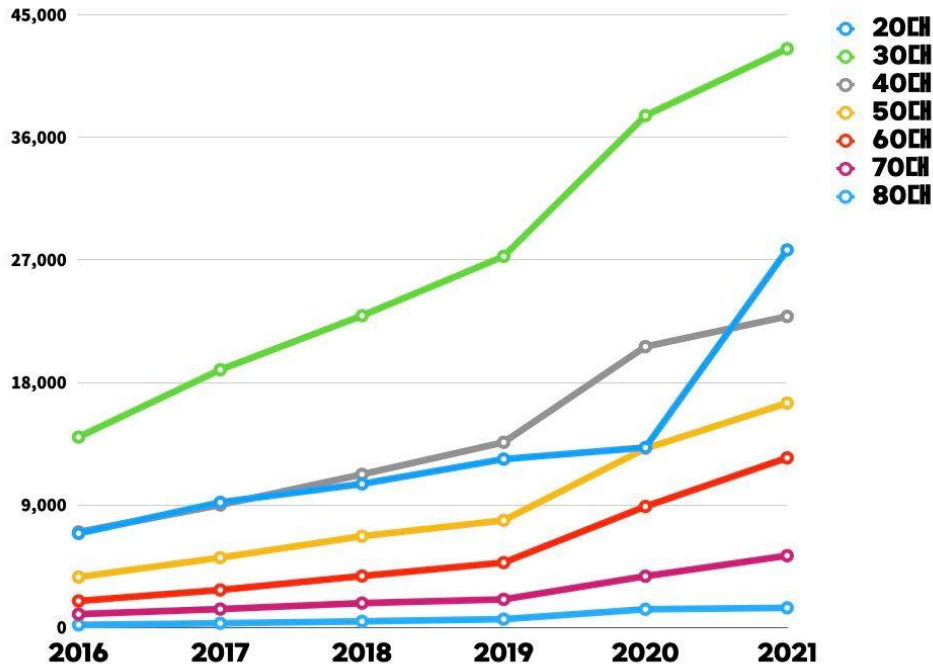
- 장르별 증감을 살펴보면, 음악과 미술에서 2020년, 2021년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3-2]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의 장르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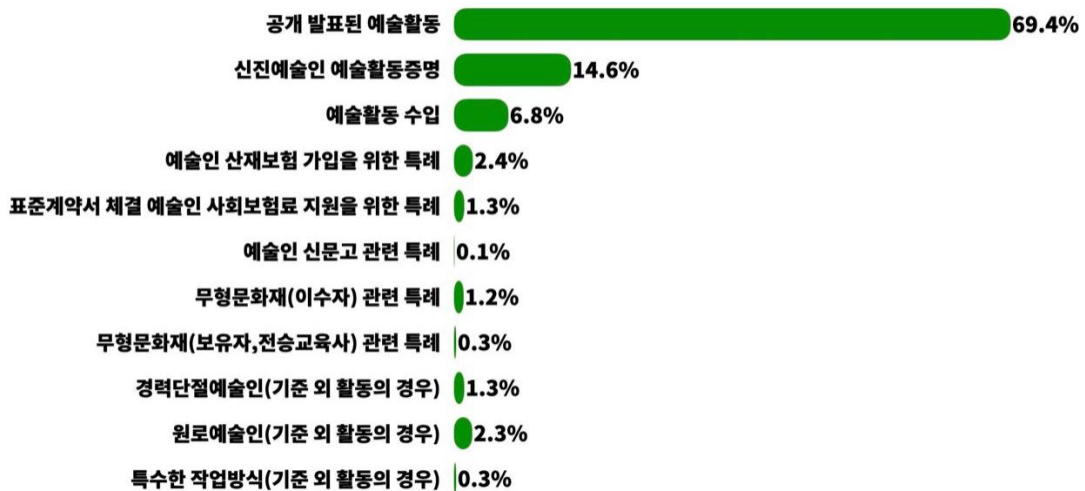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2020년과 2021년, 30대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짐. 20대는 2021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40대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많이 증가한 편에 속함.

[그림3-3]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의 연령별 증감



#### 1-2-2. 신청 분류에 따른 분포 현황

[그림3-4] 신청분류에 따른 분포(2021년 예술활동증명 완료 69,197명 대상)



- 2021년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69,197명의 신청분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이 69.4%로 가장 높음.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제외하면, 81.3%가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함. 두 번째는 예술활동 수입(6.8%)을 통한 증명임. 이는 2012년 11월 ~ 2018년 6월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86.3%, 5.7%)<sup>7)</sup>와도 유사함.

- 결국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10명 중 8명은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활동을 증명하고 있음. 그 배경으로는, 우리나라의 예술환경에서는 ① 예술활동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는 예술활동이 많고 ② 예술활동 수입으로 제출하는 내용 또한 실적을 추가 확인하며 ③ 예술활동 수입으로 증명되는 기간이 짧은 것(1년, 3년) 등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 1-2-3. 예술인 복지·지원사업과 예술활동증명

[표3-5] 월별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추이(2018년~2021년)<sup>8)</sup>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2,517	1,719	2,769	1,614	1,609	1,615	2,218	1,856	1,120	1,292	2,297	1,798
2019	2,866	2,576	2,892	2,332	1,936	1,916	2,324	2,038	1,636	2,020	2,020	2,310
2020	3,127	6,357	9,169	6,395	7,730	5,917	6,879	4,066	4,043	3,679	4,682	4,554
2021	6,171	7,871	7,646	7,674	5,976	5,407	7,625	4,097	4,120	3,988	3,974	4,682

-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수는 통상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 획득이 필요한 연초에 최대치를 기록함(2018년, 2019년 데이터 참조). 2020년과 2021년에는 연초가 아닌 시기에 신청 인원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예술인 지원사업의 발표와 공고 기간을 전후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자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20년 이후 예술활동 증명 신청 인원 증가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예술인 지원사업이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임.
  - 2020년 ; 문체부 코로나 긴급지원 발표(3/15), 서울시 예술인재난지원금 발표(3/16), 서울시 예술인재난지원금 추가 예산투입 발표(4/28)
  - 2021년 ; 각 지자체의 예술인재난지원금 발표(2월), 서울시 예술인재난지원금 발표(7/13)

#### 1-2-4.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활용한 지역사업

- 2020년 이후 예술활동증명 완료를 정책의 범위로 설정하는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사례가 늘어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2021년 38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72개 사업이 예술활동증명 완료를 사업 참여 조건으로 정했음.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의 규모는 총 28,586명이었으며, 지원금의 규모는 50~200만 원 수준. 전체로 따지면 22,454,599,740원이었음.
- 예술활동증명 완료를 조건으로 한 지자체의 대표적인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예술인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긴급생계지원, 예술인 창작지원금, 예술인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등임.

7)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 방안 연구’(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p.43 [그림 II -1] 참조.

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자료

### 1-3. 예술활동증명 심의제도 현황

[그림3-5]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회는 총 1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5월 2일 현재 총 115명의 심의위원이 위촉되어 있음(임기 1년). 분과별 심의위원의 수는 2021년 운영지침 규정 변경으로 상한선이 없어졌음. 분과별 3인 이상의 심의위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고지된 기준에 근거하여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를 심의. 분과별 위원 3인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 완료한 건에 대해 3분의 2 이상 나온 결과로 ‘완료/미완료’를 결정. 온라인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예술활동증명 여부를 판단. 증빙서류만으로 예술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 예술생태계에 대한 이해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판단
- 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15개)와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전체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음.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어려운 사항,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개최. 단,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때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음.

#### 1-3-1. 심의위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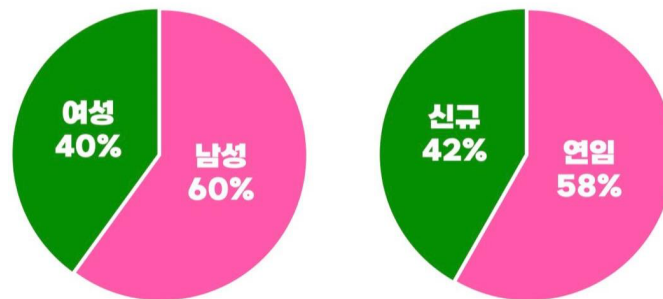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위촉 현황은 아래와 같음. 2022년 5월 2일 현재 총 115명의 심의위원이 위촉되어 있음. 분야별로는 문학, 무용, 연극, 영화가 각각 10명의 심의위원으로 가장 많으며, 미술(디자인·공예)과 만화가 9명, 미술(일반)과 연예(방송)가 8명 등임. 심의위원 수가 가장 적은 분야는 건축(3명)임.

[표3-6]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위촉 현황(2022년 5월 2일 현재)

	문학	미술 (일반)	미술 (디자인·공예)	미술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 (일반)	음악 (대중음악)	국악
18~19	8	6	6	4	5	3	7	8	6
19~20	7	6	5	4	5	3	6	8	6
20~21	9	8	5	5	5	3	7	8	7
21~22	10	8	9	8	4	3	7	7	7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방송)	연예 (공연)	만화	특별	계	
18~19	6	9	7	6	4	5	7	97	
19~20	6	9	6	6	4	5	4	90	
20~21	6	9	7	7	4	5	-	95	
21~22	10	10	10	8	5	9	-	115	

- 심의위원의 성별 비율은 여성 40%, 남성 60%임.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심의위원 위촉, 운영 중. 심의위원의 연임 비율은 5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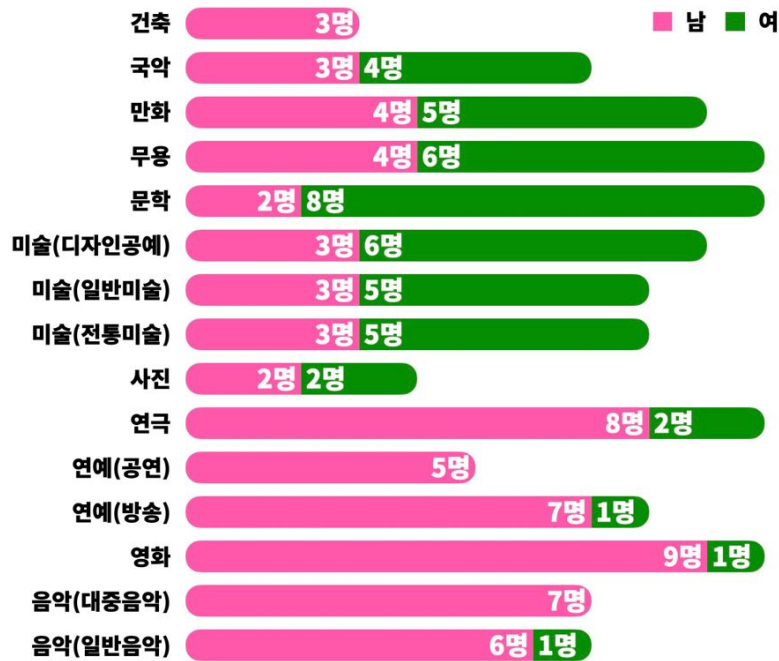
[그림3-6] 2021~2022년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전체) 성별, 연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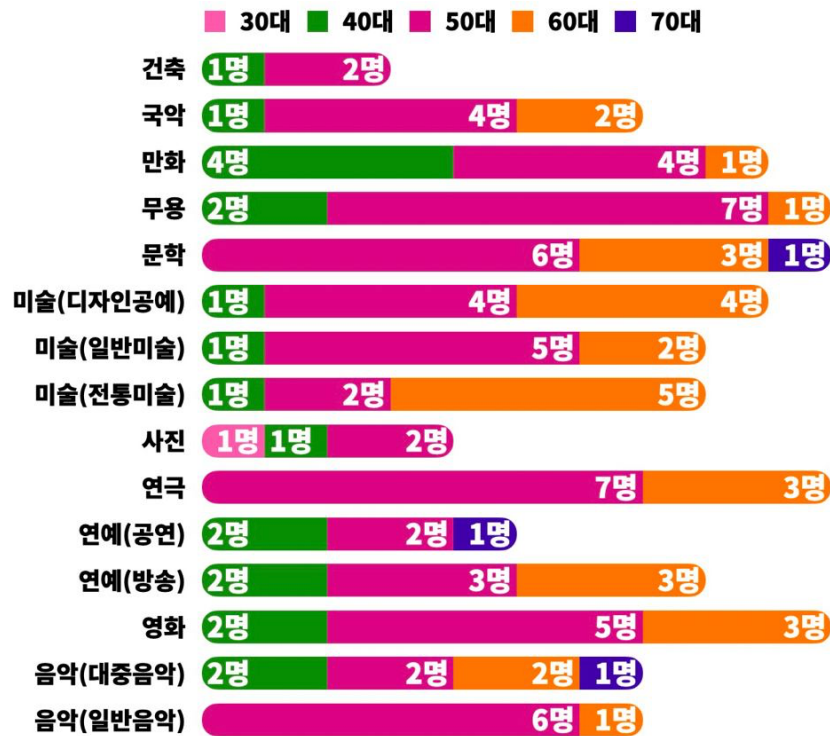
- 성별 비율을 분과별로 살펴보면, 몇몇 분과에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분과별 성별 비율의 쏠림현상이 존재함.
- 심의위원의 연령대는 평균 55세. 50대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53%), 30대가 1명으로 가장 적었음.
- 30대 ; 1명
  - 40대 ; 20명
  - 50대 ; 61명
  - 60대 ; 30명
  - 70대 ; 3명



[그림3-7] 2011~2022년 예술활동증명 분과별 심의위원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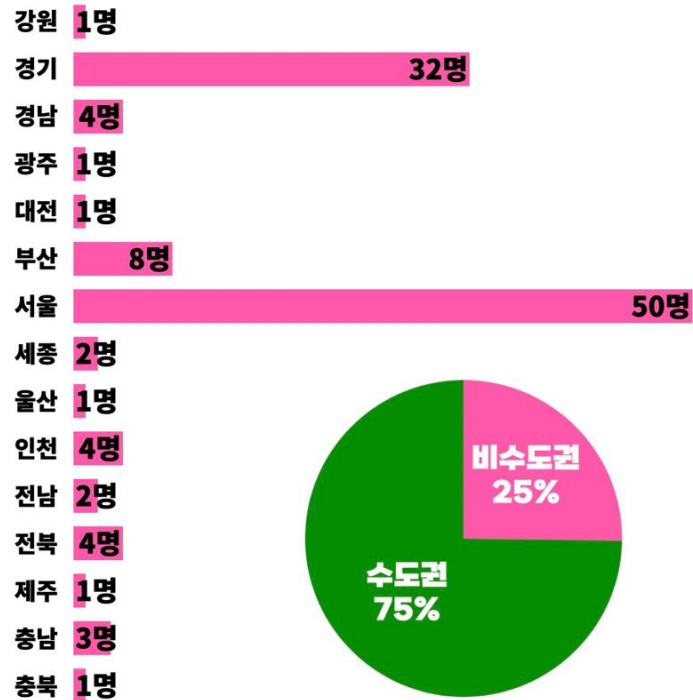


[그림3-8] 2011~2022년 예술활동증명 분과별 심의위원 연령대 분포(평균 55세)



- 지역별로는 수도권 심의위원이 75%, 비수도권 심의위원 비율이 25%를 차지하고 있음. 심의위원 또한 수도권의 비중이 큼.

[그림3-9] 2011~2022년 예술활동증명 분과별 심의위원 지역별 분포



#### 1-3-2. 예술활동증명 협력 협·단체 현황

-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력 협·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을 추가하여 심의기관을 확대하여 운영 중(신진예술인, 행정심의에 한해). 2021년 2월 서울을 제외한 광역문화재단에 요청하여 신청을 받았고(총 14군데 재단이 신청), 지역과의 협의를 거쳐 10개 지역문화재단을 선정함. 2022년 6월 8일 현재 일시 업무 보류 중인 3곳 - 부산, 전북, 충북 - 을 제외한 총 7개의 지역문화재단이 신진예술인 행정심의를 맡고 있음(최근 전북과 충북은 다시 심의 재개).

[표3-7] 예술활동증명 협력 협·단체 지정 및 추진 현황(2022년 6월 현재)

구분		지정현황	사업추진현황	비고
기관	부서			
서울문화재단	-	(미신청)	-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지정	-	심의 일시보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지정	접수	
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지정	접수+심의(신진예술인)	

광주문화재단	예술복지팀	지정	접수+심의(신진예술인)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	지정	접수	
울산문화재단	-	(미신청)	-	
강원문화재단	교류협력팀	지정	접수+심의(신진예술인)	
충북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지정	접수	심의 일시보류
충남문화재단	-	(미신청)	-	
경기문화재단	경기에술인지원센터	지정	접수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지정	접수	심의 일시보류
전라남도문화재단	문화복지TF팀	지정	접수+심의(신진예술인)	
경북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지정	접수+심의(신진예술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	지정	접수+심의(신진예술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지원팀	지정	접수+심의(신진예술인)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지정	접수	

[표3-8] 예술활동증명 협력 협·단체 심의 현황(2022년 6월 8일 기준)

구분	인천	광주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산	전북	충북	합계
신청	119	55	54	67	61	105	52	19	110	59	701
완료	34	33	15	17	21	20	11	13	73	31	268
미완료	21	12	10	23	18	20	11	6	37	11	172
진행중	61	10	29	27	22	65	30	-	-	17	261

## 2. 예술활동증명 제도 관련 쟁점

### 2-1. 속도

- 현장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증명 관련 가장 큰 불만이 바로 심의 ‘속도’ 문제임. 코로나19 이전 4~7주 소요되던 기간이 2021년 평균 89일(12~13주)로 늘어났음. 2022년 신청자의 경우 15~20주 이상 걸릴 수 있다고 공지 중임.

[그림3-10] 2021년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의 신청방법별 평균소요일



- 지자체의 예술인 재난지원금, 예술인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으로 예술활동증명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이유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심의 소요 기간의 증가로 복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예술인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임.
-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적정 소요 시간을 약 5주 정도라고 대답함. 한편,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한 예술인들의 불만은 정량적인 심의 소요 시간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길어지는 심의 소요 시간 동안 적절한 정보 - 현재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해 있으며 앞으로 남은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 를 충분히 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 현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단계를 안내하고 있으나 단계 구분이 덜 세분화되어 있어, 정보 제공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 심의 관련 인력 충원, 예술활동증명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한 심의기간 단축 방안 마련과 함께 예술인들의 심리적인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 있음.

## 2-2. 범위

-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사업의 참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임. 이를 위해 직업 예술인 여부, 현재 활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임. 예술활동증명은 ‘누가 예술인인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술인을 복지사업의 참여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임.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2. 1. 18.] [법률 제18777호, 2022. 1. 18., 일부개정]

#### 제2조(정의)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이 곧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으로 정의되어 있어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 필요한 상황. 이로 인해 사회 보험료 특례, 산재보험료 특례, 예술인신문고 특례와 같이 해당 사업의 참여를 위해 임시로 예술활동증명 심의<sup>9)</sup>를 하기도 함.
- 예술활동증명의 범위는 결국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복지정책의 대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임.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의 정의와 무관하게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운영된다면(비직업예술인의 유입이 커진다면), 예술활동증명 제도뿐 아니라 <예술인 복지법>까지도 무력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임. 예술활동증명이 곧 예술인에 대한 라이선스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예술활동증명의 대상 범위, 즉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대상으로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의 범위를 고려할 필요 있음.
- 예술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2년 9월 25일 시행 예정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예술인 정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6호, 2021. 9. 24., 제정]

#### 제2조(정의)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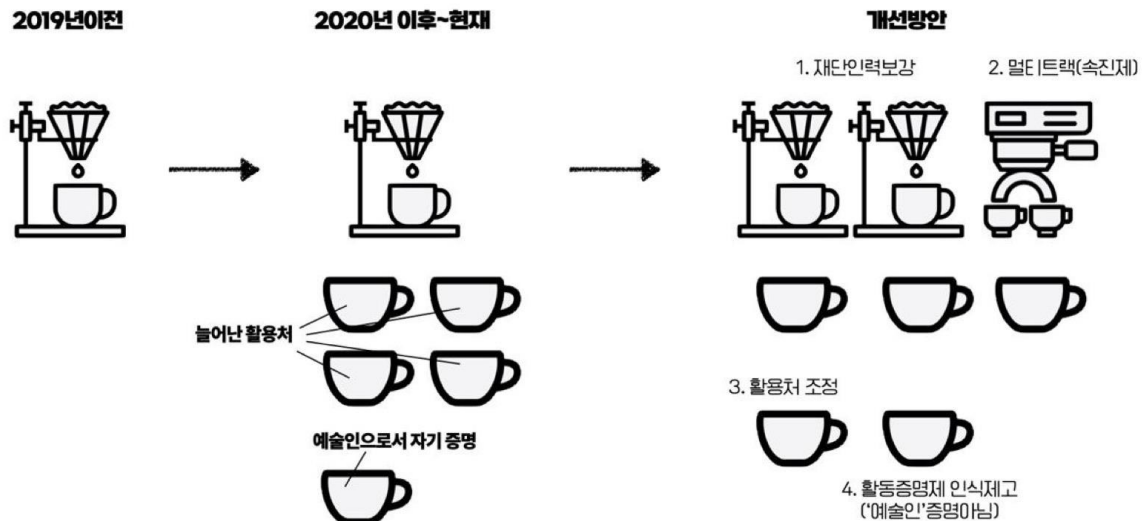
-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9) 특례를 통해 참여하는 해당 사업 외 다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완료해야 함.

## 2-3. 절차

-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의 간소화는 심의기간의 문제와 맞물려 쟁점이 되고 있음.

[그림3-11] 예술활동증명 심의과정(절차) 개선방안 ;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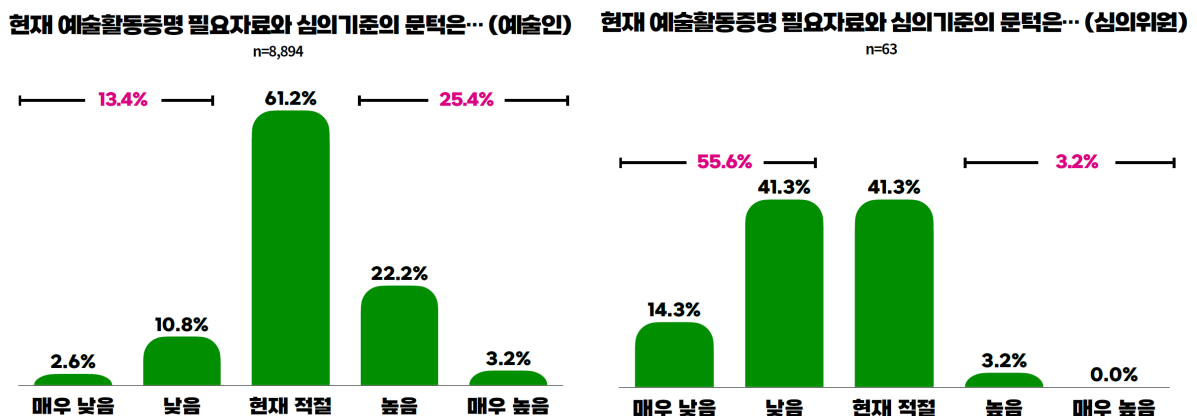


- 심의절차 관련 쟁점은 다음과 같음. ‘행정심의 중심으로 통합/간소화 가능성’, ‘행정심의 혹은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한 속진제 도입의 가능성’, ‘예술활동증명 갱신 시 증명 기간 확대 및 갱신 횟수에 따른 면제(종신제) 방안’ 등임.
- 심의 소요 시간의 단축을 위한 단기적인 절차 개선방안은 재단 행정인력의 보강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정규직 6명의 행정인력이 행정심의와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인데, 산술적으로는 행정인력이 2배 늘어난다면 속도 또한 2배로 빨라질 수 있음.
- 심의절차 관련 쟁점에 대한 연구에서의 검토 결과,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 심의로 구성된 절차 중의 하나를 생략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음. 행정심의 중심으로의 통합은 예술활동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판단을 행정인력에 모두 맡기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행정인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임. 속진제도 마찬가지로, 행정심의 혹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의 속진제가 도입되려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매개로 한 예술 활동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이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임.
-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예술활동증명 갱신과 관련하여 기간 확대와 갱신 횟수에 따른 면제(종신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5+5+10’으로 표현되는 심의절차 개선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심의속도 개선과 함께 예술인들의 부담도 줄어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4. 기준

- 예술활동증명 심의기준의 문제는 심의 소요 기간(속도)과 함께 예술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쟁점 중의 하나임.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심의기준을 낮춰서 직업예술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증명으로 인해 예술인 복지정책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자는 주장과 현재의 기준이 높지 않아 정작 복지가 필요한 전문예술인이 피해를 볼 수 있기에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함.
- 세부적으로는 장르별 실적인정 기준의 문제(인정 범위, 세부 기준, 유효기간 등), 변화하는 예술환경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술활동의 인정 문제, 온라인 기반의 예술활동, 실적증명 방식, 직업예술활동과 생활예술활동과의 구분이 힘든 경우, 전문가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임.
- 설문조사에서는 예술인들과 심의위원들 간의 인식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3-12] 예술활동증명 심의기준에 대한 예술인·심의위원 설문조사 결과



- 보완 및 미완료와 관련하여 실적인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문의가 많지만, 이들 사례를 일일이 확인하여 일반화하는 과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음. 실제로 미완료 사례의 약 3분의 2 정도가 활동 실적 자료 미비라는 사업담당자들의 이야기를 고려할 때, 각 사례의 보완 및 미완료의 이유가 장르별 실적인정 기준의 문제 혹은 새로운 방식의 예술활동에 대한 인정/불인정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 결국 이러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의 문제는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임. 심의위원회 내부 논의를 강화하는 한편, 예술인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예술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5. 지역

- 지역과 관련한 예술활동증명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임.
  - 첫 번째는, 예술활동증명의 속도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재단 등이 함께 심의를 진행한다면 (지역 이관을 통한 심의 분산) 예술활동증명 심의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임. 지역분권 논의, ‘지역 예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립 논의 등과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내용
  - 두 번째는, 지역에서 예술활동증명 DB에 접근/조회/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임. 예술활동증명을 활용한 지역 예술인 사업이 늘어나면서 요청되는 지점임. 예술인 동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함.
- 심의지역 이관과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지역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동일한 잣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준비가 필요할지(심의위원 풀 공유 등), 지역별 심의 행정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및 조직의 확보 등 사전 준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 IV. 예술활동증명 제도 관련 의견수렴

---

1. 그룹인터뷰
2. 설문조사
3. 현장 예술인 간담회
4.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 1. 그룹인터뷰

### 1-1. 그룹인터뷰 개요

#### 1-1-1. 그룹인터뷰 진행 현황

- 그룹인터뷰는 2022년 3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이루어짐. 사업담당자 그룹,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그룹,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그룹, 관련 협·단체 그룹, 심의위원 그룹 등 총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그룹 인터뷰 참여자는 총 61명이었음. 그룹인터뷰 별 1~2인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록하였음. 인터뷰 소요 시간은 2시간 내외임.

[표4-1] 그룹인터뷰 개요

구분	일시	참여자(수)	비고
사업담당자 그룹	2022.03.25	5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담당자, 온라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그룹	2022.04.21	4명	20~30대, 음악·미술, 온라인
	2022.04.22	5명	60~70대 그룹, 오프라인(부산역)
	2022.05.13	4명	온라인
	2022.05.18	5명	온라인
	2022.05.19	4명	온라인
	2022.05.25	5명	온라인
	2022.06.13	4명	장애예술인 그룹, 오프라인(이음센터)
관련 협·단체 그룹	2022.05.04	5명	오프라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미완료자 그룹	2022.04.27	5명	온라인
심의위원 그룹	2022.05.27	5명	온라인
	2022.06.02	5명	온라인
	2022.06.30	5명	온라인
합계		61명	
지역문화재단 그룹	2022.06.09		예술활동증명 협력 협·단체 사업담당자

- 예술활동증명 협력 협·단체로 참여 중인 지역문화재단 사업담당자들과의 간담회는 그룹 인터뷰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으나, 지역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간담회의 발언 내용을 분석 대상에 함께 포함함. 간담회에는 7개 지역문화재단이 참여하였음 (인천, 광주,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제주).
-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함. 하지만 인터넷 환경이 낮은 원로예술인 그룹과 관련 협·단체 그룹, 장애예술인 그룹은 오프라인으로 인터뷰 진행. 인터뷰 장소는 참여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부산역(KTX) 회의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음센터에서 진행함.

- 그룹별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은 연령대, 장르,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배분하려고 노력함. 심의위원의 경우에는 15개 세부 장르별 각 1인씩을 인터뷰에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2020년과 2021년에 급격하게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늘어난 20-30대, 음악과 미술 장르에 해당하는 4명을 별도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함.

구분	인원(수)
장르별(예술인 36명)	문학 8명, 미술 7명, 사진 0명, 건축 2명, 음악 6명, 국악 2명, 무용 2명, 연극 4명, 영화 1명, 연예 2명, 만화 2명
연령별(예술인 36명)	20대 5명, 30대 18명, 40대 5명, 50대 2명, 60대 2명, 70대 4명
성별(예술인 36명)	남 20명, 여 16명

#### 1-1-2. 그룹인터뷰 내용

- 그룹인터뷰는 연구진이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중심으로 진행함. 질문 내용은 사전 자문회의 및 선행연구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한 예술활동증명 제도 관련 쟁점 및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인터뷰에서는 사전 질문지의 내용을 포함하되, 예술활동증명 제도와 관련하여 폭넓은 내용을 다루려고 했음. 심의위원 그룹, 관련 협·단체 그룹 등은 그룹별 특징에 맞는 별도의 질문을 구성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연구 그룹인터뷰 질문지(예술인)
<p>질문1. 예술활동증명 심사에 걸리는 시간, 과정, 결과에 만족하십니까?</p> <p>질문2. 4주~7주 정도 소요되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질문3. 심사위원의 심사내용,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p> <p>질문4. 활동증명 방법을 '예술활동 수입 / 예술활동 실적'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p> <p>질문5. '예술활동 수입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p> <p>질문6. 자료 보완요청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자료 보완에서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p> <p>질문7.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예술활동 수입(납세)'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질문8. 지역문화재단이 예술활동증명 관련 예술인의 개인정보를 조회,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질문9. 생활예술인과의 구분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문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 1-1-3. 그룹인터뷰 코딩 분류

- 그룹인터뷰의 내용의 분석과 반영을 위해 그룹인터뷰 녹취록을 코딩을 통해 분류함. 총 259개의 인용 문장을 주제별, 활용도별로 코딩 분류하였고, 이를 통해 예술인, 사업담당자, 심의위원의 의견을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도 개선방안 도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함.

[그림4-1] 그룹인터뷰 코딩 분류



- 연구진은 사전 자문회의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파악한 예술활동증명 제도 관련 쟁점 - 범위, 절차, 속도, 기준, 지역, 기타 - 을 중심으로 그룹인터뷰 내용을 구분하였음(주제 구분).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발언의 내용을 각각 중요한 제안(제안)과 중요한 비판(비판), 새로운 발견(발견)과 일반인용(기타)으로 구분했으며, 또한 각각의 발언 내용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했음.

[표4-2] 그룹인터뷰 스크립트 코딩 내용(주제 구분)

구분	내용
범위	예술활동증명 대상의 범위와 경계
절차	예술활동증명의 행정적 절차 (속도 관련 제외)
속도	예술활동증명의 처리 속도
기준	예술활동증명의 심의기준, 세부 분야별 기준
지역	예술활동증명 업무의 지역 협업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표4-3] 그룹인터뷰 스크립트 코딩 내용(활용도 구분)

구분	내용
중요한 제안(제안)	반드시 언급되고 반영 고려해야 할 제안
중요한 비판(비판)	반드시 언급되고 반영 고려해야 할 비판
새로운 발견(발견)	몰랐던 사실에 대한 언급
일반인용(기타)	기타 인용할 언급들

- 주제별, 활용도별, 코로나19 상황별 그룹인터뷰 코딩 결과는 아래와 같음. 전체적으로는 그룹인터뷰 횟수 13회에 62명이 참여하였으며, 인터뷰 내용 중 총 259개의 문장을 인용하였음.

[표4-4] 그룹인터뷰 코딩 수치(전체)

그룹인터뷰 횟수	참가자(명)	코딩 인용 문장
13회	61명	259개

[표4-5] 그룹인터뷰 코딩 수치(주제별)

	범위	절차	속도	기준	지역	기타
인용 문장	52개	80개	22개	73개	29개	3개

[표4-6] 그룹인터뷰 코딩 수치(활용도별)

	제안	비판	발견	기타
인용 문장	80개	69개	90개	20개

[표4-7] 그룹인터뷰 코딩 수치(코로나19 상황별)

	유관	무관
인용 문장	11개	248개

## 1-2. 그룹인터뷰 코딩 결과 ; 쟁점별 분류

### 1-2-1. 속도

- 그룹인터뷰 내용 중 속도와 관련한 발언은 총 22건이 있었음. 이 중 비판에 해당하는 것은 16건, 제안에 해당하는 것은 6건이었음. 비판 의견은 대부분이 심의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었음(16건 중 14건에 해당).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다른 행정업무의 속도에 비해 길다거나 등록된 음원 등 확실한 실적을 제시한 경우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다는 의견 정도가 근거로 제시되었음.
- 속도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심의과정 정보 공유에 대한 의견이었음. 비판 내용 중 3건, 제안 내용 중 4건 등 총 7건의 발언이 (소요된 시간에 대한 불만에 더해) 정보 공유에 관한 내용임. 내가 어느 심의단계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등 심의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조급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다고 얘기하였음. 이는 속도 문제의 해결이 물리적인 심의기간을 축소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공유)을 통한 심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을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
-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심의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에 대한 의견이 4건으로 가장 많았음. 이 외에는 행정심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건, 그리고 심의 전산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이 1건 있었음. 심의 전산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제출자료(첨부자료)의 형식이 너무 다양하여 첨부파일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는 심의위원의 의견이었으며, 대부분 심의위원이 동의하는 내용이었음.

[표4-8] 그룹인터뷰 쟁점별 코딩 내용 ; 속도

활용도	코로나19	그룹	내용
01	비판	무관	예술인 심의기간 불만족 : 4~7주는 길다고 생각
02	비판	무관	예술인 심의기간 불만족 : 다른 행정업무 속도에 비해 길다고 생각
03	비판	무관	예술인 심의기간 불만족 : 12주 정도 걸림
04	비판	무관	예술인 심의기간 불만족 : 4~6주 정도 적합
05	비판	무관	예술인 심의기간 불만족 : 밴드 멤버들이 같이 신청했는데, 한 멤버가 오래 걸림. 지원사업 마감시기와 겹쳐져서 힘들었음
06	비판	유관	예술인 심의기간 불만족 : 갱신 때 예상보다 심의가 오래 걸려 지원사업에 참여 못함
07	비판	무관	예술인 심의기간 불만족 : 12주 이상은 길다고 생각. 신청 두 달 후에 보완 요청이 오는 지인 있었음. 지원사업 신청에 타격
08	비판	무관	예술인 심의기간 불만족 : 시스템 보완 필요
09	비판	유관	장애예술인 심의기간 불만족 : 보완요청도 없고, 몇 달 동안 진행 중이라는 화면만 보임
10	비판	유관	예술인 심의기간 불만족 : 3번째 갱신인데 16주 반이 걸림.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등 지원사업 참여 못함

11	비판	무관	장애예술인	심의기간 불만족 : 5주 이내였으면 함
12	비판	무관	장애예술인	심의기간 불만족 : 3주 정도였으면 함
13	비판	무관	예술인	심의기간 불만족 : 등록된 음원으로 확인하는 경우 2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14	비판	무관	예술인	심의기간 불만족 : 창작지원금 시기를 놓친 적 있음
15	비판	유관	예술인	심의가 진행되는 5개월 동안 구체적인 심의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없었음
16	비판	무관	예술인	심의 진행 상황을 개인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함. 별도 안내 아쉬움
17	제안	무관	심의위원	처리 진행 상황 정보 공유 중요성 : '최대 3개월, 최대 6개월' 걸릴 수 있다는 시간을 예술인에게 얘기해줄 필요 있음
18	제안	무관	예술인	처리 진행 상황 정보 공유 중요성 : 문체부에 전화까지 한 적 있음. 진행 상황 정보가 카톡 알람으로 왔으면 함
19	제안	무관	예술인	심의기간은 적절함. 심사과정, 방법, 심의위원 등이 공개되면 4주~7주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함
20	제안	무관	예술인	처리 진행 상황 정보 공유 중요성 : 내가 어느 단계인지를 문자 알람 등으로 알려주면 조금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을 것임
21	제안	무관	예술인	행정심의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행정심의 인력 늘렸으면 함
22	제안	무관	심의위원	심사 전산시스템 개선 : 제출자료 형식 다양, 첨부파일을 일일이 열 어야 함. 첨부파일 등 제출 서류 확인 방식 개선 필요

## 1-2-2. 범위

- 범위와 관련한 총 52건의 발언 내용 중 발견에 해당하는 발언은 28건이었으며, 비판에 해당하는 발언이 8건, 제안이 13건, 기타 발언은 3건이었음.
- 범위와 관련해서는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의 구분 문제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음(21건). 이 중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3건이었음. 구분이 필요한 주요한 근거로는 애초 제도의 취지가 전업예술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관문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 가장 많았음. 반면에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구분이 무의미하며, 나아가 구분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존재함(8건). 정량평가로 구분해 내기 어려운 측면, 전업 여부를 따지는 것이 어려운 예술환경에 대한 지적도 있었음. 기준을 높이더라도 구분은 여전히 모호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제시됨(6건). 장애예술인 대상의 FGI를 별도로 추진한 배경도 있지만, 심의위원 중에서도 장애예술인 심의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있었음. 장애예술인의 경우 장애인 예술활동의 창작환경, 장애인의 생활환경,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별도의 트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의위원의 경우 장애인의 예술활동에서 생활예술과 전업예술의 구분이 더 쉽지 않음을 지적하며 별도 심의 기준이 필요함을 지적함.
- 게임, 웹소설과 같은 장르, 인디 씬 작가 등의 활동 실적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6건). 산업의 특성, 장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 13건의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트랙과 심의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3건), 장르 카테고리 세분화 및 신규 장르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3건), 예술활동증명 완료 기준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2건) 등이 제시되었음. 이 외에도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단순히 예술활동증명 갱신만을 위해 활용할 것이 아니라 예술활동 경력, 포트폴리오 관리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표4-9] 그룹인터뷰 쟁점별 코딩 내용 ; 범위

	활용도	코로나19	그룹	내용
01	발견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신청 이유 : 심리상담
02	발견	무관	협·단체	표지에 작가 이름이 표기되지 않은 일러스트레이터, 텀블벅을 통해 작품을 판매하는 예술인 포함 인디 씬에서 활동가는 작가들은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03	발견	무관	심의위원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 : 국악 분야 활동증명 관련하여, (생활예술인이 낸 실적에 대해) 최소 5만 원이라도 공연 관련 수입증명을 하라는 의견을 많이 냄
04	발견	무관	심의위원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 : 국악 분야에서 미완료인데, 다른 분야에서 완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생활예술인들을 어떻게 구분해 내느냐가 어려운 과제
05	발견	무관	심의위원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 : 지역 생활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증명 신청이 많음. 구분이 필요함
06	발견	무관	심의위원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 : 장애인 무용 관련하여 (장애인 전문 무용수 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발표회 출연을 실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있음.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심의기준 별도 필요
07	발견	무관	미완료예술인	웹소설 장르 예술활동 미인정 사례 : 문학작품에 대한 자료 미비 등에 대해 공모전 포스터 등 제출했으나 2차례 반려, 미완료됨
08	발견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신청 이유 : 산재보험 가입
09	발견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신청 이유 : 창작지원금과 예술인패스
10	발견	무관	심의위원	예술활동의 특성상 실적인정의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
11	발견	무관	심의위원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 : 장애예술인을 비장애예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심의하는 것의 어려움
12	발견	무관	장애예술인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변화와 예술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13	발견	무관	심의위원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 : 전수자, 이수자, 생활예술인이 복합적인 상황이 있음. 전통예술 관련 특례 조항 개선 필요
14	발견	무관	심의위원	예술활동 수입으로만 증명방식을 통일하는 것은 안 됨
15	발견	무관	심의위원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 :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정량적인 활동 실적만으로 전업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심의위원 정성평가 필요
16	발견	무관	심의위원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 : 예술활동증명 수혜 대상이 전문(전업)예술인이 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 필요함
17	발견	무관	예술인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 : 신진, 생활, 전업예술인의 구분에 따른 실효성있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
18	발견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신청 이유 : 예술인 복지혜택 신청
19	발견	무관	예술인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에 반대 : 지망생들의 예술활동 도전을 차단할 수 있음

20	발견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의 문턱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함 : 기존 예술인, 경력 단절 예술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
21	발견	무관	예술인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 : 제도, 기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구분이 필요
22	발견	무관	예술인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 : 소득으로 예술활동증명 시 양적평가 기준 심의 개선 필요
23	발견	무관	예술인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 : 소득 기준, 실적 기준
24	발견	무관	예술인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에 반대 : 실적과 활동경력이 쌓이는 과정 중 어떤 시점이 전업예술인이 되는 시점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25	발견	무관	예술인	증빙이 어렵지만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필요
26	발견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의 실효성 확대 필요 : 실질적인 혜택이 많아져야 더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음
27	발견	유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신청 이유 : 타 지원사업 신청 조건
28	발견	무관	예술인	예술인 복지, 지원정책이 예술활동증명으로 너무 집중되고 있음
29	비판	무관	협·단체	게임이 문화예술 장르로 인정받지 못해서 게임에 들어가는 음악, 미술, 스토리, 영상 등도 예술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게임 내 예술활동에 대한 논의, 인정이 필요
30	비판	무관	협·단체	보완요청, 미완료 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31	비판	무관	협·단체	실적인정 범위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 : 동일한 자료를 제출한 두 작가가 한 명은 완료, 한 명은 미완료된 경우가 있음(웹소설)
32	비판	무관	예술인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에 반대 : 다양한 협업 가능성 없애지고, 전업예술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문턱이 될 수 있음
33	비판	무관	예술인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에 반대 : 문학의 경우 등단을 통해 전업 여부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짐. 전업/생활예술인의 제도적인 구분은 등단제도 외부의 좋은 예술인을 찾는 것과 역행
34	비판	무관	심의위원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의 모호함 : 정량으로만 평가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갈등의 여지가 생김
35	비판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기준을 높이는데 찬성
36	비판	무관	예술인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에 반대 : 예술 자체가 그렇게 구분될 수 없음. 전업예술인도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음
37	제안	무관	협·단체	게임에서도 영화나 연극 장르의 협업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창작 활동이 이뤄지고 직업적 구분이 가능함. 게임 장르의 세부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예술활동 인정이 필요
38	제안	무관	장애예술인	장애예술인의 예술창작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문턱을 낮출 필요 있음
39	제안	무관	심의위원	장르 카테고리 세분화 : 대중예술(스트리트 댄스 등)와 일반 무용 심의 구분 필요
40	제안	무관	협·단체	게임일러스트의 경우, 일러스트로 인정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함. 판례들이 모여서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함
41	제안	무관	심의위원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 : 생활예술 영역에서 꾸준히 신청하는 경우 있음. 제도의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형성 필요
42	제안	무관	심의위원	예술활동증명 완료 기준을 높일 필요 없음. 예술활동증명 자체가 특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님.
43	제안	무관	예술인	장애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트랙 필요 : 생활환경 및 창작환경 차이

44	제안	무관	예술인	장애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트랙 필요 : 장애 유형에 따른 접근 필요
45	제안	무관	심의위원	전통 분야 특례 기준 개선 : 전수증, 이수증 인정에 대해 국악, 전통무용 간 협의 필요
46	제안	무관	협·단체	홈페이지에 Q&A 있었으면 함.
47	제안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의 문턱은 낮추고 이후 창작지원금이나 다른 지원사업심의시 전문성 평가하는 방식 제안
48	제안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과 경력정보시스템의 역할 : 예술활동 경력에 대한 업데이트, 관리로 이어져야 함
49	제안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과 경력정보시스템의 역할 : 예술활동증명 갱신을 위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었으면 함
50	기타	무관	예술인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분 무의미
51	기타	무관	예술인	신청 기준(카테고리) 관련 더 명확한 안내 혹은 세분화된 카테고리 필요
52	기타	무관	예술인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구分的 어려움 : 기준을 높이더라도 구분은 여전히 모호할 것임

### 1-2-3. 절차

- 절차와 관련한 발언은 총 80건. 이 중 발견에 해당하는 것이 32건, 비판에 해당하는 발언은 23건이었으며, 제안은 20건, 기타는 5건으로 분류하였음.
- 장르별 협·단체에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 의견이 많았음. 총 14건의 관련 발언 중 반대가 8건이었고, 명시적으로 찬성한 경우는 2건 정도였음. 나머지는 장르별로 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 제한된 조건(인력지원 등)하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음. 반대의 주요한 근거로는 협·단체의 대표성이 떨어지고(장르별로 여러 협·단체가 있는 경우도 많고, 최근 젊은 예술인들은 협·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 전문성 또한 확인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음.
- 예술인들이 절차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은 증빙서류의 준비와 관련된 것이었음. 제대로 된 계약관계 없이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아 활동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본명과 활동명을 섞어서 쓴 경우 활동 실적을 모두 인정받는 데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음. 보완 및 미완료 시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한다는 의견도 여러 건 있었음. 또한 예술인들이 많이 언급한 부분은 갱신 시 조금 완화된 기준이나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하자는 제안이었음.
- 절차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심의를 담당하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음. 심의위원들은 심사의 양(건수)과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예측이 힘들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제시했음. 첨부파일의 형식 등이 일정하지 않은데다 일일이 내려받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함. 실제로 많은 심의위원이 현실적으로 심의속도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첨부파일 문제를 지적하였음. 이 외에도 심사의 양과 투여되는 시간에 비해 심의사레비가 부족한 부분 등이 심의위원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었음.

- 장애예술인·고연령대의 예술인의 조건에 맞는 정보전달 및 신청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음. 장애예술인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고 방문 접수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장애 유형에 맞도록 신청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장애예술인의 경우 방문 접수 시 지역의 문화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고연령대 예술인의 경우도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접수가 여의치 않아 가족, 지인 혹은 지역문화재단의 도움을 받아 신청한 경우가 많았음. 또한 예술활동증명 및 예술인 복지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보다는 동료 예술인이나 협·단체를 통해 듣는다는 의견이 많았음.
- 절차와 관련한 의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실무인력의 문제와 만나게 됨. 사업담당자들은 절차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업무의 과다를 호소하였으며, 지역 재난지원금 배분 등의 조건으로 인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행정심의회와 민원처리, 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지원까지 감당하다 보니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음.

[표4-10] 그룹인터뷰 쟁점별 코딩 내용 ; 절차

발견	코로나19	그룹	내용
01	발견	무관	예술인 원로예술인 신청 절차에 대한 어려움
02	발견	무관	예술인 지역문화재단 등의 개인정보이용 반대
03	발견	무관	예술인 지역문화재단 등의 개인정보이용 반대
04	발견	무관	예술인 지역문화재단 등의 개인정보이용 동의
05	발견	무관	예술인 지역문화재단 등의 개인정보이용 동의
06	발견	무관	예술인 지역문화재단 등의 개인정보이용 동의 ;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조건 성립 시
07	발견	무관	예술인 지역문화재단 등의 개인정보이용 동의 ; 필요에 따른 선택사항으로 하자
08	발견	무관	미완료예술인 미승인 대상 예술인 처리 시 개별 사례에 보다 적합한 안내 문구 필요
09	발견	무관	심의위원 심사 전산시스템 개선 ; 지난 심사 재열람 기능 필요
10	발견	무관	심의위원 심의관련 개선 사항 ; 심사량, 심의일정 시스템(룰) 개선 필요
11	발견	무관	심의위원 심의관련 개선 사항 ; 심사량, 심의일정 시스템(룰) 개선 필요
12	발견	무관	심의위원 심사 전산시스템 개선 ; 첨부파일 등 제출서류 확인 방식 개선
13	발견	무관	심의위원 심의 관련 개선 사항 : 분과별 세부 내부 규정 재정립 후 공식화 필요, 제출서류 양식 개선 필요
14	발견	무관	장애예술인 장애 유형에 따른 신청 시스템 개선 필요
15	발견	무관	심의위원 행정심의 담당하는 실무인력 충원 필요
16	발견	무관	예술인 장르별 협·단체 심의 반대
17	발견	무관	예술인 장르별 협·단체 심의 반대
18	발견	무관	예술인 장르별 협·단체 심의 중립
19	발견	무관	예술인 장르별 특성에 따라 협·단체 심의가 적합할 수 있음
20	발견	무관	예술인 장르별 특성에 따라 협·단체 심의가 적합할 수 있음
21	발견	무관	협·단체 보완 시 추가서류 제출 후 최종 반려됐을 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예술인 의견
22	발견	무관	심의위원 심의관련 개선 사항 : 심사량, 심의일정 시스템(룰) 개선 필요

23	발견	무관	심의위원	심의위원의 연령과 전문성, 신규 장르 심의 어려움은 상관없음
24	발견	무관	예술인	음악장르는 음원 발매 이후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용이하기 때문에 비교적 증명이 쉽다는 예술인 의견
25	발견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허위기제 관련해서 대응이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예술인 의견
26	발견	무관	예술인	갱신, 보완 등의 절차 어려움
27	발견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서류 구비의 어려움 ; 행사 종료 이후 서류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불편
28	발견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서류 구비의 어려움 ; 본명/활동명 섞었을 경우
29	발견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서류 구비의 어려움 ; 계약서를 쓰지 않는 관행
30	발견	무관	예술인	공공기관에 준하는 시스템과 관리가 가능하다면 협회 심사 관련 긍정적 의견
31	발견	무관	예술인	증빙자료 간소화 필요
32	발견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구성, 활동 영역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부재로 인해 심의위원 자격 및 신뢰도에 의문 제시함
33	비판	무관	예술인	고연령대 대상 활동증명 방식 개선 필요
34	비판	무관	예술인	고연령대 대상 활동증명 방식 개선 필요
35	비판	무관	예술인	고연령대 대상 활동증명 방식 개선 필요
36	비판	무관	심의위원	심의사례비의 문제
37	비판	무관	심의위원	심의사례비의 문제
38	비판	무관	사업담당자	복지재단 민원 관련 현황- 인력 충원 필요성
39	비판	무관	사업담당자	복지재단 민원 관련 현황- 인력 충원 필요성
40	비판	무관	사업담당자	복지재단 민원 관련 현황- 인력 충원 필요성
41	비판	무관	사업담당자	복지재단 민원 관련 현황- 인력 충원 필요성
42	비판	무관	사업담당자	복지재단 담당자 활동증명 시스템 개선 필요 의견
43	비판	무관	사업담당자	정량적 자료 검토의 어려움
44	비판	무관	장애예술인	재증명(갱신) 절차 간소화 필요
45	비판	무관	예술인	장르별 협·단체 심의 반대
46	비판	무관	예술인	장르별 협·단체 심의 반대
47	비판	무관	예술인	장르별 협·단체 심의 반대
48	비판	무관	협·단체	재증명(갱신) 절차 간소화 필요
49	비판	무관	예술인	복지재단 업무과중으로 인해 업무 정확성, 신속도 떨어진 사례
50	비판	무관	예술인	이름이 크레딧에 오르지 않는 예술현장
51	비판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서류 구비의 어려움
52	비판	무관	예술인	장르별 협·단체 심의 반대 ; 심의기준, 심의능력 등 신뢰성 우려
53	비판	무관	예술인	심의위원 질적심사 필요성 /심의기준에 대한 명확성 필요
54	비판	유관	미완료예술인	보완 시 추가서류 제출 후 최종 반려됐을 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예술인 의견
55	비판	무관	예술인	심의기간 동안 심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
56	제안	무관	예술인	고연령대에 맞는 정보전달과 신청지원 있었으면 함
57	제안	무관	예술인	고연령대에 맞는 정보전달과 신청지원 있었으면 함
58	제안	무관	미완료예술인	장르 카테고리 세분화 : 기타 추가
59	제안	무관	예술인	지역문화재단 등의 개인정보이용 ; 서울에서의 인력지원 필요
60	제안	무관	장애예술인	장애예술인 대상 방문 신청 절차 필요
61	제안	무관	장애예술인	장애예술인 대상 시스템 개선
62	제안	무관	장애예술인	장애예술인 대상 시스템 개선 ; 복지시스템과 연계

63	제안	무관	장애예술인	장애 유형에 맞는 사업 홍보 필요
64	제안	무관	예술인	장르별 협·단체 심의 반대
65	제안	무관	예술인	장르별 협·단체 심의 반대
66	제안	무관	예술인	장르별 협·단체 심의 중립 ; 장르별로 다를 것임
67	제안	무관	예술인	장르별 협·단체 심의 동의 ; 운영기준을 제시한다면 가능
68	제안	무관	예술인	장르별 협·단체 심의 동의 ; 협회의 전문성 활용하여 시간 단축
69	제안	무관	협·단체	예술활동증명 관련 사례집 제작 제안
70	제안	무관	협·단체	계약서에 내용이 있음에도 별도의 실적 증빙자료 요구
71	제안	무관	심의위원	재신청 (갱신) 절차 간소화
72	제안	무관	예술인	최종 결과에 대한 심의평 추가 제안
73	제안	유관	심의위원	심의사례비의 문제
74	제안	유관	사업담당자	운영지침 바뀔 때마다 실무적인 어려움이 큼. 운영지침 최소화
75	제안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지원대상 범위 확대. 신규, 아마추어와 전문예술인 분리 지원
76	기타	무관	사업담당자	임기가 3년인 심의위원들이 내년(2023년) 기준 상당수 그만두는 상황 신규 심의위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필요
77	기타	무관	사업담당자	갱신 시 절차 간소화 필요
78	기타	무관	사업담당자	예술인의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불확실
79	기타	무관	장애예술인	장애예술인 예증 방문 접수 시 지역 분산 필요
80	기타	유관	사업담당자	코로나 기간 특수성에 맞춘 제도 개선 우려

#### 1-2-4. 기준

- 기준과 관련한 총 73건의 발언 내용 중 발견에 해당하는 발언은 29건이었으며, 비판에 해당하는 발언이 15건, 제안이 27건, 기타 발언은 2건이었음.
- 질문에 포함되었던 '예술활동 수입으로의 기준 통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예술인이 부정적인 의견이었음(관련 발언 8건 중 8건 모두 해당). 현재 예술환경 및 관행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수입의 증명이 어려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예술활동도 많다는 것 등이 이유로 제시됨. 실제로 대부분 예술인이 예술활동 실적으로 신청하는 이유가 수입이 부족하거나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대답함. 한편, 예술활동 수입을 통한 증명을 꺼리는 배경으로 계약서 및 임금내역 외 추가로 실적을 요구해서 또는 수입증명의 경우 유효기간이 실적보다 짧아서라고 답변한 내용도 있음.
- 장르별 구체적인 심의기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이 내용은 세부 기준 개선안에 반영하였음. 전반적인 심의기준과 관련해서는 문턱(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었음. 심의기준을 높이는 근거로는 취미활동 인구(생활 예술인)의 유입 문제와 활동의 지속성이 없어도 예술활동증명 완료가 가능한 현재의 기준에 대한 비판 등이 제시되었으며, 기준을 낮추는 근거로는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에도 복지재단의 사업별 별도의 기준과 심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 배제되는 예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예술활동증명이 곧 ‘예술인 증명’으로 인지되고, 예술활동증명으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 상황에 대한 의견(제안)도 제시됨. 생활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복지·지원체계의 마련, 직업예술인 중 예술활동증명 없이도 지원 가능한 복지·지원사업의 마련 등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으로 쏠리는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임. 예술활동증명의 수요 조절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

[표4-11] 그룹인터뷰 쟁점별 코딩 내용 ; 기준

	활용도	코로나19	그룹	내용
01	발견	무관	예술인	지원방식의 간소화로 20~30대 완료 예술인이 늘어났다고 생각
02	발견	무관	예술인	동료 예술인 심의에 대한 긍정적 의견
03	발견	무관	심의위원	새로운 장르에 대한 증명 기준 또는 장르 분류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심의위원 의견
04	발견	무관	협·단체	예술활동증명 시 수입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
05	발견	무관	협·단체	예술활동 수입증명 통일 시 음악이나 게임 장르처럼 문화산업으로 포함되는 장르에서 수입기준을 충족 못 하는 예술인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06	발견	무관	심의위원	시낭송 대회: 문학 범주인지 공연예술 범주인지
07	발견	무관	심의위원	초단편 영화와 같은 신규 창작물 관련 영화 심의기준 개선 필요
08	발견	무관	협·단체	수입과 실적을 이중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불만
09	발견	무관	협·단체	운영지침 11조에 해외 예술활동의 경우 반려되는 경우가 많음
10	발견	무관	심의위원	예술 방식 또는 형식 변화에 맞춘 심의기준 재정립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심의위원 논의 시스템 필요
11	발견	무관	심의위원	장르별 심의위원 내부 규정에 따른 심의기준 개선 필요
12	발견	무관	예술인	크레딧에 올라가지 않은 성우의 경우 실적증명이 어려움. 계약서 근거로 수입증명함
13	발견	무관	예술인	수입으로만 증명하는 방안에 반대 ;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사회 연대를 기조로 하고 복지에 방점이 찍혀 있는 제도라고 생각
14	발견	무관	예술인	같은 장르에서 신청한 두 건 중 필요한 동일한 안내로 보완 요청, 동일한 내용의 서류 제출 후 승인 결과가 다르게 나온 사례 - 보완 요청 시 개별 사례에 보다 적합한 안내 문구 필요
15	발견	무관	예술인	본인 창작곡을 연극이 아닌 미술관 퍼포먼스로 창작 실현한 경우 예술활동증명에 해당하는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심의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예술인 의견
16	발견	무관	예술인	일러스트 작업을 출판사가 아닌 개인 대 개인 계약으로 진행했을 경우 예술활동증명 미승인된 예술인 사례
17	발견	무관	예술인	그룹(단체)활동 또는 스텝 참여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에서 겪는 어려움 : 개인의 이름이 아닌 팀명으로 활동하는 스트리트 댄서의 경우 포스터 등에 댄서 개인 이름이 기재 되지 않음
18	발견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의 양적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예술인 의견
19	발견	무관	예술인	연극 장르 신청 시 연극 3편이라는 양적평가 기준에 대한 긍정적 의견
20	발견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의 문턱은 높이되 예술활동에 대한 전체 지원은 넓혀 생활예술인과 전문예술인을 별도의 트랙으로 지원하는 방식 제안
21	발견	무관	예술인	지금의 예술 창작 환경 또는 창작자의 철학 등의 이유로 수입으로 증명 기준을 통일할 시 제외되는 예술인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입으로 통일하는 방식 반대
22	발견	무관	예술인	(웹툰) 수입이 아닌 실적으로 증명신청 이유 : 즉각적으로 수입을 증명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존재하고, 작품 준비기간이 긴 장르적 특성 고려

23	발견	무관	예술인	음악장르 예술인의 창작지원금의 긍정적 평가
24	발견	무관	예술인	(영화) 수입이 아닌 실적으로 증명 신청한 이유 : 즉각적인 수입증명이 어렵고, 작품 준비기간이 긴 장르적 특성 고려
25	발견	무관	예술인	(전통미술) 수입이 아닌 실적으로 증명 신청한 이유 : 개인 간의 거래가 많은 특성상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26	발견	무관	예술인	(일반미술) 수입이 아닌 실적으로 증명 신청한 이유 : 전시활동의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적으로 증명하는 게 비교적 쉽다는 의견
27	발견	무관	예술인	그룹(단체)활동 또는 스텝 참여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에서 겪는 어려움 : 클래식 공연에서 앙상블 등 개인 이름이 포스터 등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 다수
28	발견	무관	예술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예술활동을 한 예술인(배우)의 활동 증빙의 어려움 사례
29	발견	유관	심의위원	코로나 기간 동안 출판 등 기회 축소로 인한 예술활동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심의기준에 대한 웹툰장르 심의위원의 부정적 평가
30	비판	무관	미완료예술인	최종 반려 사유와 관련해서 개별 사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 필요
31	비판	무관	미완료예술인	완료/미완료에 일관적 기준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의견
32	비판	무관	협·단체	운영지침에서 주관적 해석 가능한 문구 수정 필요
33	비판	무관	협·단체	갱신 기간 안에 신청했으면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예술활동증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34	비판	무관	협·단체	심의기준의 일관성 없음 비판
35	비판	무관	예술인	수입 기준으로 통일은 불가 ; 예술현장의 관행, 현장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보완 필요
36	비판	무관	예술인	민원 전담팀이 필요한 이유 : 같은 예술인이 보완 서류 관련해서 다른 안내를 받은 경우
37	비판	무관	예술인	신청 카테고리 분류에 대한 부정적 의견
38	비판	무관	예술인	장르 기준으로 하는 활동 분류 기준에 대한 부정적 의견
39	비판	무관	예술인	심의과정 심의위원의 전문성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심의 만족도 평가할 수 없음
40	비판	무관	예술인	그룹(단체)활동 또는 스텝 참여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에서 겪는 어려움 : 팀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스터 등에 개인 이름이 기재되지 않음
41	비판	무관	예술인	심의 과정과 기준에 대해 알고 싶다.
42	비판	무관	예술인	심의 일관성 비판 : 같은 팀 활동 예술가의 다른 결과
43	비판	무관	예술인	소득증명 반대
44	비판	무관	예술인	소득증명 반대
45	제안	무관	미완료예술인	장르 기준으로 하는 활동 분류 기준에 대한 부정적 의견 : 융합, 다원예술 과 같은 복합장르 카테고리 추가
46	제안	무관	미완료예술인	생활예술인을 위한 별도 제도 마련 제안
47	제안	무관	사업담당자	장애예술인을 위한 개별 트랙 필요
48	제안	무관	사업담당자	심의위원 관리 시스템 필요
49	제안	무관	사업담당자	전통장르 특례 기준 개선 필요
50	제안	무관	사업담당자	장르 분류 개선
51	제안	무관	사업담당자	디자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52	제안	무관	장애예술인	심의기준 및 심의위원이 전문성 등 공개
53	제안	무관	장애예술인	생활예술인 전문예술인 구분 기준 제안
54	제안	무관	장애예술인	장애예술인을 위한 개별 트랙 필요



55	제안	무관	장애예술인	장애예술인을 위한 개별 트랙 필요
56	제안	무관	장애예술인	장애예술인을 위한 개별 트랙 필요
57	제안	무관	협·단체	심의위원 (주관적) 질적심사 축소
58	제안	무관	협·단체	운영지침에서 예술활동에 대한 평가와 같은 감정이나 정서적인 것을 건드리는 표현 수정 요구
59	제안	무관	예술인	기본 유효기간 확대
60	제안	무관	예술인	수입증명 통일 반대
61	제안	무관	예술인	신청 장르별 카테고리 세분화
62	제안	무관	예술인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 않음
63	제안	무관	예술인	생활예술 심의기준 제안
64	제안	무관	예술인	생활, 전업예술인의 구분 반대 의견 / 예술활동증명 기준 완화
65	제안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기준 완화
66	제안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기준 높여야 ; 활동의 지속성 확인 필요
67	제안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기준 완화 시 기대효과
68	제안	무관	예술인	현재 소득기준에 대한 예술인 평가 : 높다고 생각함
69	제안	무관	예술인	장르 카테고리 세분화 : 문화기획, 문화예술기획 별도 구분
70	제안	무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의 문턱은 낮추고 이후 창작지원금이나 다른 지원 사업 심의 시 전문성 평가하는 방식 제안
71	제안	무관	예술인	온라인(유튜브) 활동 인정기준 제안
72	기타	무관	사업담당자	예술활동 유/무 구분에 대한 어려움, 신규 장르(애니메이션, 게임) 심의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재단 행정심의 담당자 의견
73	기타	무관	장애예술인	장애예술인의 경우 교육 기회, 발표 기회 등 불평등한 창작 환경에 대한 설명

#### 1-2-5. 지역

- 지역과 관련한 총 29건의 발언 내용 중 발견에 해당하는 발언은 1건이었으며, 비판에 해당하는 발언이 6건, 제안이 14건, 기타 발언은 8건이었음.
- 예술활동증명 심의업무를 지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음. 심의위원들은 지역별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심의 및 민원상담 등을 위한 실무자를 두는 것이 비효율적일뿐더러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원칙과 기준을 흔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지자체 담당자들 또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지역별로 심의위원회를 포함한 심의 관련 체계를 만드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함. 만약 지역으로 이관한다면 운영 예산 확보를 통한 전담 인력의 확충·교육, 심의위원 풀 공유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음.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혹은 신청자의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복지재단 사업담당자와 지자체 담당자들 간의 인식이 엇갈렸음. 지역에서는 예술활동증명 신청자의 민원 대응의 차원에서, 또는 지역 예술인 복지정책의 시행을 위해 원활하게 정보가 공유되었으면 하는 의견이었음. 반면에 복지재단 사업담당자들의 경우 개인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몰입도(활용도)를 높여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었음.

[표4-12] 그룹인터뷰 쟁점별 코딩 내용 ; 지역

활용도	코로나19	그룹	내용	
01	발견	무관	심의위원	개인정보 지역문화재단과 공유 반대 ; 지역 차원의 별도 자료 취합이 바람직함. 예술인 개별 동의 가능할지 의문
02	비판	무관	사업담당자	예증 심의지역 이관 반대 ; 지역별 심의위원회 구성 어려움
03	비판	무관	사업담당자	예증이 복지사업 진입 경로가 아니라 지역 예술인 관련 일반 현황처럼 인식되고 협조 요청이 오고 있는 상황
04	비판	무관	사업담당자	신진예술인 행정심의에 대한 협력 협·단체 업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05	비판	무관	지역문화재단	지역의 고충 ; 사업으로 이관될 경우 인건비 확보의 어려움
06	비판	무관	지역문화재단	지역의 고충 ; 예증 관련 민원 대응이 어려움
07	비판	무관	지역문화재단	예술활동증명 지역 업무 시 협업방식 관련 개선 요청 사항
08	제안	무관	지역문화재단	예술인 복지정책 관련 중앙과 지역의 소통, 협력 강화 필요
09	제안	무관	지역문화재단	예증 심의업무의 지역 이관 시 복지재단 심의위원 풀 공유 및 활용 필요
10	제안	무관	지역문화재단	복지재단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는 지역 담당자 의견
11	제안	무관	지역문화재단	신규, 아마추어와 전문예술인 분리해 지원하는 제도 제안
12	제안	무관	지역문화재단	예술활동증명 지역 업무시 협업방식 관련 개선 요청 사항 : 메뉴얼 제작
13	제안	무관	지역문화재단	개인정보 지역 공유 요청
14	제안	무관	지역문화재단	예술활동증명 지역 업무시 협업방식 관련 개선 요청 사항
15	제안	무관	지역문화재단	예술활동증명 지역 업무시 개선 요청 사항 : 전담팀 구성
16	제안	무관	지역문화재단	예술활동증명 지역 업무시 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한 의견
17	제안	무관	지역문화재단	지역에서 예증 관련 문의가 왔을 때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민원 대응이 어려움 부분 있음. 개인정보 공유 필요
18	제안	무관	심의위원	예증 심의지역 이관 반대 ; 중앙으로 일원화 필요
19	제안	무관	심의위원	심의속도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재단 실무인력 확충이 가장 확실
20	제안	무관	심의위원	지역별 심의위원회 구성하면 원칙과 기준 무너질 수 있음
21	제안	무관	지역문화재단	지역 이관 시 복지재단 심의위원 풀 공유 및 활용 제안
22	기타	무관	사업담당자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또는 신청자 관련 데이터를 지역 심의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3	기타	무관	사업담당자	복지재단 외 기관에서 예증 심의할 경우 완료자, 신청자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음
24	기타	무관	지역문화재단	지역 사업담당자 고충 : 예술활동증명 업무 전담팀 부재로 인해 기존 업무와 병행해야하는 지역 담당자의 업무 과중
25	기타	무관	지역문화재단	지역 사업담당자 고충 : 전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민원이 적음. 기본적인 민원처리도 어려운 상황, 따라서 지역 담당 기관 역할 조정 또는 확대가 필요함
26	기타	무관	지역문화재단	지역 사업담당자 고충 : 특정 지역의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를 하나의 지정 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담당 지역 재배치(분할)가 필요함
27	기타	무관	지역문화재단	고연령대 분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예술활동증명 신청에 있어 10인이상 모일 시 방문 신청 대행과 같은 변화 시도
28	기타	무관	지역문화재단	지역 사업담당자 고충 : 예술활동을 업으로 삼는 자에 대한 판단 여부에 대한 고충
29	기타	무관	지역문화재단	지역 사업담당자 고충 : 지역 심의업무 이행 시 시각 장르 외 심의위원 풀 구성의 어려움 예상

1-2-6. 기타

- 기타 의견으로는 3개의 발언 내용이 해당. 예술활동증명을 지원사업의 조건으로 삼는 사업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비판 1건, 민원 업무의 어려움과 전담팀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내용 1건,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예술활동증명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1건 등이 해당함.

[표4-13] 그룹인터뷰 쟁점별 코딩 내용 ; 기타

	활용도	코로나19	그룹	내용
01	비판	무관	사업담당자	예술활동증명을 타 지원사업 조건으로 삼는 사업 대한 비판
02	기타	무관	사업담당자	예술활동증명 업무에 있어 속도 개선을 고려할 때 행정심의 시 업무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민원과 관련하여 복지재단 내 민원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재단 행정심의 담당자 의견
03	기타	유관	사업담당자	코로나 상황에서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폭증 관련 의견

### 1-3. 그룹인터뷰 결과 ; 시사점

- 그룹인터뷰의 발언 횟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사전 질문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당시의 내용 흐름에 따라 발언의 양이 차이가 나거나 비슷한 견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 정량적 평가는 불가능함.
- 코딩 분류를 통해 핵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주제별, 활용도별 그룹인터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예술인, 사업담당자, 심의위원의 의견을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도 개선방안 도출 등에 활용할 수 있었음.
- 우선, 그룹인터뷰 전체 내용과 관련한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1-3-1. 직업예술인과 전문예술인에 대한 이해

- 그룹인터뷰에서 확인한 것은, 직업예술인과 전문예술인 혹은 전업예술인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쓴다는 점임. 이는 예술인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함. 현행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업(業)’이란 ‘생업’의 의미로서 그 활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
- 직업으로서 예술활동을 전개하려면 고도의 전문적인 직능(skill)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예술인은 ‘전문직’의 특성을 가지지만, 제도화된 자격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또 존재할 수 없기에 직업 집단으로서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은 편임.<sup>10)</sup>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의 범위는 예술활동에 대한 질적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이는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을 다른 직업 집단과 구분하는 데 목적을 둔 실용적인 이유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예술인이라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음.<sup>11)</sup>
- 현행 예술활동증명 증빙 방식은 ‘예술활동 실적’과 ‘예술활동 수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신청한 예술활동 실적과 예술활동 수입의 내용이 직업적 예술활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인정)하는 방식의 심의가 이루어짐. 심의과정에서는 핵심적으로 ‘직업적 예술활동’과 ‘비직업적 예술활동(취미활동 기반의, 이른바 생활예술로 일컬어지는 활동)’의 구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직업전문성’을 판단하게 됨.
- 예술활동증명의 심의는 예술활동에 대한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신청한 예술활동 실적이 직업적 예술활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임. 이를 위해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의 장소, 방식, 횟수, 기간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하는 것임. 그런데 ‘전문예술인’이라는

10)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2012.9.,문화체육관광부) p.43~44

11)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2012.9.,문화체육관광부) p.47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이 표현이 ‘예술인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그룹인터뷰 논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기도 함(프로와 아마추어 구분 등). 이는 나아가 예술활동증명이 이른바 ‘전문예술인’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해하는 측면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음.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있어 ‘전문예술인’이라는 표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1-3-2. 직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과의 구분

- 예술활동증명에서 생활예술인의 유입에 관한 부분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이른바 생활예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생활예술인’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근거는 사실상 없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문화’에 관한 정의를 참조할 수 있음.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에 대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 정의함. ‘생활문화’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정의함. 이를 활용하여 생활예술과 생활예술인을 정의해보면,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예술적 활동’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게 됨.
- ‘생활예술인’을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비직업적 예술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 보임. 생활예술활동이면서 직업예술활동인 경우, 생활예술인이면서 직업예술인으로도 인정받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 다만, 그룹인터뷰에서 언급되는 생활예술·생활예술인은 단순 취미·여가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향후 생활예술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으로써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보임.
- 한편, 현실적으로 예술활동 실적과 수입에 의한 증빙 과정에서 생활예술인을 구분해 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예술활동을 ‘직업예술인이 되는 과정’으로 보고 예술인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소수). 반면 대다수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의 취지상 생활예술인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임.
- 현행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인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이른바 ‘생활예술인’의 사업 참여는 불가능함. 다만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어, 오는 2022년 9월 24일 시행을 앞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다루는 예술인의 정의·범위<sup>12)</sup>가

12) 제2조(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각종학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교 소속 단과대학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전수교육학교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예술인 복지법〉보다 더 광범위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사업에는 생활예술인의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b>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b>
[시행 2022.9.25.] [법률 제18466호, 2021.9.24. 제정]
제2조(정의)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b>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b>
제2조(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각종학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교 소속 단과대학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전수교육학교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5. 직업 예술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맺고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예술인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술 교육·훈련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

### 1-3-3. 예술활동증명의 확산

- 예술활동증명을 활용한 사업이 늘어나고 지역문화재단 등 기관에서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지는(관련하여 개인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상황에 대해서는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과 이를 이용하는 입장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음.
- 제도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① 애초 〈예술인 복지법〉의 목적과 예술활동증명의 취지가 직업예술인의 복지사업 참여의 조건으로 만들어졌고, ② 예술활동증명을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확산하는 것이 자칫 ‘예술활동증명 = 정부 인증 예술인’이라는 오해를 깊어지게 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③ 예술인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였음.
- 반면, 예술활동증명을 통한 복지 및 지원의 혜택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거나(예술인) 지역 차원의 예술인 복지사업을 펼치는 데 용이한 측면(지역담당자)에서 확산에 긍정적인 입장이 많았음.

- 
- 5. 직업예술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맺고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예술인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술 교육·훈련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애초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역 예술인 복지사업의 근거 등으로 예술활동증명이 무한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다만, 이는 그동안의 제도 실행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음.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의 정의에 대한 해석에 따라). 때문에 각종 특례가 생겼으며,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에게는 ‘예술인패스’를 발급하는 등 사실상 ‘자격조건(자격증)’과 같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 지역의 경우도 코로나19와 같은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펼쳐지는 복지사업(재난지원금 지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예술활동증명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해서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202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언급한 ‘지역 예술인 복지지원 기준’ 관련 법령 개정<sup>13)</sup> 내용 및 이번 연구의 제도 개선방안 내용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13) 해당 연구에서는 <예술인 복지법> 내 ‘지역 예술인 복지지원 기준’ 관련 법조항 신설 제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O조의 예술활동증명 제도와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예술인 복지지원 기준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2. 설문조사

### 2-1. 설문조사 개요

#### 2-1-1. 조사개요 및 방법

- 초점집단면접에서 나타난 다양한 논의들을 보완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최근 (2021~현재)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과 현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 설문조사의 주된 초점은 완료 예술인임. 심의위원의 경우 예술인 응답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맥락을 얻기 위해 예술인 설문지의 일부 문항을 동일하게 적용, 시행함.
- 조사개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4-14] 예술활동증명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심의위원
조사대상	2021.1.1. ~2022.7.17일까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60,765명	현(2022년) 심의위원 전체 113명
유효표본수	7,586명(참여율:12.5%)	57명(참여율:50.4%)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2.7.18~8.1.(15일 간)	2022.7.15~8.1.(18일 간)

[그림4-2] 예술활동증명 설문조사 내용 ; 예술인

<b>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인식(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활동증명”은 곧 예술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다”(전혀동의하지않음-전적으로동의, 5점척도)</li> <li>“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조건이다.”</li> <li>“예술활동증명”은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li> </ul>	
<b>예술활동증명 신청 절차, 기준(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분야 구분(11개)의 타당성(더세분화-더통합, 5점척도)</li> <li>예술활동유형 구분(3개)의 타당성(더세분화-더통합, 5점척도)</li> <li>예술활동증명 방법(5개)의 적절성</li> <li>준비했던 서류와 절차 중에 가장 준비하기 어려웠던 것은 무엇? 이유는?</li> <li>현재 예술활동증명 필요자료와 심의 기준의 높낮이(문턱이낮다/문턱이높다)</li> <li>향후 예술활동증명 필요자료와 심의 기준의 바람직한 높낮이(낮아져야/유지돼야/높아져야)</li> <li>공개 예술활동 수입인정 기준(최근 1년 120만원이상, 최근 3년 360만원 이상) 적절성(낮다/적절하다/높다)</li> <li>생활예술경계에 있는 분들의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생각</li> </ul>	
<b>예술활동증명 재신청 절차(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재신청 절차의 적절성</li> <li>재신청 절차의 개선방향</li> </ul>	
<b>심의(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활동증명의 심의위원 구성 원칙(성별/연령대 등)</li> <li>예술활동증명의 심의에 대한 지각(5점척도)</li> </ul>	
<b>예술활동증명의 처리속도(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활동증명 처리속도의 기대수준</li> <li>예술활동증명 처리속도의 적정수준</li> </ul>	
<b>예비개선안 관련(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활동증명의 활용범위</li> <li>예술활동증명제를 통하지 않는 복지제도 진입</li> <li>지역문화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참여</li> <li>예술활동증명을 돕는 동료 예술인 풀의 운영</li> <li>동료증명</li> <li>협단체의 활동증명업무 담당</li> <li>협단체의 예술활동증명 행정 지원</li> </ul>	<b>프로파일링을 위한 문항(1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분야(11개 분야)</li> <li>예술활동유형(창작/실연/기술지원/기획/비평)</li> <li>참여방법(5개 방법)</li> <li>예술활동증명목적(보기개발필요)</li> <li>활동증명소요기간(약 *개월 *주)</li> <li>활동증명소요기간인식(짧았다/적당했다/길었다)</li> <li>관련 협단체 소속여부(소속-활동/소속-비활동/비소속)</li> <li>연령대</li> <li>성별(여성/남성/년바이너리)</li> <li>지역(17개 시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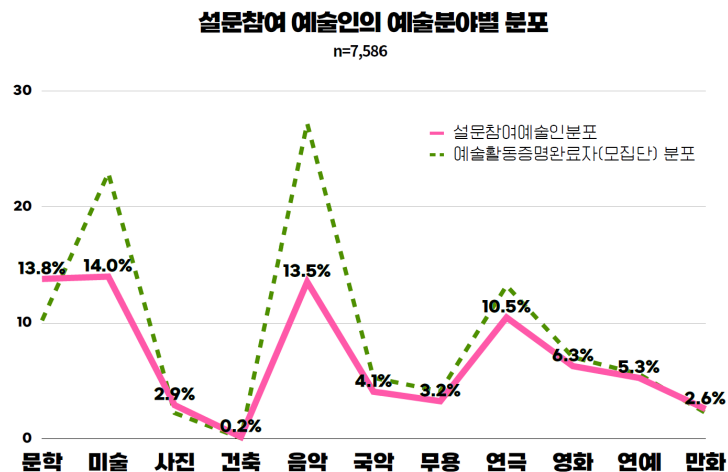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조사내용은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인식’, ‘예술활동증명 신청 절차와 기준에 대한 의견’, ‘예술활동 재신청 절차에 대한 의견’, ‘심의위원의 구성과 심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 ‘예술활동증명 처리 속도에 대한 생각’ 등의 주요 항목과 함께 연구 안팎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예비개선안 중 일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함.
- 심의위원 조사내용은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설문지 일부 문항을 가져와 차이와 방향을 살피기 위해 구성.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인식’, ‘예술활동증명 신청 절차와 기준에 대한 의견’, ‘심의위원의 구성과 심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 ‘예술활동증명 처리 속도에 대한 생각’ 등의 문항으로 구성함.

[그림4-3] 예술활동증명 설문조사 내용 ; 심의위원

<b>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인식(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활동증명”은 곧 예술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다(전혀동의하지않음-전적으로동의, 5점척도)</li> <li>“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조건이다.</li> <li>“예술활동증명”은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li> </ul>
<b>예술활동증명 신청 절차, 기준(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분야 구분(11개)의 타당성(더세분화-더통합, 5점척도)</li> <li>예술활동유형 구분(3개)의 타당성(더세분화-더통합, 5점척도)</li> <li>예술활동증명 방법(5개)의 적절성</li> <li>현재 예술활동증명 필요자료와 심의 기준의 높낮이(문턱이낮다/문턱이높다)</li> <li>향후 예술활동증명 필요자료와 심의 기준의 바람직한 높낮이(낮아져야/유지돼야/높아져야)</li> <li>공개 예술활동 수입인정 기준(최근 1년 120만원이상, 최근 3년 360만원 이상) 적절성(낮다/적절하다/높다)</li> <li>생활예술경계에 있는 분들의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생각</li> </ul>
<b>심의(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활동증명의 심의위원 구성 원칙(성별/연령대 등)</li> <li>예술활동증명의 심의에 대한 지각(5점척도)</li> </ul>
<b>예술활동증명의 처리속도(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활동증명 처리속도의 기대수준</li> <li>예술활동증명 처리속도의 적정수준</li> <li>속도저해의 주요요인이 무엇인가?</li> </ul>
<b>프로파일링을 위한 문항(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분야(11개 분야)</li> <li>관련 협단체 소속여부(소속-활동/소속-비활동/비소속)</li> <li>연령대</li> <li>성별(여성/남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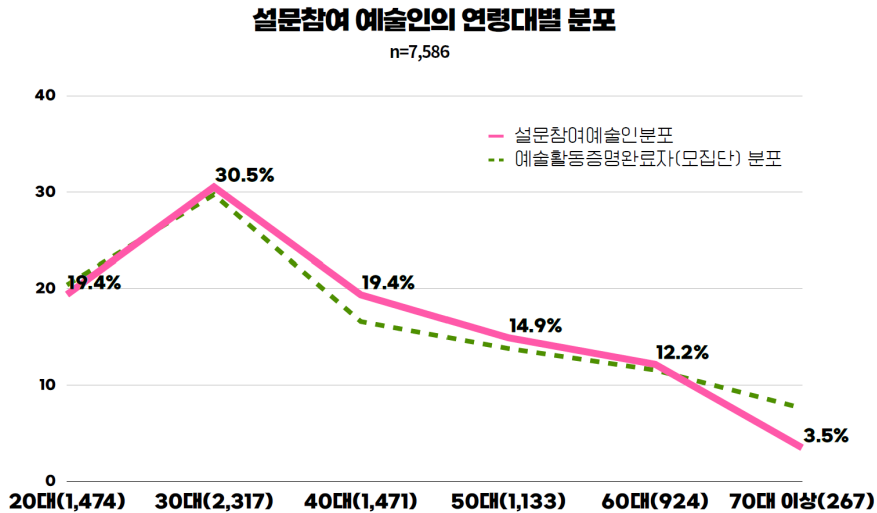
[그림4-4] 설문 참여 예술인의 예술분야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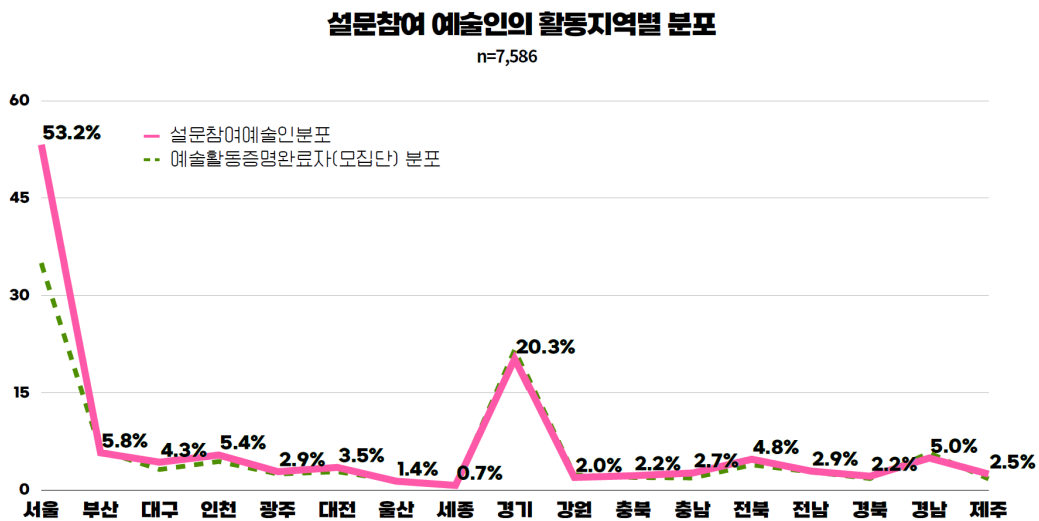
## 2-1-2. 설문 참여자 특성

- 예술분야별, 연령대별, 활동지역별 분포가 현 시점(2022년 8월 5일 기준)의 완료자 누적 분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모집단 대표성에 있어 문제가 없음.

[그림4-5] 설문 참여 예술인의 연령대별 분포



[그림4-6] 설문 참여 예술인의 활동지역별 분포



- 예술분야에서 미술 분야와 음악 분야의 비율이 모집단보다 낮지만, ‘음악’, ‘미술’ 분야의 과대 대표를 다소 완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활동지역에서 서울 지역의 응답 비율이 모집단보다 높게 반영되어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설문 참여 예술인의 상세한 분포는 아래 표와 같음.

[표4-15] 예술활동증명 설문 참여 예술인 분포

구분	빈도	비율
예술분야	문학	1,047
	미술(일반)	1,062
	미술(디자인공예)	351
	미술(전통미술)	293
	사진	220
	건축	11
	무용	246
	음악(일반)	1,027
	음악(대중음악)	1,051
	국악	308
	연극	794
	영화	476
	연예(방송)	398
	연예(공연)	107
	만화	195
예술활동유형	창작	4,637
	실연	2,528
	기술지원	421
예술활동증명 참여 방법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5,494
	예술활동 수입	861
	기준 외 활동 경우	191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1,040
지각된 예술활동증명 소요 기간	길었다	5,429
	적당했다	1,907
	짧았다	250
예술인 중심의 민간 협·단체 소속 여부	소속되어 있고, 적극 참여	2,801
	소속되었으나, 참여하지 않는 편	891
	소속되어 있지 않음	3,894
활동지역 (중복응답)	전국	1,682
	수도권	5,984
	비수도권	3,239
연령대	20대	1,474
	30대	2,317
	40대	1,471
	50대	1,133
	60대	924
	70대 이상	267
성별	여성	4,502
	남성	3,024
	년바이너리	60

- 설문 참여 심의위원의 성별, 연령대별, 예술분야별 분포가 모집단인 전체 심의위원의 특성을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어 대표성에 있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설문 참여 심의위원의 상세한 분포는 아래 표와 같음.

[표4-16] 예술활동증명 설문 참여 심의위원 분포

구분	빈도	비율
예술분야	문학	6 10.5%
	미술(일반)	2 3.5%
	미술(디자인공예)	5 8.8%
	미술(전통미술)	4 7.0%
	사진	2 3.5%
	건축	1 1.8%
	무용	8 14.0%
	음악(일반)	4 7.0%
	음악(대중음악)	5 8.8%
	국악	0 0.0%
	연극	5 8.8%
	영화	5 8.8%
	연예(방송)	3 5.3%
	연예(공연)	2 3.5%
	만화	5 8.8%
예술인 중심의 민간 협·단체 소속 여부	소속되어 있고, 적극 참여	41 71.9%
	소속되었으나, 참여하지 않는 편	10 17.5%
	소속되어 있지 않음	6 10.5%
활동지역 (중복응답)	전국	28 49.1%
	수도권	57 100.0%
	비수도권	12 21.1%
연령대	20대	0 0.0%
	30대	1 1.8%
	40대	5 8.8%
	50대	35 61.4%
	60대	15 26.3%
	70대 이상	1 1.8%
성별	여성	22 38.6%
	남성	35 61.4%
	년바이너리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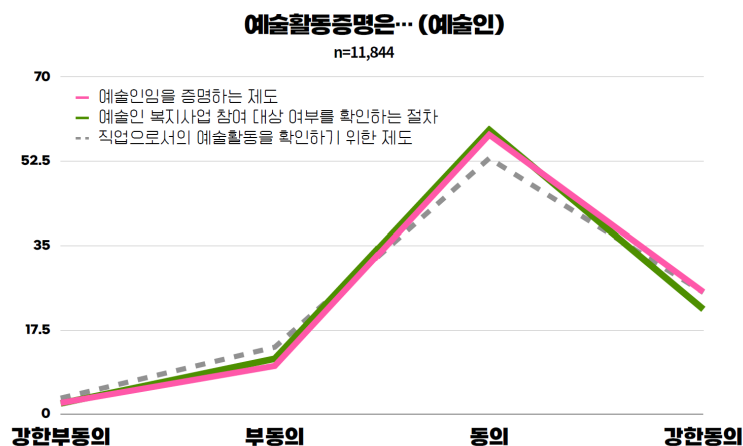
## 2-2. 설문조사 결과

### 2-2-1.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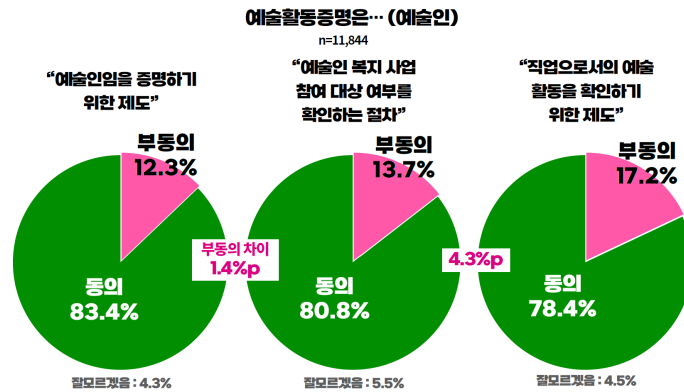
- 예술활동증명은 홈페이지의 소개 문구에서조차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임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 예술인이 안내와 같이 제도를 인식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예술인과 심의위원 모두에게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예술활동증명은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의 세 진술에 대해 4점 척도(강한 부동의 - 부동의 - 동의 - 강한 동의)로 질문함(‘잘 모르겠음’ 별도).
- 심의위원들은 예술활동증명을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 대상 확인 절차(89.4%)’로, 예술인은 ‘예술인 증명(83.4%)’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꺾은선 그래프의 응답 양상에서 보듯이,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서로 다른 3개의 진술은 설문 참여 예술인의 인식상 잘 구분되지 않고 있음(유사한 응답 분포).

[그림4-7] 예술활동증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예술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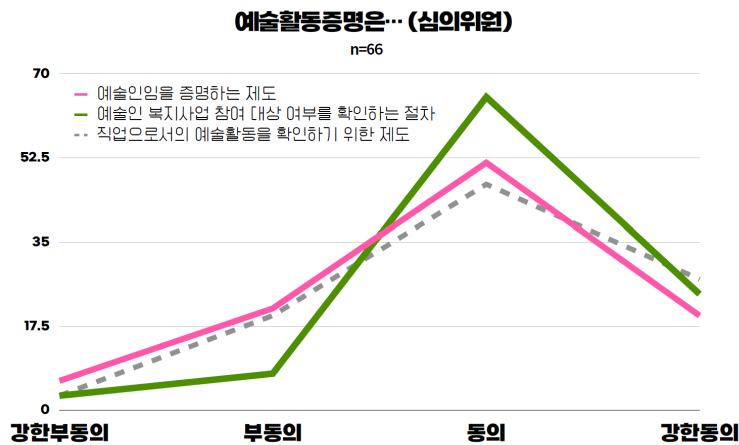
- 동의 수준이 ‘예술인 증명(83.4%)’ >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 대상 확인 절차(80.8%)’ >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 확인(78.4%)’ 순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 실제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경향성이 확인됨.

[그림4-8] 예술활동증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예술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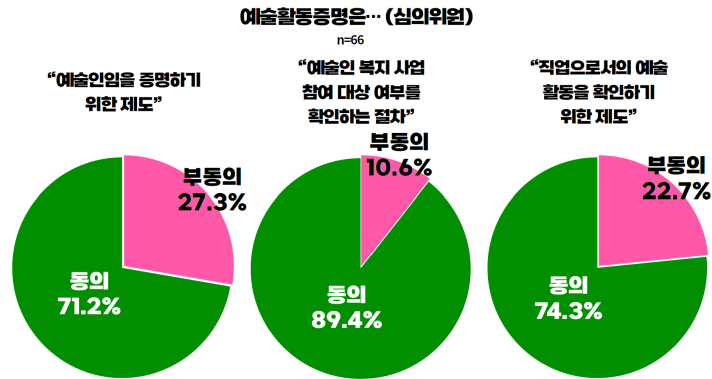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높은 심의위원은 예술인에서와 달리 3개 진술을 어느 정도 구분해 인식하고 있으나, ‘예술인 증명’과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 확인’에 대한 인식은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임.

[그림4-9] 예술활동증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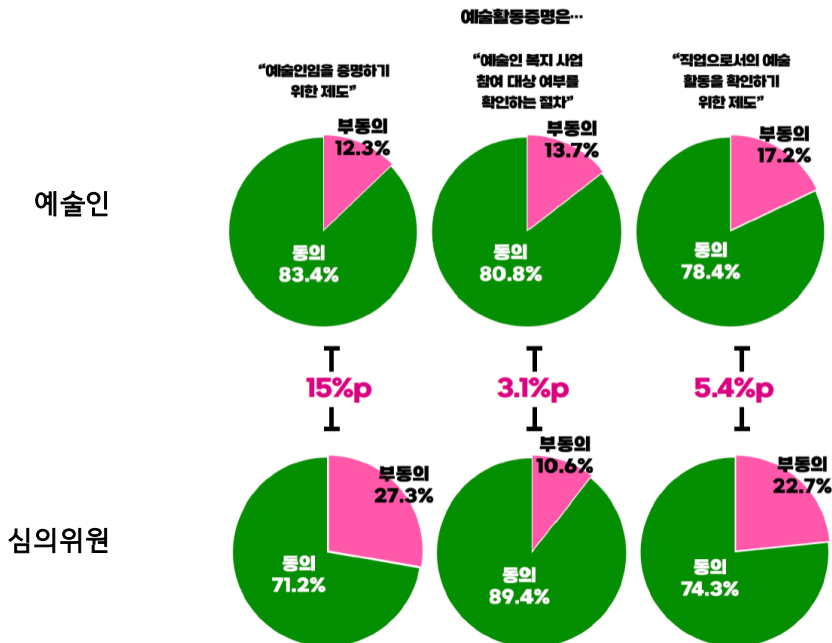
- 하지만, 심의위원 결과에서도 ‘예술인 증명’이라는 응답 비율이 10명 중 7명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편임은 주목해야 할 지점임. 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이해 증진 노력을 펼친다 해도 여전히 상당수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예술인 증명’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심의위원들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 대상 확인 절차(89.4%)’ >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 확인 (74.3%)’ > ‘예술인 증명(71.2%)’ 순의 동의 수준을 보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예술인도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 확인’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과 ‘예술인 증명’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 확산에 있어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임.

[그림4-10] 예술활동증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2)



- 심의위원들은 예술활동증명을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 대상 확인 절차(89.4%)’로, 예술인은 ‘예술인 증명(83.4%)’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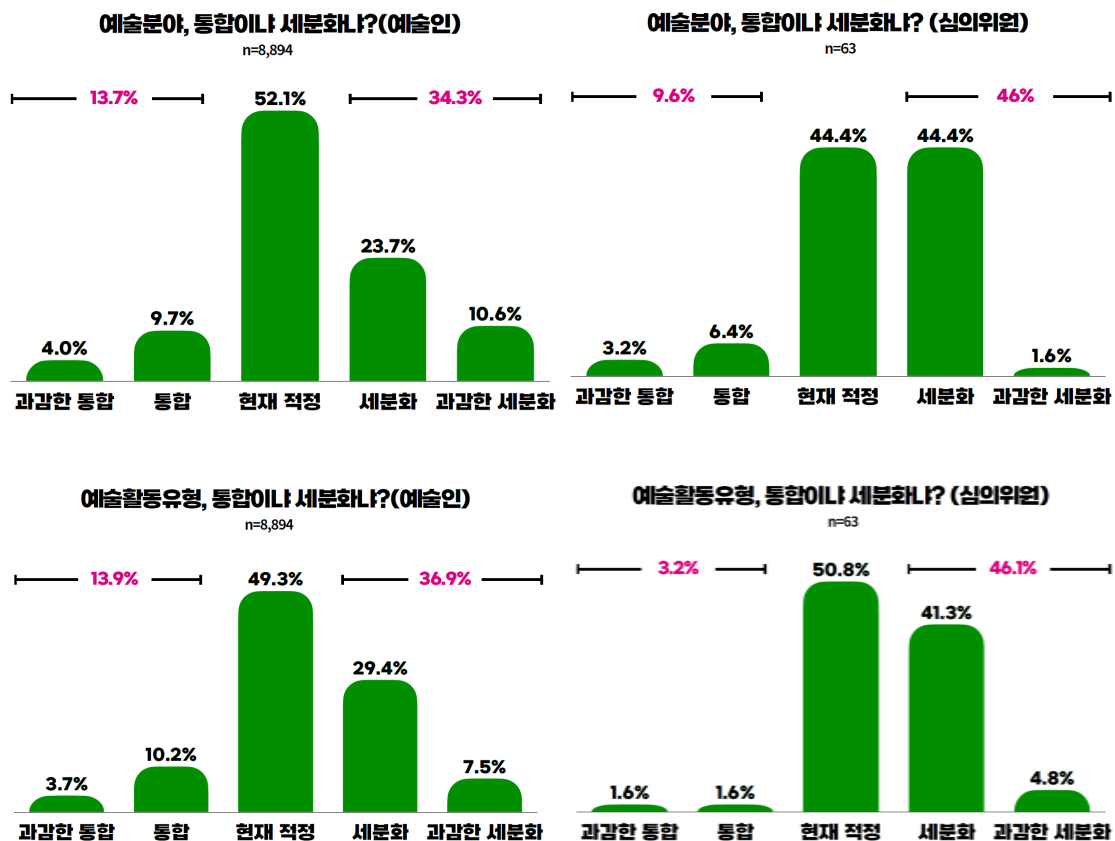
[그림4-11] 예술활동증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예술인, 심의위원 비교



## 2) '예술분야'와 '예술활동유형' 구분의 세분화

- 현재의 예술활동증명은 11개(세분하면 15개)의 예술분야 구분과 '창작', '실연', '기술지원'의 3개 예술활동유형을 구분하고 있음.
- 다양한 예술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러한 구분이 더 세분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해서 보다 단순화하고 일관성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로 삼고자 5점 척도(과감한 통합 - 통합 - 현재 적정 - 세분화 - 과감한 세부화)로 의견을 살핌.
- 완료 예술인은 예술활동유형에 대한 세분화 요구(36.9%)가 예술분야에 대한 세분화 요구(34.3%)보다 크게 나타남. 다만, '과감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예술분야에서 더 높음(10.6%).

[그림4-12] 예술분야·예술활동유형 구분의 세분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은 예술인보다 예술분야, 예술활동유형 모두 세분화에 대한 요구가 약 10%p 이상 높아 50%에 가까운 수준을 보임. 다만, 과감한 세분화보다는 적정 수준을 선호함.
- 심의위원은 예술분야와 예술활동유형의 세분화 요구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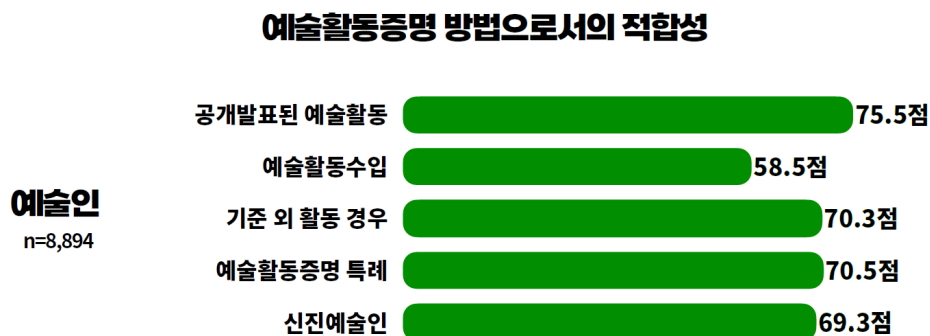


- 예술인, 심의위원 모두 현재 수준이 괜찮다는 응답이 50% 안팎이라는 점에서 유사. 예술 분야와 예술활동유형 둘 다 통합보다는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음.

### 3) 예술활동증명 방법별 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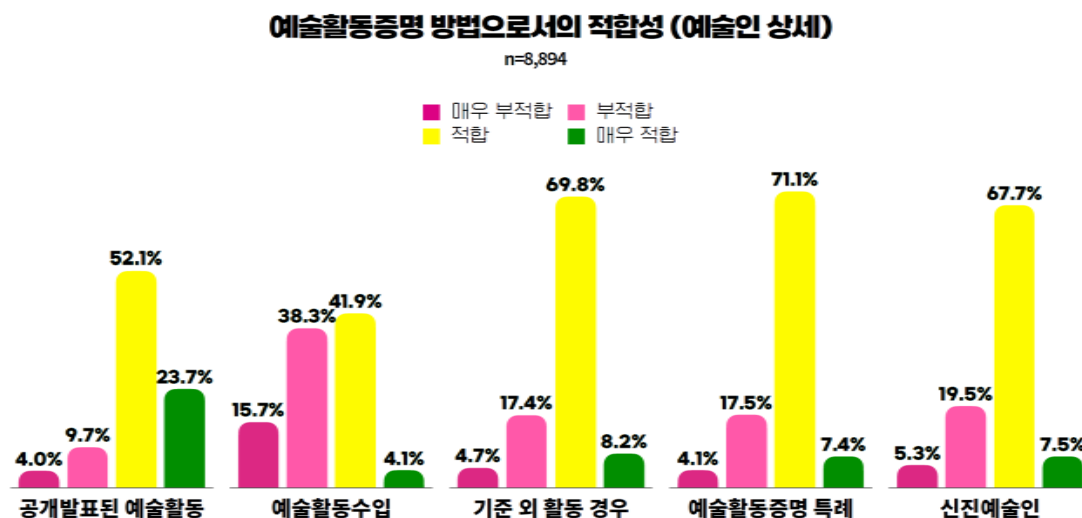
- 현재의 예술활동증명은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기준 외 활동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등 5개의 방법으로 가능. 현재의 각 방법을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서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와 심의위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4점 척도(매우 부적합 - 부적합 - 적합 - 매우 적합)로 질문함.

[그림4-13] 예술활동증명 방법별 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예술인)



- ‘공개발표된 예술활동’에 대한 상대적인 지지가 높은 가운데, ‘예술활동 수입’이 다른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는 응답 비율이 낮음. 나머지 3개 방법의 경우 20% 안팎의 부적합 응답과 80% 안팎의 적합 응답을 보이며 유사한 응답 양상을 보임.

[그림4-14] 예술활동증명 방법별 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예술인 상세



- 예술인, 심의위원 모두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함(아래 그림의 점수는 4점 척도의 평균 점수에 25를 곱해 100점 만점으로 단순 환산한 결과임).

[그림4-15] 예술활동증명 방법별 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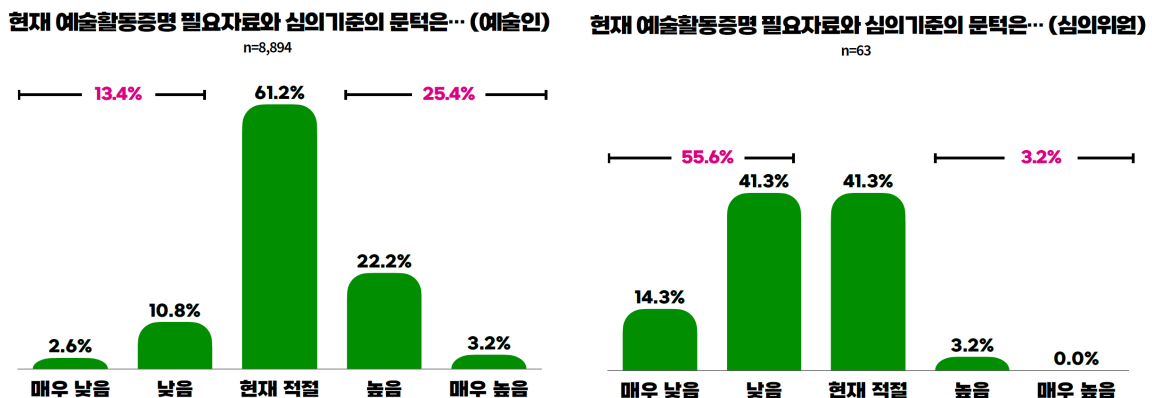


#### 4) 심의기준 문턱의 높낮이

- 현재의 예술활동증명이 요구하는 필요자료와 심의기준의 문턱에 대해 예술인과 심의위원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 자체로도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예술활동증명의 처리 속도, ‘생활예술’을 대하는 태도, 예술활동증명에 포함되는 예술활동의 다양성 등과 연결해 생각해 볼 사항인 만큼 확인을 위해 5점 척도로 질문함.

- 예술인과 심의위원의 응답 비율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문항임.

[그림4-16] 예술활동증명 심의기준 문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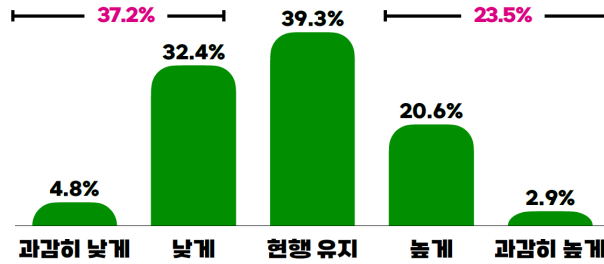


- 설문 참여 예술인은 현재의 심의기준 문턱에 대한 문제인식이 두드러지진 않으나(‘현재 적절’ 61.2%), 문턱이 다소 높아(높다 25.4%), 좀 더 낮춰지길 기대(37.2%). 반면에 심의위원은 현재의 심의기준 문턱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며(‘현재 적절’ 41.3%), 문턱이 낮아(낮다 55.6%) 발생하는 상황을 바로 잡아, 높아지길 강하게(63.5%) 요구함.

[그림4-17] 예술활동증명 심의기준 문턱의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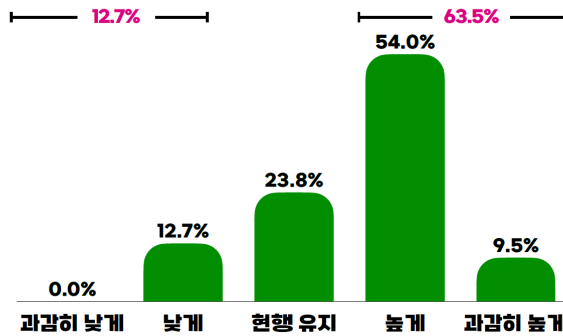
**앞으로 예술활동증명 필요자료와 심의기준의 문턱은 어떻게 변화해야? (예술인)**

n=8,894



**앞으로 예술활동증명 필요자료와 심의기준의 문턱은 어떻게 변화해야? (심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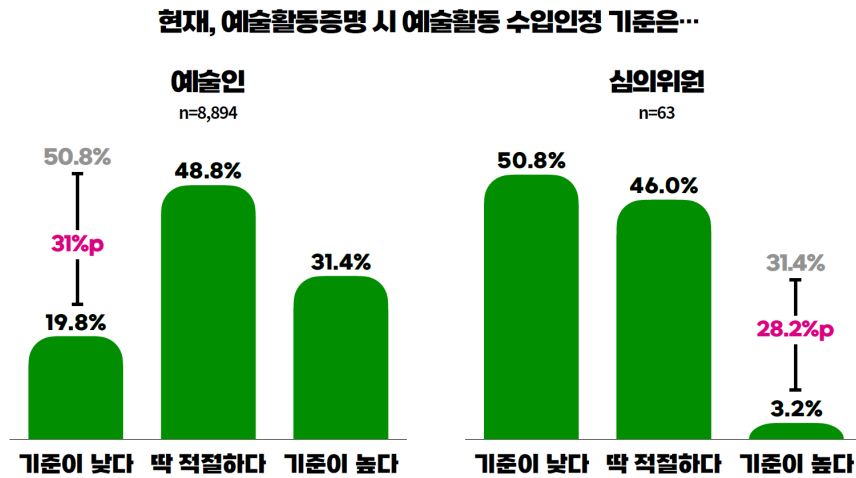
n=63



5) 예술활동 수입인정 기준의 적절성

- 앞의 2-2-3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술활동 수입’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님. 기준의 적절성은 이와 별개로 문턱과 관련해 살펴봐야 할 지점이 있어 3점 척도(기준이 낮다 - 딱 적절하다 - 기준이 높다)로 질문함.
- 예술인은 ‘기준이 높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31.4%) 가운데, ‘기준이 낮다’는 응답도 19.8%로 의미 있는 응답 비율을 보임. 반면, 심의위원은 ‘기준이 낮다’는 응답 비율이 현저히 높고(50.8%), ‘기준이 높다’는 응답 비율(3.2%)은 매우 낮음.
- 이러한 응답 양상은 2-2-1-4에서 나타난, ‘다소 낮은 문턱을 바라는’ 예술인과 ‘문턱이 꽤 높아지길 원하는’ 심의위원의 차이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결과임.
- 예술인, 심의위원 모두 ‘딱 적절하다’의 응답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4-18] 예술활동증명 수입인정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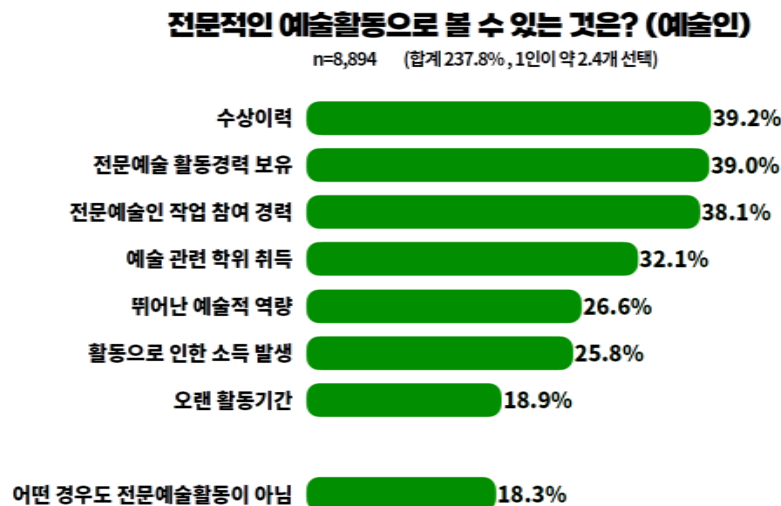


#### 6) 생활예술과 ‘전문예술활동’의 구분

- 앞의 1)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인 만큼 ‘생활예술활동’과 구분되는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하지만, ‘생활예술활동’과 전문적인 예술활동 사이에는 제한된 수의 기준과 규정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매우 두터운 ‘점이지대’가 존재함. 초점집단면접에서 여러 심의회원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는 예술활동증명의 심의속도를 늦추는 주된 요인인 동시에, 심의기준의 일관성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음.
- ‘생활예술활동’과 전문적인 예술활동 사이의 점이지대에서 예술인과 심의회원은 각기 어떤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며 두 영역을 오가는지 엿보기 위해 “아래 <보기>에 언급된 활동들은 어떤 경우에 전문적인 예술활동으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보기> 주부합창단 공연, 문화센터·평생교육원·아카데미 수강생 전시, 시민극단 연극, 사내 동아리 문집, 생활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동호회 활동(생활문화 예술제 등)”의 형태로 문항 개발함.
- 판단할 요인(사례)으로는 예술인복지재단 실무자 및 심의회원과의 초점집단면접 내용과 생활예술 관련 이전 연구 검토를 통해 사례를 7개로 유형화하고, 이에 덧붙여 어떤 경우에도 생활예술활동이 전문적인 예술활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추가적으로 포함함.
  - ① 오랜 활동기간(예. 주부합창단 공연을 20년째 이어오고 있다)
  - ② 활동으로 인한 소득 발생(예. 동호회 활동 공연으로 부업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 ③ 전문예술인 작업 참여 경력(예. 전문예술인인 안무가가 창작하는 무용 공연에 참여했다)
  - ④ 수상 이력(예. 시민극단의 연극 작품이 지역축제에서 상을 받았다, 문학 분야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 ⑤ 예술 관련 학위 취득(예. 평생교육원에서 피아노를 배우다 음악대학에 진학, 졸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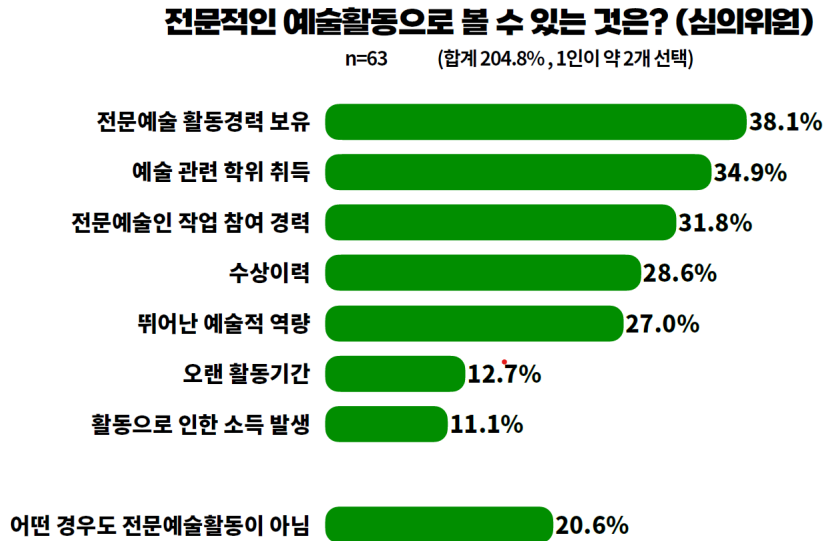
- ⑥ 전문예술 활동경력 보유(예. 직업 배우로 활동하다 사고로 포기하고, 취미로 시민극단에 참여하고 있다)
  - ⑦ 뛰어난 예술적 역량(예. 직업 연주자보다 더 뛰어난 연주능력을 가지고 있다)
  - ⑧ 위의 어떤 경우도 전문적인 예술활동으로 여길 수 없음
- 7개의 요소 중 어느 것도 전문적인 예술활동으로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예술인은 18.3%로, 자연빈도로 표현하면 대략 10명 중 2명꼴에 해당함.
- ‘수상이력(39.2%)’, ‘전문예술 활동경력 보유(39%)’, ‘전문예술인 작업 참여 경력(38.1%)’에 대해서는 예술인 10명 중 4명이 전문적인 예술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공모전 등의 공식적인 심사 통과와 전문예술인과의 연결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이에 반해, ‘오랜 활동기간(18.9%)’은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남.

[그림4-19] 전문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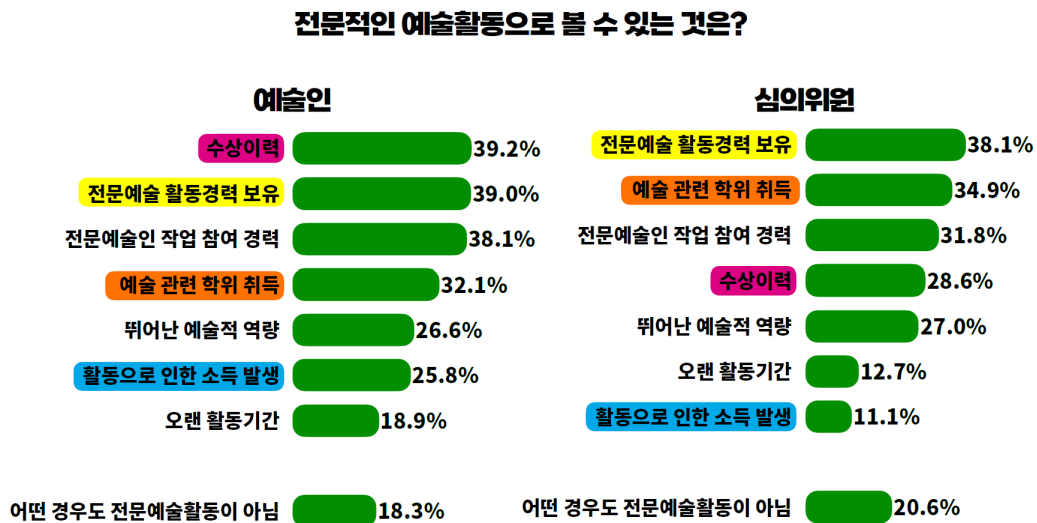
- 심의위원 응답 결과에서도 7개의 요소 중 어느 것도 전문적인 예술활동으로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은 20.6%로, 예술인보다는 다소 높은 비율이지만 역시 자연빈도로 이해할 경우 10명 중 약 2명꼴로 확인됨.
- 심의위원 10명 중 약 4명이 전문적인 예술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문예술 활동경력 보유(38.1%)’와 ‘예술 관련 학위 취득(34.9%)’ 정도임. 전문예술 활동경력과 학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남.
- ‘활동으로 인한 소득 발생(11.1%)’이나 ‘오랜 활동기간(12.7%)’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10명 중 1명만이 전문적인 예술활동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응답함.

[그림4-20] 전문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 예술인과 심의위원의 판단에서 가장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요소는 ‘활동으로 인한 소득발생 (14.7%p 차이)’, ‘수상이력(10.6%p 차이)’으로 나타남. ‘전문예술 활동경력 보유’나 ‘예술 관련 학위 취득’, ‘뛰어난 예술적 역량’에서는 응답 비율의 차이가 작은 편임.
- ‘전문예술인 작업 참여 경력(6.3%p 차이)’, ‘오랜 활동 기간(6.2%p 차이)’의 경우 차이가 현저하지는 않으나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과 심의위원 사이의 전문적인 예술활동에 대한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보여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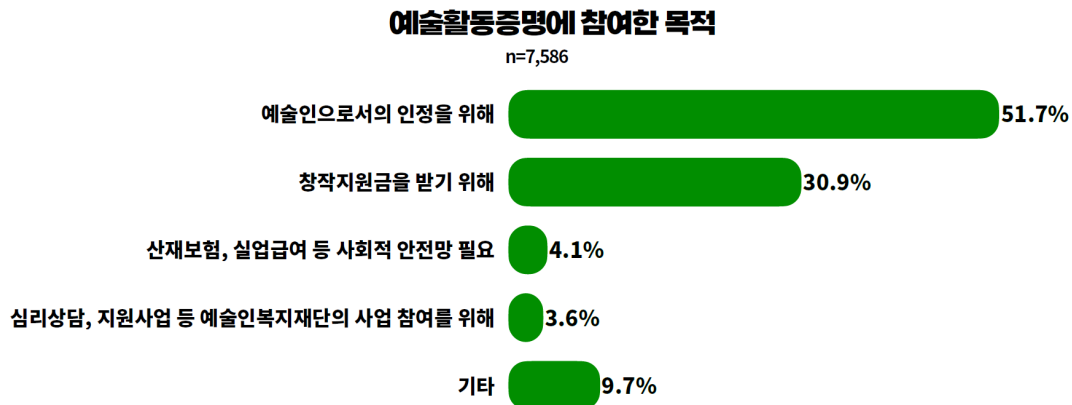
[그림4-21] 전문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비교



## 7) 예술활동증명에 참여한 목적

- 예술활동증명에 참여한 목적을 설문한 결과 ‘예술인으로서의 인정을 위해’ 예술활동증명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51.7%로 과반 수준임.

[그림4-22] 예술활동증명에 참여한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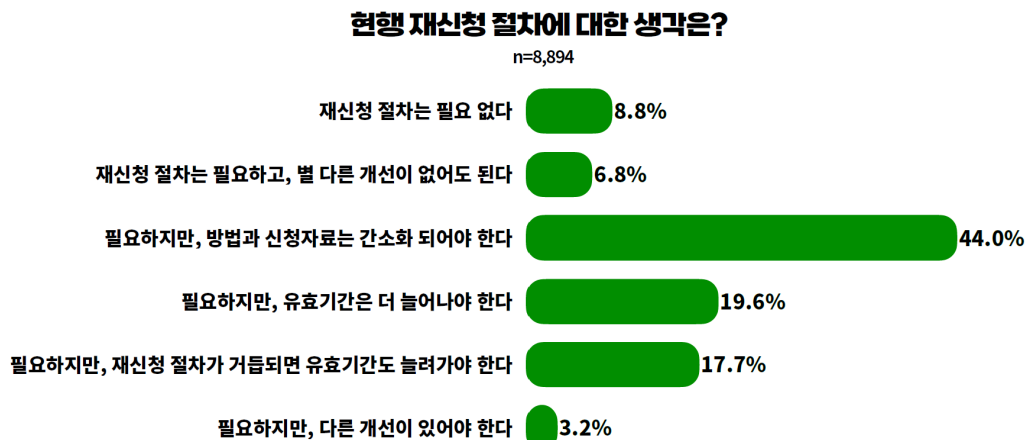


- 예술을 ‘업’으로 삼는 예술인을 주 참여 대상으로 고려하는 제도의 방향에 비추어 적절한 대응(제도 리포지셔닝과 수요 조절)이 시급해 보이는 지점임.

## 8) 재신청 절차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비중이 늘어감에 따라 증명 완료 이후에도 직업 예술가로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인 재신청 절차가 중요해짐.

[그림4-23] 재신청 절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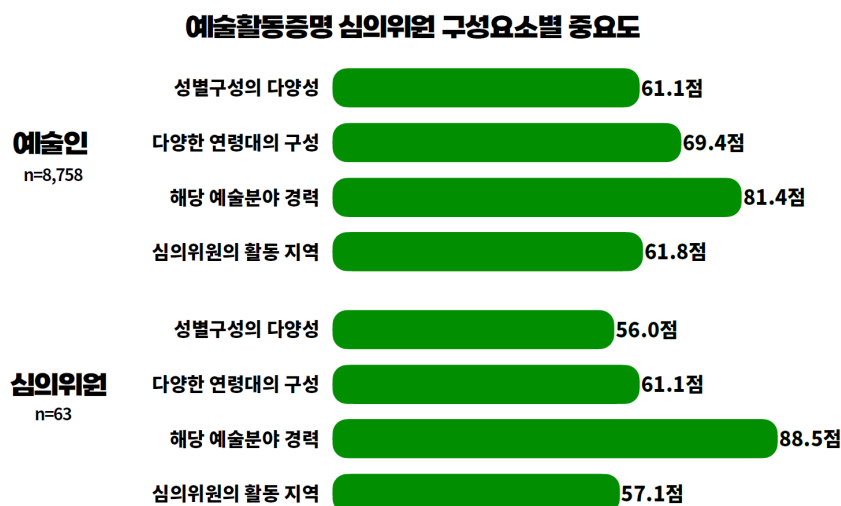


- 재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1.2%로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대부분은 재신청 절차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 다만 개선이 없어도 된다는 의견은 6.8%에 불과하고, ‘재신청 방법과 신청자료의 간소화(44%)’, ‘유효기간의 확대(37.3%)’ 순으로 개선되길 선호함.

#### 9) 심의위원 구성의 주요 변수

- 심의위원의 구성에서 성별, 연령대, 지역 등과 관련해 적절한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심의에 대한 신뢰도, 심의 관련 판단의 다양성,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과 심의위원의 구성 요소별 중요도 판단을 알아보기 위해 4점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함 - 매우 중요함)로 질문(‘잘 모르겠음’은 별도)
- 예술인, 심의위원 모두 ‘경력’과 ‘연령대’를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판단(아래 그림의 점수는 4점 척도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단순 환산한 결과임). ‘연령대’가 ‘경력’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기 쉬운 상황에서 ‘연령대’ 구성에 대한 다양성 요구가 ‘경력’을 이유로 약화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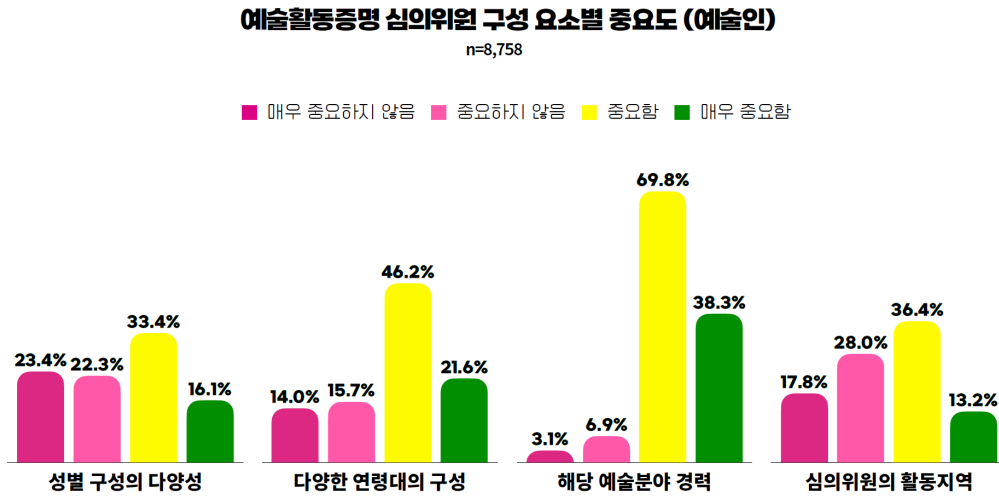
[그림4-24] 심의위원 구성요소별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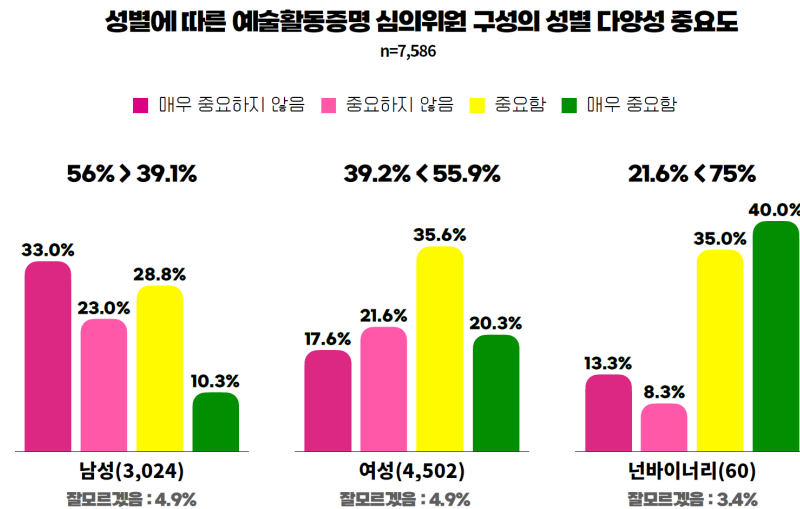
- 성별 구성의 다양성 요소는 예술인과 심의위원 모두 가장 낮게 평가됨(심지어 심의위원의 활동지역보다도 덜 중요). 이를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설문 참여 예술인의 성별을 기준으로 응답을 나누어 보면, 남성과 비남성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4-25] 심의위원 구성요소별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예술인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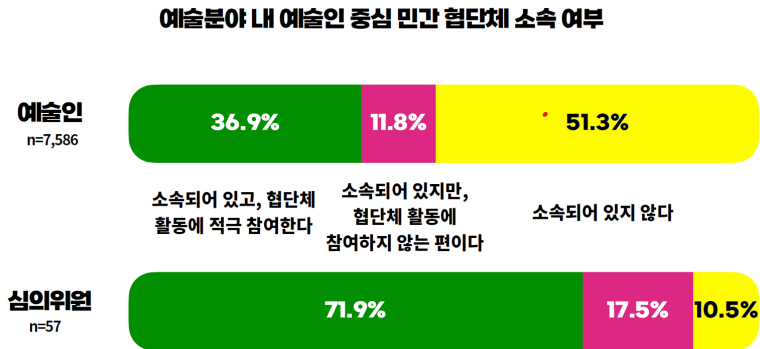
[그림4-26] 심의위원 구성의 성별 다양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성별에 따른 차이가 이렇게 뚜렷하고, 설문 참여 예술인 중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음에도 성별 구성 다양성의 중요도가 다른 요소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남성 예술인은 극단적이길 주저하지 않는 반면, 여성 예술인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도 완곡한’ 특성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응답표본의 차이가 커 일반화해 말하긴 어렵지만, ‘년바이너리’가 ‘여성’보다 성별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더 강한 요구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남.
- 위에 논의된 요소와 별도로 설문에 포함된 ‘예술인 중심의 민간 협·단체 소속 및 활동 여부’에 있어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과 심의위원의 차이 또한 매우 현저하게 나타남. 협·단체

소속 여부에서 설문 참여 예술인과 심의위원 간의 큰 격차는 연령대와 경력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향후 심의위원 구성 시 협·단체 소속 여부에 따른 배분을 고려해야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차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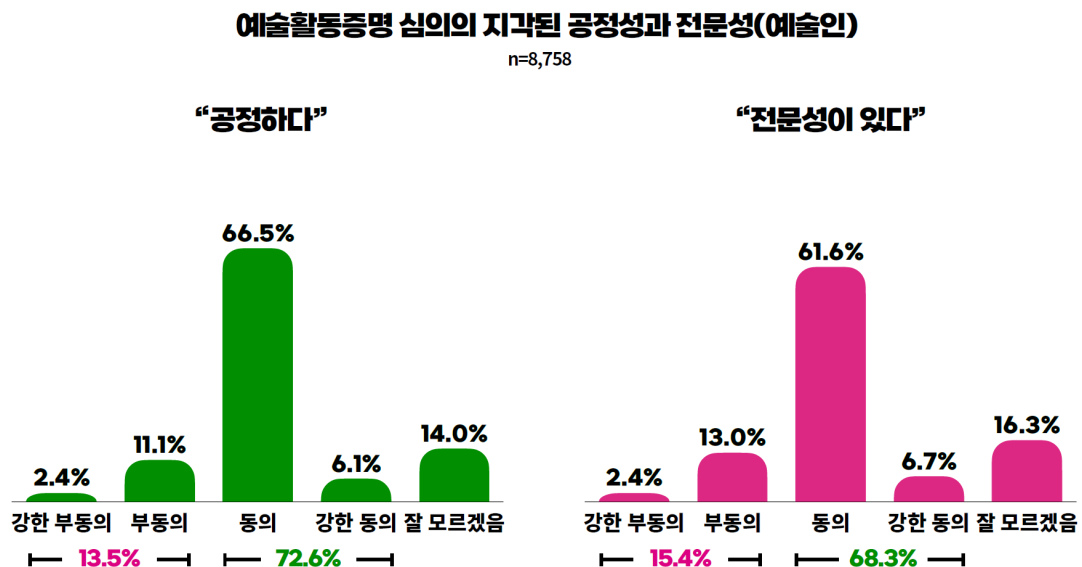
[그림4-27] 민간 협·단체 소속 및 활동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0)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지각된 공정성과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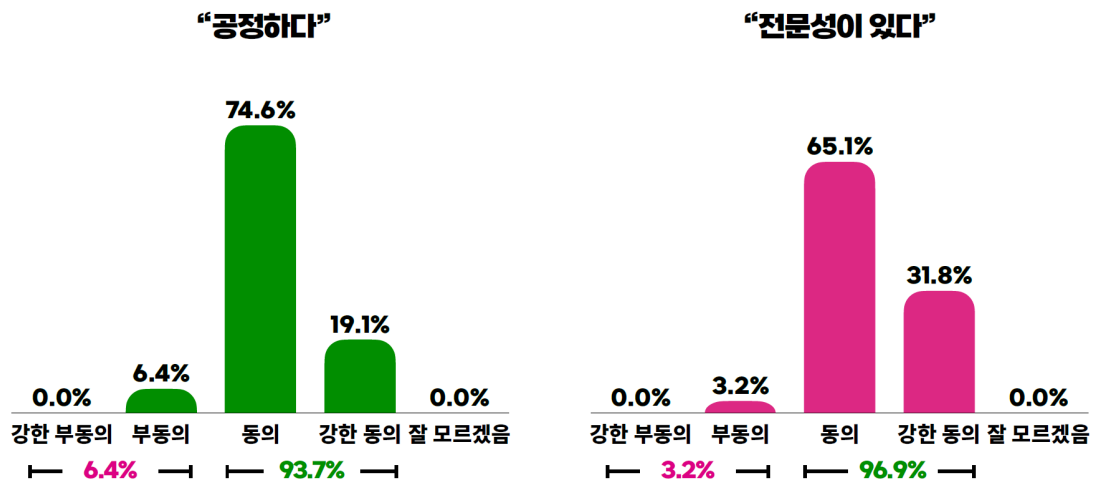
-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4점 척도(강한 부동의 - 부동의 - 동의 - 강한 동의)로 질문('잘 모르겠음'은 별도 응답)
- 설문 참여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 각각 72.6%, 68.3%의 높은 동의 응답 비율을 보임.

[그림4-28]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예술인, 심의위원



##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지각된 공정성과 전문성(심의위원)

n=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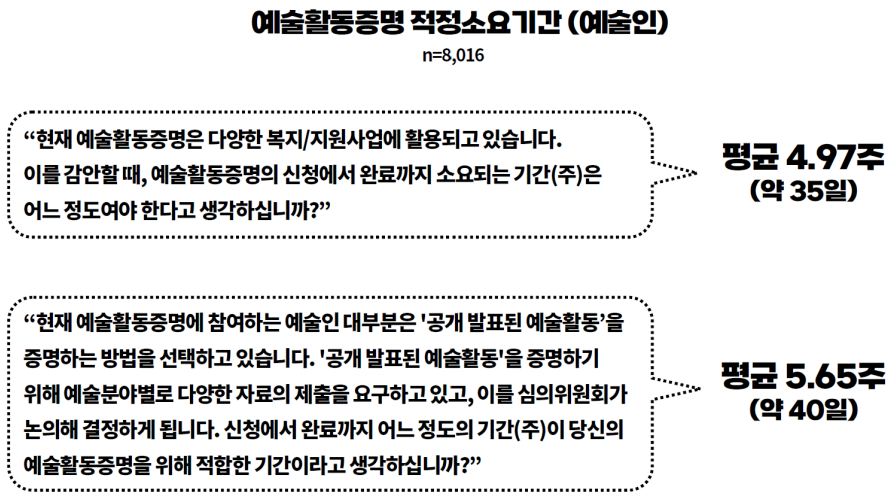


- 이는 예술활동증명 처리 속도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증명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많은 예술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단,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에 미완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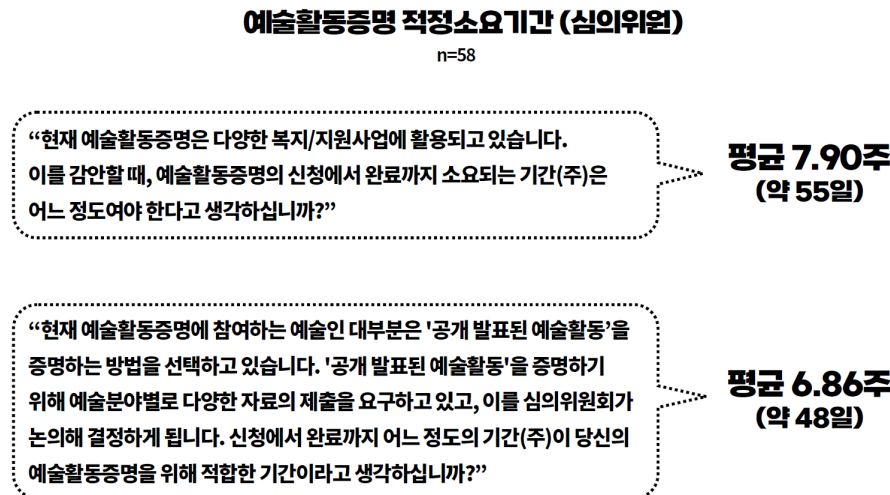
### 11) 예술활동증명 적정 소요 기간

- 예술활동증명의 처리 속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음(2021년 기준 예술활동증명 완료에 소요된 평균 일수는 89일). 하지만 실제 예술인과 심의위원이 생각하는 적정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음.
-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에 활용’,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방법의 처리 과정’이라는 두 가지 다른 맥락을 제시하고, 예술활동증명에 적정한 소요 시간을 주 단위로 질문
- 예술인은 활용을 강조한 맥락보다 처리 과정을 강조한 맥락에서 적정 소요 기간이 다소 늘어나고, 심의위원은 처리 과정을 강조한 맥락보다 활용을 강조한 맥락에서 적정 소요 기간이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남. 이는 제시되는 맥락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에 따라서 적정 소요 기간에 대한 판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심의위원은 전반적으로 증명 완료 예술인보다 적정 소요 시간을 더 길게(8~10일) 판단.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소요 기간은 35일에서 40일 정도로, 2021년 기준 예술활동증명 평균 소요일수가 89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 이하로 기간이 단축되어야 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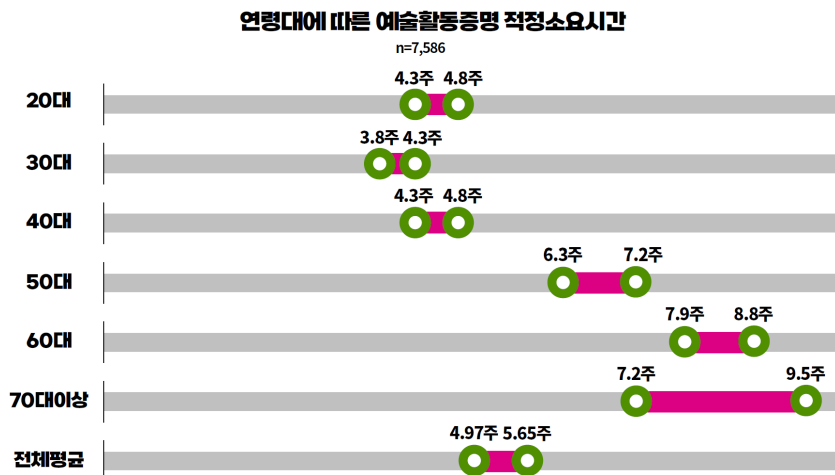
[그림4-29] 예술활동증명 적정 소요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21년 기준 예술활동증명 완료 평균소요일수: 89일



[그림4-30] 예술활동증명 적정 소요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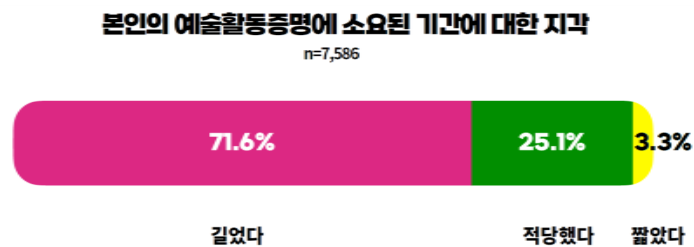


- 예술인의 경우 적정 소요 기간 응답에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는 연령대임(성별, 예술분야, 활동유형 등에 따른 차이 없음). 활용을 강조한 맥락보다 처리 과정을 강조한 맥락에서 적정 소요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는 점은 일관되나, 50대 이후의 집단에서 이하 연령대보다 전체적으로 적정 소요 기간이 길어지고, 제시된 맥락에 따른 응답 결과의 차이도 더 커지는 경향이 나타남.

## 12) 지각된 예술활동증명 소요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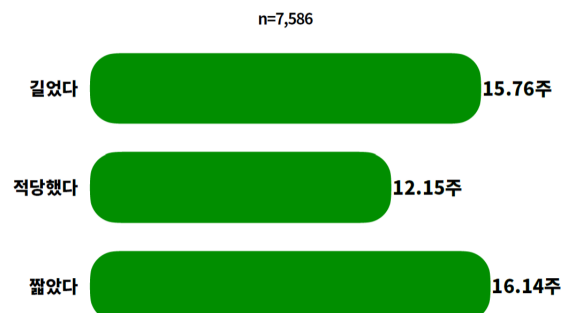
- 본인의 예술활동증명 소요 기간에 대해 '길었다'고 느낀 예술인은 10명 중 7명꼴로 나타남.

[그림4-31] 본인의 예술활동증명 소요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하지만, 지각 정도에 따라 응답한 예술활동증명 실제 소요 기간 평균을 비교하면, 소요 기간에 대한 지각이 반드시 실소요 기간과 일치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음.
- 제도의 추진에 있어 행정적 관심은 '소요 기간에 대한 지각'보다는 '실소요 기간'을 중심에 두며, 정책 참여자의 경험은 '만족도' 조사의 차원에서 아웃풋 요소 중 하나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임. 하지만, 위와 같은 결과는 정책 참여자의 경험이 중요한 '아웃킴'의 하나로 행정적 관심의 핵심 영역으로 옮겨와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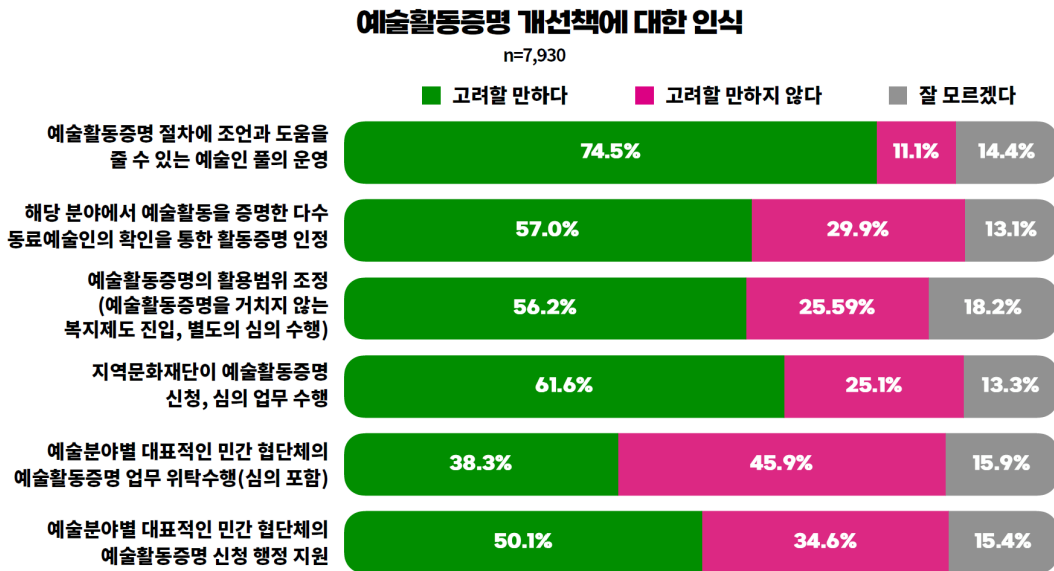
[그림4-32] 지각 정도에 따라 응답한 예술활동증명의 실제 소요 시간



### 13) 예술활동증명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

- 그룹인터뷰와 연구진의 논의 과정에서 영감을 받았거나 언급된 6개의 개선책에 대해 ‘고려할 만하지’를 판단하게 하는 형태로 질문

[그림4-33] 예술활동증명 개선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예술활동증명 절차에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술인 풀의 운영’에 대한 지지가 74.5%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지역문화재단이 예술활동증명 신청, 심의업무 수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생각함.
- 민간 협·단체의 예술활동증명 업무 위탁(심의 포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45.9%)이 더 높은 반면, 신청 행정지원만은 50.1%로 긍정의견이 더 높음(다만, 이 경우도 일반적인 예술인 풀의 운영보다 긍정의견이 많이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 ‘동료예술인을 통한 예술활동증명’이나, 예술활동증명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심의를 수행해 복지나 지원사업에 진입하는 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높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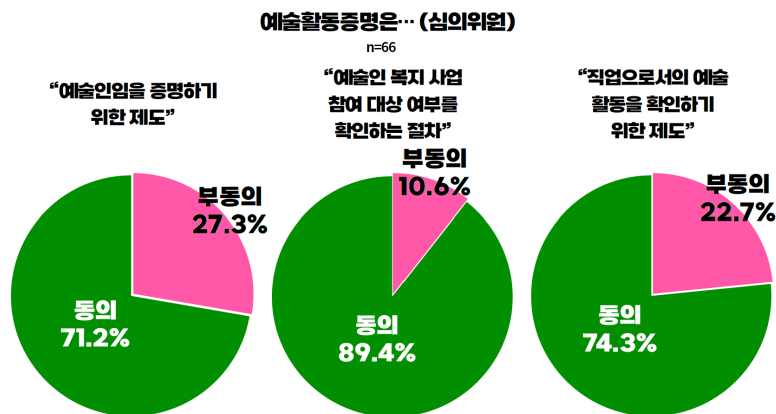
#### 2-2-2. 심의위원 설문결과 분석<sup>14)</sup>

14) 이번 설문은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심의위원 설문 결과가 자체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으나 결과 검토의 편의를 위해 따로 분리해 정리함. 분석 내용은 예술인 분석의 경우와 중복될 수 있음.

## 1)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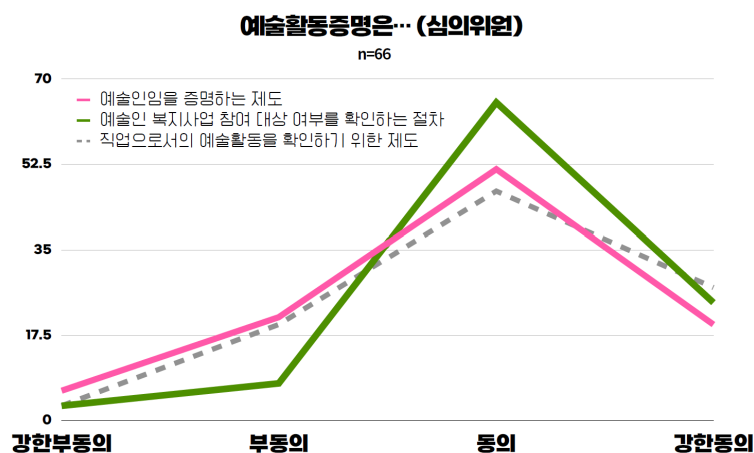
- 심의위원은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임.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심의위원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예술활동증명은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의 세 진술에 대해 4점 척도(강한 부동의 - 부동의 - 동의 - 강한 동의)로 질문(‘잘 모르겠음’ 별도)
- 예술활동증명을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 대상 확인 절차(89.4%)’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남.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 대상 확인 절차(89.4%)’ >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 확인 (74.3%)’ > ‘예술인 증명(71.2%)’ 순의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4-34] 예술활동증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1)



- 심의위원은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3개 진술을 어느 정도 구분해 인식하고 있으나, ‘예술인 증명’과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 확인’은 상대적으로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음.

[그림4-35] 예술활동증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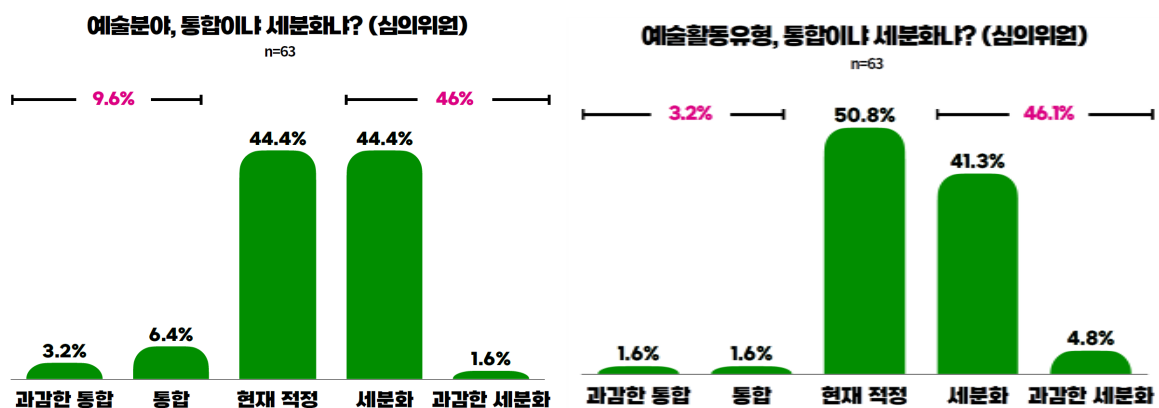


- 사업 이해도가 높은 심의위원의 설문 결과에서도 ‘예술인 증명’이라는 응답 비율이 10명 중 7명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고,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 확인’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예술인 증명’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관한 정확한 인식 확산에 있어 중요한 지점임.

## 2) ‘예술분야’와 ‘예술활동유형’ 구분의 세분화

- 현재의 예술활동증명은 11개(세분하면 15개)의 예술분야 구분과 ‘창작’, ‘실연’, ‘기술지원’의 3개 예술활동유형을 구분하고 있음. 다양한 예술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러한 구분이 더 세분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해서 보다 단순화하고 일관성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로 삼고자 5점 척도(과감한 통합 - 통합 - 현재 적정 - 세분화 - 과감한 세부화)로 설문
- 현재 수준이 괜찮다는 응답은 50% 안팎을 보임. 예술분야와 예술활동유형 둘 다 통합보다는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음.
- 심의위원은 예술인보다 예술분야, 예술활동유형 모두 세분화에 대한 요구가 약 10%p 이상 높아 50%에 가까운 수준을 보임. 다만, 과감한 세분화보다는 적정 수준 선호함.

[그림4-36] 예술분야·예술활동유형 세분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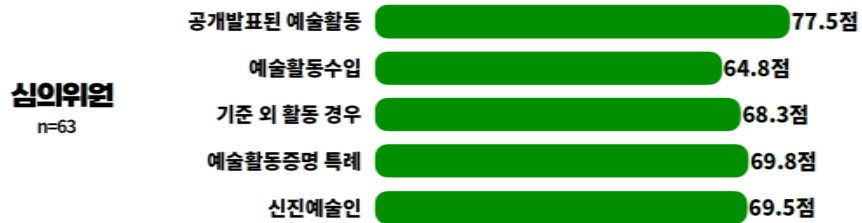
## 3) 예술활동증명 방법별 적합성

- 현재의 예술활동증명은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기준 외 활동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등 5개의 방법으로 가능. 현재의 각 방법을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서 심의위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4점 척도(매우 부적합 - 부적합 - 적합 - 매우 적합)로 질문함.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아래 그림의 점수는 4점 척도의 평균 점수에 25를 곱해 100점 만점으로 단순 환산한 결과임)



- ‘예술활동 수입’은 다른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는 응답 비율이 낮음. 나머지 3개 방법의 경우 20% 안팎의 부적합 응답과 80% 안팎의 적합 응답을 보이며 유사한 응답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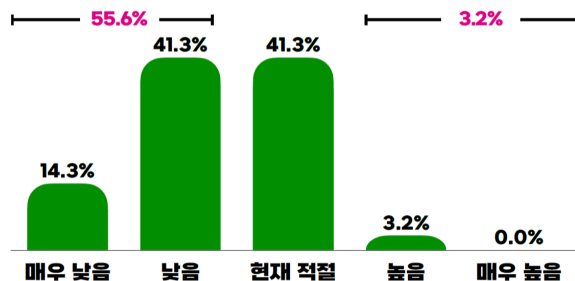
[그림4-37] 예술활동증명 방법별 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 4) 심의기준 문턱의 높낮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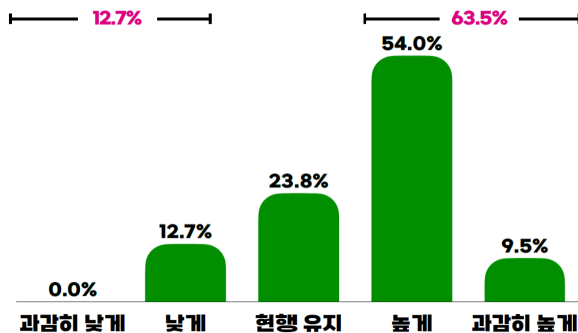
- 현재의 예술활동증명이 요구하는 필요자료와 심의기준의 문턱에 대해 심의위원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그 자체로도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예술활동증명의 처리 속도, ‘생활예술’을 대하는 태도, 예술활동증명에 포함되는 예술활동의 다양성 등과 연결해 생각해 볼 사항인 만큼 확인을 위해 5점 척도로 질문

[그림4-38] 심의기준 문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 심의위원은 현재의 심의기준 문턱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며(‘현재 적절’ 41.3%), 문턱이 낮아 (낮다 55.6%) 발생하는 상황을 바로잡아, 높아지길 강하게(63.5%)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남.

[그림4-39] 심의기준 문턱 기준의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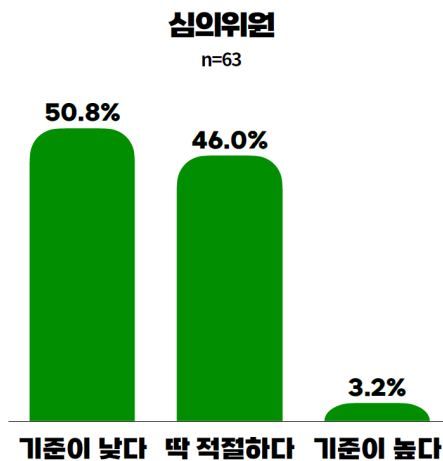


## 5) 예술활동 수입인정 기준의 적절성

- 앞의 2-2-2-3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술활동 수입’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님. 기준의 적절성은 이와 별개로 문턱과 관련해 살펴봐야 할 지점이 있어 3점 척도(기준이 낮다 - 딱 적절하다 - 기준이 높다)로 질문

[그림4-40] 예술활동 수입인정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 현재, 예술활동증명 시 예술활동 수입인정 기준은...



- 심의위원은 ‘기준이 낮다’는 응답 비율이 현저히 높고(50.8%), ‘기준이 높다’는 응답 비율(3.2%)은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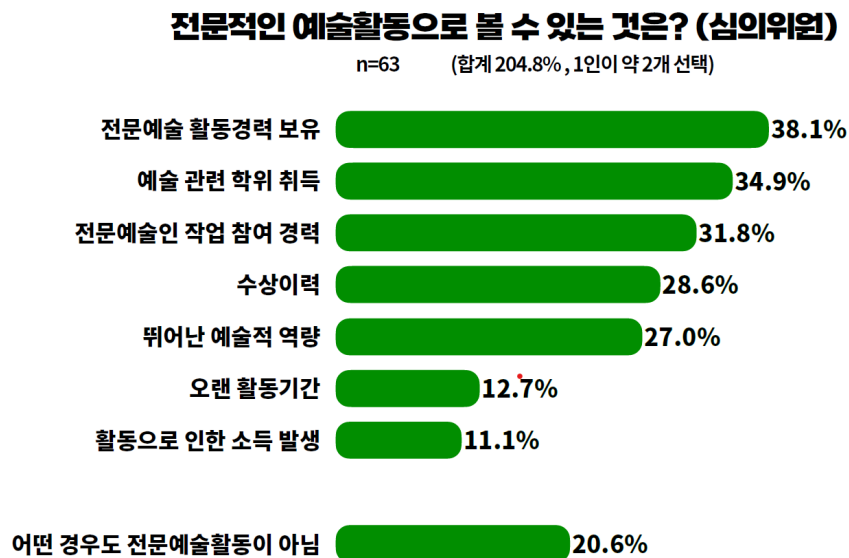
## 6) 생활예술과 ‘전문예술활동’의 구분

- 앞의 2-2-2-1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인 만큼, ‘생활예술활동’과 구분되는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하지만, ‘생활예술활동’과 전문적인 예술활동 사이에는 제한된 수의 기준과 규정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매우 두터운 ‘점이지대’가 존재함. 초점집단면접에서 여러 심의위원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는 예술활동증명의 심의속도를 늦추는 주된 요인인 동시에, 심의기준의 일관성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음.
- 판단할 요인(사례)은 예술인복지재단 실무자 및 심의위원과의 초점집단면접 내용, 생활예술 관련 이전 연구 검토를 통해 사례를 7개로 유형화하고, 이에 덧붙여 어떤 경우에도 생활예술 활동이 전문적인 예술활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음.
  - ① 오랜 활동기간(예. 주부합창단 공연을 20년째 이어오고 있다)
  - ② 활동으로 인한 소득 발생(예. 동호회 활동 공연으로 부업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 ③ 전문예술인 작업 참여 경력(예. 전문예술인인 안무가가 창작하는 무용 공연에 참여했다)
- ④ 수상 이력(예. 시민극단의 연극 작품이 지역축제에서 상을 받았다, 문학분야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 ⑤ 예술 관련 학위 취득(예. 평생교육원에서 피아노를 배우다 음악대학에 진학, 졸업했다)
- ⑥ 전문예술 활동경력 보유(예. 직업 배우로 활동하다 사고로 포기하고, 취미로 시민극단에 참여하고 있다)
- ⑦ 뛰어난 예술적 역량(예. 직업 연주자보다 더 뛰어난 연주능력을 가지고 있다)
- ⑧ 위의 어떤 경우도 전문적인 예술활동으로 여길 수 없음

- 심의위원 응답 결과에서는 7개의 요소 중 어느 것도 전문적인 예술활동으로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은 20.6%로, 예술인 보다는 다소 높은 비율이지만 역시 자연빈도로 이해할 경우 10명 중 약 2명꼴로 확인됨.
- 심의위원 10명 중 약 4명이 전문적인 예술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문예술 활동경력 보유(38.1%)’와 ‘예술 관련 학위 취득(34.9%)’ 정도임. 전문예술 활동 경력과 학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남.
- ‘활동으로 인한 소득 발생(11.1%)’이나 ‘오랜 활동기간(12.7%)’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10명 중 1명 만이 전문적인 예술활동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응답함.

[그림4-41] 전문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 7) 심의위원 구성의 주요 변수

- 심의위원의 구성에서 성별, 연령대, 지역 등과 관련해 적절한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심의에 대한 신뢰도, 심의 관련 판단의 다양성,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과 심의위원의 구성 요소별 중요도 판단을 알아보기 위해 4점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하지 않음 - 중요함 - 매우 중요함)로 질문('잘 모르겠음'은 별도)
- '경력'과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판단(아래 그림의 점수는 4점 척도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단순 환산한 결과임)

[그림4-42] 심의위원 구성요소별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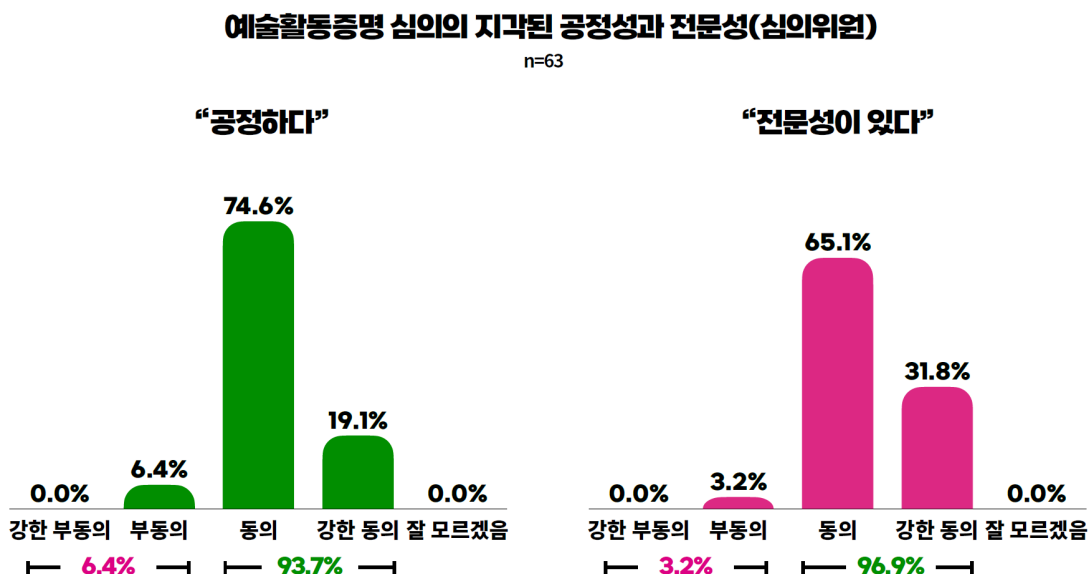


- 성별 구성의 다양성 요소는 가장 낮게 평가됨(심지어 심의위원의 활동지역보다도 덜 중요)

#### 8)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지각된 공정성과 전문성

-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 지를 4점 척도(강한 부동의 - 부동의 - 동의 - 강한 동의)로 질문('잘 모르겠음'은 별도 응답)

[그림4-43] 심의에 지각된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 대부분 심의위원이 공정성과 전문성에 있어 강한 확신을 보여 줌.

#### 9) 예술활동증명 적정 소요 기간

- 예술활동증명의 처리 속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음(2021년 기준 예술활동 증명 완료에 소요된 평균 일수는 89일). 하지만 실제 예술인과 심의위원이 생각하는 적정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음.
-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에 활용’,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방법의 처리과정’이라는 두 가지 다른 맥락을 제시하고, 예술활동증명에 적정한 소요 시간을 주 단위로 질문

[그림4-44] 예술활동증명 적정 소요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심의위원

#### 예술활동증명 적정소요기간 (심의위원)

n=58

“현재 예술활동증명은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예술활동증명의 신청에서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주)은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7.90주**  
(약 55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에 참여하는 예술인 대부분은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예술분야별로 다양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가 논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에서 완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주)이 당신의 예술활동증명을 위해 적합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6.86주**  
(약 48일)

- 전반적으로 심의위원은 7주 안팎을 적정 소요 기간이라 응답. 심의위원은 처리 과정을 강조한 맥락보다 활용을 강조한 맥락에서 적정 소요 기간이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남.

### 3. 현장 예술인 간담회

#### 3-1. 간담회 개요

- 현장 예술인 간담회는 총 2회로 진행. 1차는 2022년 6월 22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진행하였으며, 2차는 2022년 8월 18일 인사동 KOTE에서 진행하였음.

1차 예술인 간담회	2차 예술인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2년 6월 22일 14:00</li> <li>- 장소 :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대학로)</li> <li>- 참석 : 예술인, 연구진, 복지재단 관계자 등</li> <li>- 주요내용 : 연구 진행 상황 소개 및 예술활동 증명 관련 예술인 의견수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2년 8월 18일 14:00</li> <li>- 장소 : KOTE 내면의 서재(인사동)</li> <li>- 참석 : 예술인, 연구진, 복지재단 관계자 등</li> <li>- 주요내용 :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관련 연구결과 초안 발표 및 예술인 의견수렴</li> </ul>

#### 3-2.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 장애예술인의 예술창작 환경의 특수성 및 장애 유형별 지원의 필요성 강조됨.
- 예술활동증명에 등록된 장애예술인은 현재 2,300명 정도로 집계됨(2019년 이후로 집계되고 있음). 장애 정도라든가 장애 유형은 체크가 되지 않고 있음.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완료 숫자도 계속 늘어날 것임.
  -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장애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을 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장애 여부를 표기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많음.
  - 장애예술인의 경우 예술창작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비장애예술인보다 생활예술인과 직업예술인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 장애인의 경우 인구집단 전체에서 볼 때 5~6% 정도임. 해외에서는 15~20%로 통계를 잡는 경우도 있음. 예술활동증명 제도와 관련해서는 완료 예술인 혹은 심의위원 구성 등에서도 장애예술인의 목소리가 더 담기도록 노력해야 함.
  - 장애예술의 영역이 점차 부상하고 있고, 기존에 비가시적이던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향후 장애예술인의 예술창작환경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함.
- 심의위원 성별·연령별 비율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됨. 연령대 내의 심의가 훨씬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심의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주된 이유인 생활예술인과 직업예술인의 구분과 관련해서는 ‘생활예술인 증명’ 및 ‘생활예술인 복지’와 관련한 부분이 별도로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수요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경력단절 예술인과 관련한 내용을 임신, 육아, 출산, 군대 등과 같은 항목 외에도 예술창작 활동 관련 분쟁 등으로 인한 단절과 같은 사례에까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됨. 블랙

리스트 사태와 같은 사례, 계약 관련 분쟁, 성폭력 관련 문제제기와 싸움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까지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됨.

- AI 등을 활용한 심의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음. 관련해서는 ‘예측 기술’이 현재의 예술활동증명에 바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설명되어야 함 ① 표준화된 자료 데이터셋이 없음. 모두 다른 양식의 자료임 ② 빅데이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데이터양(14만)은 충분치 않음 ③ 예측 기술 내에 ‘가치’라는 개념을 넣기 어려움 등이 그 이유임. 하지만 프로세스 바 형태의 정보 제공을 통해 특정 조건의 예술인이 특정한 단계에 있을 때 대략 며칠 안에 이 과정이 종료될까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기술로도 가능할 수 있음.

## 4. 지자체 예술인복지 사업담당자 간담회

### 4-1. 간담회 개요

- 제목 : 예술인 복지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 간담회
- 일시 : 2022년 6월 24일(금) 13:00~16:00
- 장소 : 아우름 비즈 (서울 용산구 청파로395, 서울역 부근)
- 참석 : 28명 (문체부5, 지자체14, 복지재단2, 용역기관7)
  - 지자체 참석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세종

### 4-2.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 간담회 참석 지자체들은 대부분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창작활동 준비금 지급,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의료비 및 심리상담 지원 등에 예술활동증명을 활용하고 있었음(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대상).
-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지역이관 관련해서는 예산과 조직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사업비 내에서 운영할 경우 안정적인 운영인력 확보가 어려우며, 행정 및 심의 관련해서는 중앙의 지원(교육, 심의위원풀 공유 등)이 당분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지역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한 지자체별 의견은 아래와 같음.

[표4-17] 예술활동증명 지역 확대를 위해 필요한 내용(지자체별 답변)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활동증명 지역 확대를 위해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을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되어야 하며 관련 프로세스에 대한 노하우 또한 지역 전달이 필요함. 지역에서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데이터 및 관리도 지역 확대를 위해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해 복지재단에 요청한 상황임.</li> <li>- 또한, 안정적 제도화가 우선되어야 함. 현재 법률개정을 하고 있지만, 지역과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성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지자체로의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명확하게 센터 개념을 도입하고, 인력과 예산에 대한 명시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 확대는 어려울 듯함. 그리고 예술 서비스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며 복지에 따르는 세무, 예산, 행정인력 등이 양성되어야 함.</li> </ul>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가 예술활동증명 완료를 참여 조건으로 사업 추진 시, 진입장벽이 높다는 예술계 의견 다수 → 다각적 사업 홍보를 통해 지역 내 다수 예술인에게 정보 제공 및 긍정적 인식 제고</li> </ul>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르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매뉴얼 필요</li> <li>- 심사를 위한 인력지원 등</li> </ul>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및 예산(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li> <li>- 예술활동증명 업무 및 복지체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안 제공</li> </ul>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관적이고 통일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필요한 경우 1차 심사는 지역에서 수행하고 2차 심사는 중앙에서 진행하는 방법도 필요(지역의 경우 생활예술인과 전문예술인 경계에 있는 예술인이 많아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상당한 민원 발생이 우려됨)</li> <li>- 정부 차원에서 지역 심의기관을 지정하는 절차 필요함(예산 및 인력지원 필요)</li> </ul>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시스템</li> <li>- 인력·예산 확보</li> <li>- 적용 기관의 담당자 대상 업무 교육 실시 및 공통 매뉴얼(지침)</li> </ul>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개 시도 통일된 매뉴얼 및 지침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문제가 선결문제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li> </ul>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 및 시행</li> <li>-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연계</li> <li>- 광역문화재단과의 협력 등</li> </ul>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의 합리성에 따라 운용되어야 된다고 판단됨.</li> <li>- 중앙에 예술활동증명을 운용하는 것보다 지방에서 운용하는 것이 예산이 더 효율적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됨</li> </ul>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인력 확보(문화재단 정원 증원)</li> <li>- &lt;예술인 복지법&gt; 및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는 단위 사업의 실행만으로도 현재 인력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 명확</li> <li>- 현재 예술활동증명의 <u>신진 분야 행정심의(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사전절차)</u>에 한해 진행하나, 대면 상담창구도 상시 운영하고 있음. 예술활동증명 전담 인력은 부재하며, 지역으로 일반 예술활동증명까지 이관하는 경우 해당하는 업무 이관의 준비와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li> <li>- 예술활동증명 11개 분야에 대한 심의위원 풀 구성과 관리가 일원화되어야 하며, 행정 및 전문가 심의기준과 가이드가 명확해야 함 : 일관된 풀 관리 및 공유(복지재단), 심사기준의 구체성 및 일관성</li> </ul>



## V.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

1. 제도 개선방안의 구성 및 개요
2.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 단기
3.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 중장기



## 1. 제도 개선방안의 구성 및 개요

-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은, 그 적용 시기와 관련하여 단기와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단기 개선방안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현재 쟁점과 관련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한 대안 모색에 관한 내용까지를 포함함.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지역분권 등 정책기조 및 방향에 따른 중기적인 예측이나 한국사회의 변화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방향 등 장기적인 예측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다만, 중장기 개선방안의 경우 구체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 단기 개선방안은 과업의 내용에 근거하여 크게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성. 예술활동증명의 방식, 세부 기준 및 유효기간, 실적인정 범위, 제도 운영 관련 개선방안 등 네 개의 영역과 기타 영역으로 구성하였음. 해당 영역의 주요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 예술활동증명 방식 ; 예술인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명방식 대안
  -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 및 유효기간 ; 장르별 세부 기준 및 유효기간 대안
  - 예술활동증명 실적인정 범위 ; 장르별 실적인정 범위 관련 대안
  - 제도 운영 ; 심의절차 개선방안,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외
  - 기타 ; 지역협력, 외국인 기준 등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사항
- 개선방안은 예술현장의 의견 등 예술활동증명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에 해당. 개선방안의 배경,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제안 내용(정책과제, 법제도 개선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안된 내용 중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개정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표5-1]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 단기

구분	개선방안
증명 방식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의 구분
	신규 예술장르에 대한 증명 방식 대안 마련
세부 기준, 유효기간	디자인 및 건축 관련 세부 기준 개선방안
	영화 및 연예 관련 세부 기준 개선방안
실적인정 범위	미술, 사진, 디자인, 건축 관련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극 관련 인정기준 개선방안
	영화 및 연예 관련 인정기준 개선방안
제도 운영	유효기간 5년 통일 및 갱신 시 유효기간 연장
	심의 속진제 도입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심의과정 안내 강화 ; 프로세스 바 개선

	심의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한 기술지원
	예측 가능한 심의절차 운용
	행정심의 인력 충원
	예술활동증명 상담전담팀 구성
	분과별 심의위원회 내부 기준 공식화
	심의위원의 성별, 연령별 비율 구성 개선
	심의위원 임기 확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관련 협·단체에 대한 예술활동 업무 위탁 관련
기타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경력단절 예술인 기준의 확대 적용

[표5-2]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 중장기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	지역 차원의 예술인 복지·지원체계 수립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거버넌스 기반의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활용 제고

-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부분도 있음. 예술대학 졸업생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와 예술활동증명 대상 외국인 예술인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해당함.

[표5-3]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 현행유지

현행 유지	예술대학 졸업자의 예술활동증명 인센티브 방안
	예술활동증명 대상 외국인 예술인의 범위

## 2.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 단기

### 2-1. 예술활동증명 방식

#### 2-1-1.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의 구분

개선방안1	〈예술인 복지법〉 적용 대상인 ‘예술인’을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으로 확대하고, 예술활동증명 규정을 현행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의 조치 마련 조항과 연결하여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예술인 복지법〉 적용 대상인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을 구분
-------	---

- 현행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로 한정되어 있음. 하지만 〈예술인 복지법〉의 목적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동법의 보호 법익이 단순히 지원사업의 수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포괄한다는 점에서(〈예술인 복지법〉 제1조15))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에만 법상 보호되는 ‘예술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반함.
- 특히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국가공인 또는 등록제도로 오인되는 상황임. 〈예술인 복지법〉 적용 대상인 ‘예술인’을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예술인 복지법〉 적용 대상인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을 구분하고 예술활동증명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음.

[표5-4]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구분 관련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좌동)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제6조의5(예술 활동의 증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 활동의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 15) <예술인 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② 제1항에 정한 예술 활동의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예술 활동의 증명 및 그에 대한 완료에 관한 업무를 제8조에서 규정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요건, 세부 기준, 절차,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예술인과 예술활동의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구분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완료를 전제로 한 현행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어야 함.

[표5-5]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구분 관련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li> <li>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li> <li>3. 삭제&lt;2014. 3. 28.&gt;</li> <li>4. 삭제&lt;2014. 3. 28.&gt;</li> <li>5. 삭제&lt;2014. 3. 28.&gt;</li> <li>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li> </ol> <p>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삭제)</p>



(신설)	<p>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li> <li>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li> <li>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li> </ol> <p>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	--

- 이 경우 현행 예술활동증명 특례 중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는 폐지될 수 있음. 이들 특례는 예술활동증명 완료가 현행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임. 즉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사업 중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신문고 신고’의 경우, 별도의 활동증명 없이 특례 관련 증빙서류만 있으면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주는 것임(다른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해야 함)

[표5-6]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구분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인정기준 관련 운영지침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30조(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p> <p>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p> <p>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p>	(삭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융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융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융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예술인 복지법> 적용 대상을 예술활동증명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경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 대상을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한정할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검토를 통한 관련 규정(<예술인 복지법> 제10조16)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함.

## 2-1-2. 신규 예술장르에 대한 증명방식 대안 마련

개선방안2	<p>기존 15개 분과별 심의위원회의 새로운 예술장르에 대한 심의 전문성 강화</p> <p>(1) 새로운 예술장르의 예술활동 실적 심의 관련 심의위원회 워크숍 등 논의 강화</p> <p>(2) 새로운 예술장르에 해당하는 심의위원 풀 구성 및 특별심의 진행</p> <p>(3) 새로운 예술장르에 대한 전문성이 확인된 심의위원 위촉</p>
-------	---

- 16)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기존 장르 체계 외의 새로운 예술장르의 예술인이 예술활동증명 완료가 힘들다는 문제제기는 2019년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제시되었던 이슈임. 예술활동의 장르별 경계가 희미해지고,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예술인이 늘어나고 있음(예술활동의 정체성을 장르에 두지 않음).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예술활동이 많아진 최근 2~3년을 지나면서 신규 예술장르에 대한 예술활동증명 문제는 더 강력해졌음.

“분야를 선택하는 칸이 있거든요. 당연히 ‘기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기존 장르에) 포함되지 않는 예술이 앞으로 더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기타’가 있으면 어떨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기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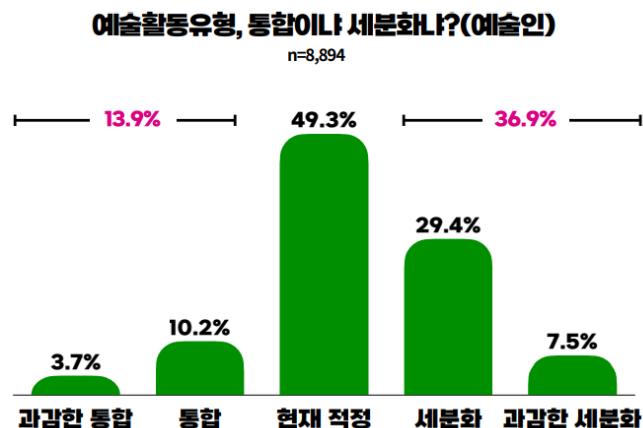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 FGI 내용 중

“제가 극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연극 무대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에서 퍼포먼스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쓴 작품을 텍스트로 작품을 만든다든지, 영상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실적들이 있었는데 이게 엄청 모호해지는 거죠. 미술 작가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연극 관련된 장르로 해야 되는 것인지. 심사하시는 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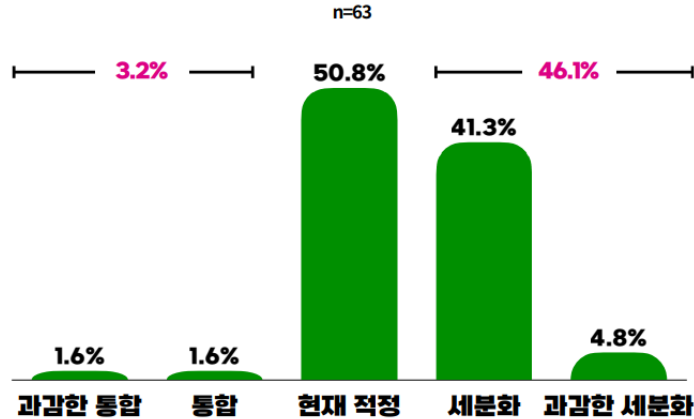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FGI 내용 중

- 그룹인터뷰에서는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보다 구체적인 분류 체계가 있을 경우 자신의 활동 상황을 증명하기에 수월하고 심의에 있어서도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특히 예술분야에서는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가 태어나고 있으며, 융합장르도 생겨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함. 이 데이터는 예술생태계의 변화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그림5-1] 예술활동증명 장르 세분화에 대한 예술인·심의위원 설문조사 결과



### 예술활동유형, 통합이나 세분화나? (심의위원)



- 예술활동증명의 장르 세분화에 대한 예술인과 심의위원의 의견은 위와 같음. 두 그룹 모두 세분화보다는 현재 걱정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세분화 및 과감한 세분화에 대한 의견 또한 각각 36.9%, 46.1%로 상당히 높았음. 이는 예술활동증명 심의에 있어 신청하는 예술인이나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각각 신청 및 심의에 있어 세분화된 신청과 심의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줌.
- 융복합 장르를 비롯한 신규 장르에 대한 심의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르에 적합한 세부 절차 마련과 전문가 참여가 보장될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현행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문화예술 분야에 신규 장르 분야를 추가하여 신규 장르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에 대한 열거식 정의에 대하여 그간 제기되어 온 것과 동일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또한 신규 장르에 대한 전문성 인정기준이나 신규 장르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신규 장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도 운영상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음.
-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장르 나열식에서 추상적 일반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동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더라도 예술활동증명 심의는 상당 기간 장르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법·제도적 준비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발의일자 : 2022.1.1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 현행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가 불확실하거나 기존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특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신규 장르 심의의 시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 참여를 임의 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강제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도 혼시 규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므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행 규정의 개정보다는 신규 장르에 대한 복합심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함.
- 새로운 예술장르에서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수가 일정한 양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분과별 심의위원회의 추가 구성보다는 기존 15개 분과별 심의위원회가 새로운 예술장르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갖추게 할 필요 있음. 향후 이삼년간 새로운 예술장르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수 누계를 보고 이 수치에 근거하여 새로운 분과의 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새로운 예술장르의 예술활동 실적 심의 관련 심의위원회 워크숍 등 논의 강화 : 심의위원회 전원위원회 및 분과별 회의에서 새로운 예술장르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 진행. 분과별 세부장르 체계를 만들고 명시. 필요 시 새로운 예술장르 관련 전문가·예술인 초대
  - 새로운 예술장르에 해당하는 심의위원 풀 구성 및 특별심의 진행 : 필요 시 새로운 예술장르에 해당하는 심의를 전담하는 심의위원 풀 구성 고려
  - 새로운 예술장르에 대한 전문성이 확인된 심의위원 위촉 : 기존 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필요 시 새로운 예술장르에 대한 전문성이 확인된 심의위원 위촉

## 2-2.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 및 유효기간

- 예술활동증명 기준의 적절성 및 시의성, 분야별 구분의 경직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분야별 특성 및 발표 매체 유형의 다양화를 감안하여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분야별 세부 기준을 지속적(매년)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은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예술인의 유형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최근 예술인에 의한 ‘디자인권’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활동 실적증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디자인권의 경우 소정의 출원 및 등록 절차를 권리 창설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디자인을 창작한 예술인이 아닌 발주처가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표되지 않는 디자인의 경우도 있음. 게다가 2014년 <예술인 복지법> 개정 시 예술활동증명 기준에서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저작권접권을 등록한 자가 삭제된 사항<sup>17)</sup>을 감안할 때, 디자인권 등록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음.
-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첨단 매체들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블로그 등의 개인 매체를 예술활동증명 인정 매체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문 심의를 통해 해당 예술활동의 내용을 심의하여 예술활동 인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2-2-1. 미술, 사진 및 건축 관련 세부 기준 개선방안

개선방안3	미술, 사진, 건축 분야 세부 기준 개선 (1) 온라인 공간에서의 작품 게시 유형 반영 ; NFT, 메타버스 등 (2) 건축 분야 별도 기준 마련 ; 건축 분야의 특성 반영
-------	--

- 현행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은 전통적인 형태의 미술전시에 중점을 두고 있음. 게다가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전시는 유형물의 전시에 국한되어 있음.<sup>18)</sup> 따라서 온라인 전시 공간, NFT,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의 작품 게시 유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은 미술, 사진, 건축에 동일한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용성과 기능성을 전제로 하는 건축 분야의 특성을 감안할 때 건축 분야의 경우 미술 및 사진 분야와 다른 인정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17) 2012년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저작권 등록 3건 이상이 있는 경우’ 예술활동으로 인정되었지만, 2014년 시행령 개정에서 삭제되었음. 삭제의 근거는 저작권 등록을 (예술인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점. <예술인 복지법>이 복지의 대상이 되는 예술인을 위한 법령이라는 점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포함하는 예술인의 기준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직업예술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임.

18) <저작권법>은 제19조에서 저작자의 전시권을 규정하면서도 전시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전시를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4343 판결.

[표5-7] 예술활동증명 인정기준 관련 시행규칙 [별표1] 개정안 - 미술, 사진, 건축

현행		개정안	
분야	세부 기준	분야	세부 기준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p>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3년 동안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p>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 전시회(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 작품 개인전(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3년 동안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회) 이상의 미술·사진 전시회(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건축	<p>가. 최근 5년 동안 1개 이상 시공된 건축물을 설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마. 최근 3년 동안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회) 이상의 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 2-2-2. 영화 및 연예 관련 세부 기준 개선방안

### 개선방안4

영화, 연예 분야 세부 기준 개선 ; 온라인 기반 예술활동 인정기준 마련

- 현행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은, 연예의 경우 예술활동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등 전통적인 매체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영화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영화를 전제로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저작권법> 제2조제36호)를 전제로 함.
- 그러나 웹드라마와 같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등 전통적인 매체 이외의 매체를 전제로 하는 예술활동이나 영화관에서 상영하지 않고 바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에 온라인 기반 예술활동,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하여 다양해진 온라인 매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시행 2021. 12. 27.]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73호, 2021. 12. 27., 일부개정]

제15조(발표 매체의 기준) ① ‘문예지 등’, ‘관련 잡지 등’이란 서적, 웹진 등으로 서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관련 매체’란 ‘관련 잡지 등’을 포함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첨단 매체들을 폭넓게 포함한다. 다만 블로그 등의 개인매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표5-8] 예술활동증명 인정기준 관련 시행규칙 [별표1] 개정안 - 음악, 국악, 영화, 및 연예

분야	세부 기준	
	현행	개정안
음악, 국악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이나 음악·국악 공연(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p>아. 최근 3년 동안 3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경우도 포함한다)에서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아. 최근 3년 동안 3장 이상의 음반(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영화	<p>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5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제7호에 따른 단편영화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마. 최근 5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송을 포함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5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제7호에 따른 단편영화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좌동)</p> <p>마. 최근 5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연예	<p>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p>	<p>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라디오에서 방송된(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 다. (좌동)</p> <p>라.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라디오에서 방송된(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마. (좌동)</p> <p>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	---

## 2-3. 예술활동증명 실적인정 범위

- 공공지원 사업, 레지던시 프로그램, 대안공간 전시 등은 현재 예술활동증명 실적인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다른 예술활동과 마찬가지로 분야별 예술활동 실적 기준에 해당한다면, 공공지원 사업이나 레지던시 프로그램, 대안공간 전시라는 이유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에 따른 심의에서 배제되고 있지 않음. 다만, 공공지원 사업이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모두 창작물의 공개 발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공지원 사업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활동 실적인정 범위로 일괄 규정할 수는 없음. 현행 운영지침의 기준을 유지할 필요 있음.
- 재전시, 재상영 작품에 대한 장르별 특성 인정의 경우, 운영지침<sup>19)</sup>에 근거하여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재전시와 재상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판단기준(운영지침)이 존재함. 현행 운영지침의 기준을 유지할 필요 있음.
  - 재전시 ; 기존 전시와 동일 작품으로 구성된 재전시는 현재 인정하지 않음. 전시명과 전시공간이 동일한 재전시가 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출품작품이 기존 전시와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확인 및 심의위원의 판단이 있어야 함.
  - 재출판 ; 문학에서 출판된 서적의 2쇄, 재판 등의 실적은 새로운 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재공연 ; 운영지침<sup>20)</sup>에 따라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연으로 인정. 연극의 경우 동일 작품을 12주 이상 연속하여 36회 이상 출연하면 3회 참여 실적으로 인정함.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확인 과정에서 재전시, 재상영, 재공연 등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활동을 통해 수입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함.

[표5-9] 2022년 지역축제 개최계획<sup>21)</sup>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4	51	38	17	7	18	21	4	112	104	29	107	75	98	77	121	41	944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 경연대회, 축제, 행사에서의 공연은 현재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술분야에 특화된 축제(ex. 춘천마임축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등)에서의 공연 등은 심의과정에서 확인·판단함. 이러한 기준의 배경에는 경연대회, 축제, 행사 등에서의 공연이 전문예술활동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가 절대다수이기 때문임. 심지어 활동 실적 생산을 목적으로 한 행사 개최와

19)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3조 2항 “기준 기간이 산정되는 시점은 저작물의 첫 공표일자로 한다.”

20)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4조 5항 및 6항 ⑤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⑥ 연극의 경우 동일한 작품이라도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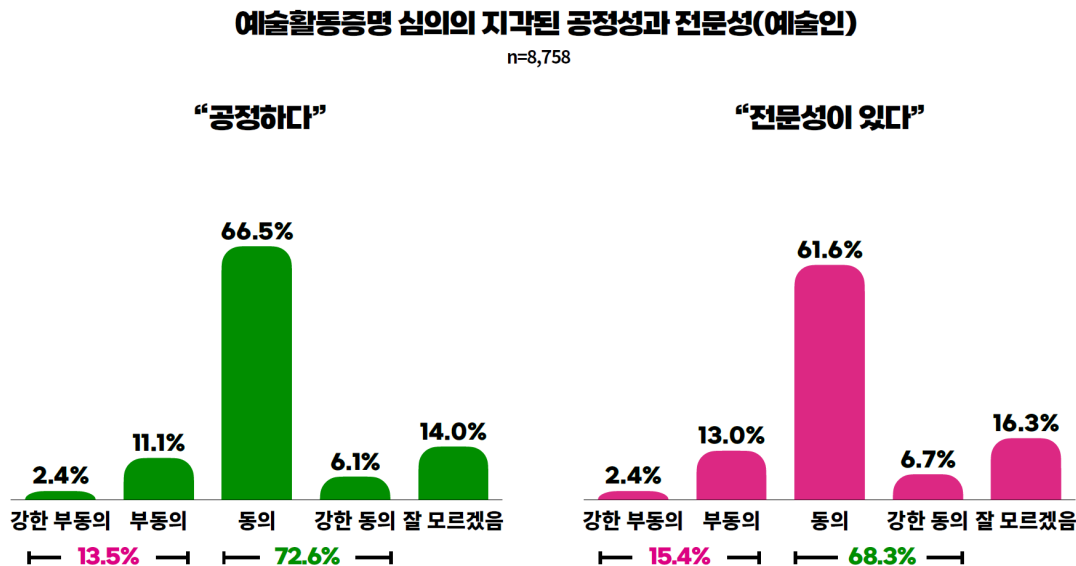
21) 작성 대상 : 일정기간(2일 이상)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관광예술축제(문화관광축제, 특산물축제, 문화예술제, 일반축제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축제, 지자체 주최(주관)하는 축제, 지자체에서 경비 지원 또는 후원하는 축제, 민간에서 추진위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도 포함

※ 작성제외대상 :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시상식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경로잔치 등), 순수 예술행사(음악회, 전시회 등),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학술행사, 국제회의, 시민의날, 엑스포, 박람회, 패션쇼 등)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경연대회, 축제, 행사에서의 공연을 활동 실적인정의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수요 관리의 측면 등에서 심의과정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음(심의 속도와 공정성의 측면에서 위험 요소). 현행 운영지침의 기준을 유지하되, 예술활동에 특화된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심의위원회 내부 논의 등이 필요함.

- 특정한 조건의 활동에 대한 실적인정 여부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실적 및 소득과 관련한 세부 기준, 실적인정 범위 등에 대한 적용/해석에 있어서의 심의위원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기도 함. 공개 발표되거나 수입이 발생한 예술활동에 대한 판단 과정의 일부는 심의위원의 정성적 판단이 포함되는 영역이기는 함. 하지만 심의위원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예술인들의 신뢰가 아직 높은 상황이기에, 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심의과정 및 내용, 미완료 사유에 대한 공지 등을 통한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투명성 제고, 예술인들과의 소통 노력이 더해진다면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5-2] 심의 공정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예술인



#### 2-3-1. 미술, 사진, 디자인, 건축 관련 인정기준 개선방안

개선방안5	<p>미술, 사진, 건축 인정기준 개선</p> <p>(1) 미술 ; 유형적 매체를 전제로 하는 ‘공간예술, 조형예술’ 등의 표현 삭제</p> <p>(2) 건축 분야 인정기준 분리 ; 건축의 정의 재조정 및 분야의 특성 반영</p>
-------	--

- 미술, 사진 분야와 건축 분야 인정기준을 분리하고 건축의 범위를 건물 이외에 구조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형적 매체를 전제로 하는 “공간 예술, 조형 예술 등”의 표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표5-10] 예술활동증명 인정기준 관련 운영지침 개정안 - 미술, 사진, 건축

현행	개정안
<p>제18조(미술, 사진, 건축 분야 인정기준) ①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공간 예술, 조형 예술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응용미술’은 실제적인 효용에 목적을 둔 미술로 도안, 장식 따위가 있다.</p> <p>② 미술 분야 범주로는 그림,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프랙탈 아트, 행위예술 등의 세부 장르와 미술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p> <p>③ 공공미술은 전시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p> <p>④ ‘사진’은 빛의 작용으로 사물의 형상을 감광판(필름, 센서)에 각인시켜 보존하는 이미지를 뜻하며, 널리 사실의 기록과 증명의 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한편 사진가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는 창작수단이기도 하다.</p> <p>⑤ 사진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p> <p>⑥ ‘건축’은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요구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예술 또는 그 기술을 뜻한다.</p> <p>⑦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또는 설계),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p> <p>⑧ 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는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고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통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제18조(미술, 사진 분야 인정기준) ①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을 말하며 ‘응용미술’은 실제적인 효용에 목적을 둔 미술로 도안, 장식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p> <p>② 미술 분야 범주로는 그림,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프랙탈 아트, 행위예술 등의 세부 장르와 미술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p> <p>③ 공공미술은 전시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p> <p>④ ‘사진’은 빛의 작용으로 사물의 형상을 감광판(필름, 센서)에 각인시켜 보존하는 이미지를 뜻하며, 널리 사실의 기록과 증명의 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한편 사진가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는 창작수단이기도 하다.</p> <p>⑤ 사진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p>
<p>(신설)</p>	<p>제19조(건축 분야 인정기준) ① ‘건축’은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요구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계하고 짓는 예술 또는 그 기술을 뜻한다.</p> <p>②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또는 설계),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p> <p>③ 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는 예술 활동으로 인정되고 시공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전통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p>

## 2-3-2. 연극 관련 인정기준 개선방안

### 개선방안6

연극 관련 인정기준 개선 ; 낭독극, 교육연극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문구의 삭제

- 현행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은 연극 분야의 경우 작품 개발 차원의 낭독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이는 낭독극 자체를 배제한다는 오해를 일으키며 완결된 형태의 낭독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극계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도 못함. 또한 교육연극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인정 대상인 '일정 정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룬 경우'의 기준이 모호함. 따라서 예술활동증명 인정 대상 연극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심의 단계에서 다양한 연극 형태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원천적 적용 배제를 야기하는 문구의 삭제가 필요함.

[표5-11] 예술활동증명 인정기준 관련 운영지침 개정안 - 연극

현행	개정안
제21조(연극 분야 인정기준) ① '연극'은 배우가 각 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 주는 무대 예술이다. ② 연극 분야 범주로는 대사극, 음악극(오페라, 창극(국극), 뮤지컬), 무용극, 마당극, 거리극, 마임, 행위예술, 전통연희(판소리, 가면극, 인형극, 그림자극), 아동·청소년극, 교육연극 등의 세부 장르와 연극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극작,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안무,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학생 공연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작품 개발 차원의 낭독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교육연극의 경우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되 해당 공연이 일정 정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룬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21조(연극 분야 인정기준)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 ⑤ (삭제)

## 2-3-3. 영화 및 연예 관련 인정기준 개선방안

### 개선방안7

영화 및 연예 인정기준 개선 ; 온라인 기반 예술활동 반영

- 영화 및 연예 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예술활동인 영화상연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의 공중 관람과 관중 앞에서의 공연을 확대하여 온라인 기반 예술활동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영화 분야의 경우 타 분야와 달리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전제로 함. 저작권법상 저작물과 예술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저작물”이라는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5-12] 예술활동증명 인정기준 관련 운영지침 개정안 - 영화, 연

현행	개정안
<p>제22조(영화 분야 인정기준) ①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p> <p>② 영화 분야 범주로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세부 장르와 영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시나리오,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기획 등이 있다.</p> <p>③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제22조(영화 분야 인정기준) ①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예술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의 공중(公衆) 관람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송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p> <p>② ~ ⑤ (좌동)</p>
<p>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p> <p>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p> <p>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p>	<p>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연기·무용·연주·가창·만담·마술·곡예, 그 밖의 예능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 ⑤ (좌동)</p>

<p>라 출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p> <p>④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⑤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	--

#### 2-3-4. 음악, 국악 관련 인정기준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 경연대회(콩쿠르), 축제, 행사 등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무용 분야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경연, 축제, 행사 등의 참여도 예술활동증명 인정기준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표5-13] 예술활동증명 인정기준 관련 운영지침 개정안 - 음악, 국악

현행	개정안
제19조(음악, 국악 분야 인정기준)⑦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9조(음악, 국악 분야 인정기준)⑦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경연, 축제, 행사 등의 성격이 있으나 참여 자체가 일정 수준을 전제로 초청받아야 가능할 경우 등은 인정할 수 있다.



## 2-4.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

-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안은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통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현행 3년, 5년에서 5년 단일체제로 개편하고, 갱신 시 유효기간을 늘림과 동시에 일정 기간(20년) 동안 예술활동이 확인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이후 갱신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는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운영 합리화 및 정책적 고려의 차원으로 제안하는 개선방안임.

### 2-4-1. [심의운영] 유효기간 5년 통일 및 갱신 시 유효기간 연장

개선방안8	<p>[심의운영]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관련 개선방안</p> <p>(1) 재신청에 대한 사항을 &lt;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gt;으로 정함.</p> <p>(2) '5+5+10'으로 갱신 시 유효기간 연장. 3번째 갱신 시 영구 완료</p> <p>(3) 재난 상황에서 유효기간 연장</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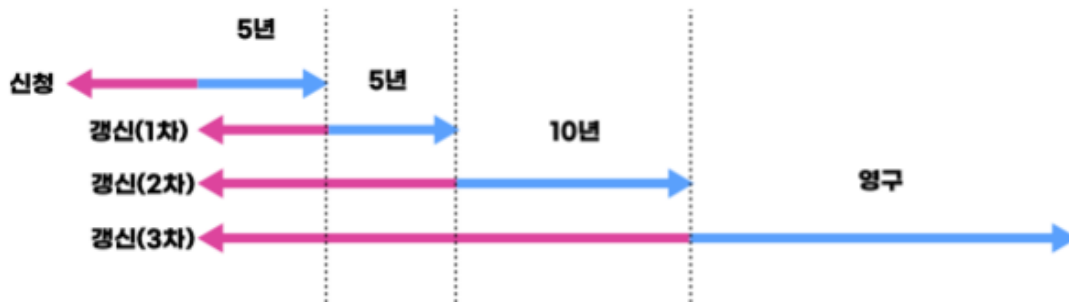
- 현행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은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신청을 하도록 하며,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실효에 따른 재신청 내용을 동일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행정 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에 관한 사항을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술활동증명 심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준의 완화, 갱신 횟수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차등 적용, 일정 횟수 이상 갱신 시 영구적 효과 부여 등을 재신청 절차의 간소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권리 창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정의 예술활동을 계속하는 예술인에게 공공재원이 투입되거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의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재신청 시 서류의 간소화, 갱신 횟수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차등 적용, 일정 횟수 이상 갱신 시 영구적 효과 부여 등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과 애초 최소기준으로 설정된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예술인 복지사업으로 진입하는 기초자격을 확인하는 역할(출입문)을 할 뿐 실질적인 복지사업으로의 진입은 별도의 추가 심의가 필요한 만큼 법리적 해석을 넘어서는 예술인 복지정책 차원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존재함(정책적 판단의 배경에는 예술활동증명 심의기간 단축 관련 이슈가 있음).
- 연구진의 제안은 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및 예술활동 수입을 통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고<sup>22)</sup>, ② 갱신 시 유효기간을 5년(1회), 10년(2회), 영구 완료(3회) 형태로 개선하는 것임. 이럴 경우 최초 신청 시점에서 영구 완료 때까지는 20년이 소요되며, 20년 동안의 활동 실적이 확인된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증명 영구 완료(3번째 갱신 때)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각각 이전의 활동에 대한 증명으로 가능한 것인 만큼 2번째 갱신 시 10년의 유효기간과 3번째 갱신 시 20년 유효기간 설정이 가능. 총 3번의 갱신으로 발생하는 유효기간을 모두 더하면 40년의 유효기간이 되며,

2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및 특례는 제외

20대에 처음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는 조건에서 3번째 갱신까지를 상정하면 60대가 되는 것임. 원로예술인 활동증명 기준(만70세)과도 근접하게 됨. 3번째 갱신으로 총 40년의 유효기간이 확인된 예술인에게 영구 완료 결정을 하는 것임.

- 활동 실적 세부 기준을 5년으로 통일하되, 3년 → 5년으로 변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예술인도 손해 보지 않는 수준의 기준 개정이 필요함(예를 들어, 3년에 1편의 기준은 5년에 1편으로 개정). 이는 실질적인 활동 실적인정 기준의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세부 기준의 조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회, 장르별 예술인 및 관련 단체 등과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합의가 필요한 지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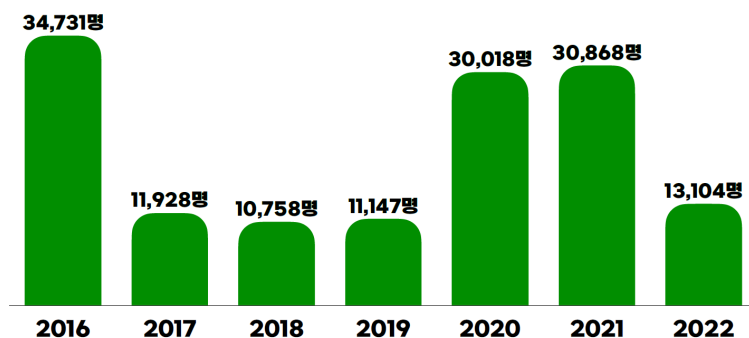
[그림5-3] 예술활동증명 갱신 시 유효기간 연장 제안 ; 5+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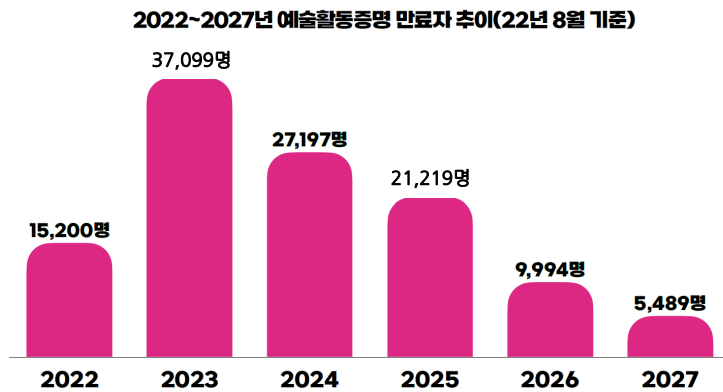


- 재신청 유효기간을 '5+5+10'(유효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고, 2회 갱신 시 유효기간 10년, 3회 갱신 시 영구로 완료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 형태로 확대·개선하는 것은 현행 1년, 3년, 5년 등으로 나뉘어 적용되는 유효기간을 단순화하고, 예술인의 재신청 부담을 큰 폭으로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의 업무량 감소 효과도 예측할 수 있음.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업무량이 급증한 2020년 이후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3만 명 수준임. 2022년 또한 6월 기준 자료에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의 현황 페이지에 공개된 '신청완료', '접수확인', '행정검토중', '위원회 검토중'의 인원이 27,811명임을 감안하면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증명 완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그림5-4]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만료자 추이

2016~2022년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추이(22년 6월 기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연구진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재신청 절차를 유지할 경우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위와 같은 추이로 예술활동증명 만료자가 발생함. 2023년에는 1년 동안 처리 가능한 예술활동증명 업무량을 상회하는 규모로 재신청 대상자가 발생해 예술활동증명 관련 업무량이 적어도 2배 이상 폭증할 가능성이 있음. 재신청 절차를 '5+5+10'의 형태로 개선하면 이러한 폭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의 경우 긴급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난 상황 관련 규정이 필요함. 코로나19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예술활동증명 재신청(갱신) 신청 인원은 아래와 같음.

[표5-14] 2017~2021년 예술활동증명 신규신청 및 재신청(갱신) 예술인의 수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신청 인원	18,640	22,424	26,866	66,598	69,194
신규신청 인원	16,119	16,814	18,218	53,660	55,833
	(86.5%)	(75.0%)	(67.8%)	(80.6%)	(80.7%)
재신청(갱신) 인원	2,521	5,610	8,648	12,938	13,361
	(13.5%)	(25.0%)	(32.2%)	(19.4%)	(19.3%)

-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예술인의 수가 늘어나고, 정부의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인 복지사업이 늘어나면서,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의 수가 폭증하였음. 그리고 이 시기 '코로나19 기간 중 취소된 예술행사를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2020년)하고, '재난기간은 예술활동증명 실적 산정 기준에서 제외'(2021년)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2020년과 2021년의 코로나19 재난기간을 예술활동증명 실적 산정 기준에서 제외했다면, 이 시기 약 20%에 달하는 재신청(갱신) 인원에 대한 재신청 면제(유예) 조치도 가능했으나 실제로는 재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했음. 재신청 인원에 대해 면제(유예) 조치를 했다면 심의 소요 시간이 짧아졌을 수 있음.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면, 재난으로 선포된 기간 내의 유효기간을 재난기간 종료 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신청(갱신)을 면제(유예)함으로

써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재난기간 내 유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예술활동증명 완료 상태는 유지되며, 재난기간에 포함되었던 유효기간이 재난기간 종료 후 다시 시작되는 방식).

[표5-15]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관련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의3(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의3(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규칙 별표 1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및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회 이상(연속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자격을 유지한 이후 예술 활동 증명을 재신청하는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사태를 선포되거나 같은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되는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은 같은조 제4항에 따라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으로 한다. ④ 3회 이상(연속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한다. (제1안) ④ 3회 이상(연속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자격을 유지한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한다. (제2안) ④ 3회 이상(연속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이 면제된다.

[표5-16]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관련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안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현행)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제2조의3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표 1]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문화예술 분야	구분	유효기간
문학	별표 1 제1호 세부 기준란(이하 “세부기준란”이라 한다)의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세부기준란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세부기준란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세부기준란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음악, 국악	-	3년
무용	-	3년
연극	-	3년
영화	세부기준란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세부기준란 나목,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연예(演藝)	세부기준란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세부기준란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만화	-	5년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효기간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년
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3년 동안 360만 원 이상인 사람	3년
다.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3년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개정안)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제2조의3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표 1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문화예술 분야	구분	유효기간
문학	별표 1 제1호 세부 기준란(이하 “세부기준란”이라 한다)의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세부기준란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세부기준란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세부기준란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음악, 국악	-	5년
무용	-	5년
연극	-	5년
영화	세부기준란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세부기준란 나목,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연예(演藝)	세부기준란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세부기준란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만화	-	5년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효 기간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인 사람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년
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사람	5년
다.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5년

[표5-17]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관련 규정 비교

현행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2조의3(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 ①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규칙 별표 1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및 영 제2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회 이상(연속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자격을 유지한 이후 예술 활동 증명을 재신청하는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되거나 같은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되는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은 같은조 제4항에 따라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으로 한다.

	④ 3회 이상(연속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한다. (제1안)
	④ 3회 이상(연속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자격을 유지한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한다. (제2안)
	④ 3회 이상(연속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이 면제된다.

※ 유효기간 관련 참고 입법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로만 하며,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4-2. [심의운영] 심의위원 풀 확보 및 긴급 시 임시 심의위원 위촉

**개선방안9** [심의운영] 심의위원 풀 확보 및 긴급 시 임시 심의위원 위촉 가능

- 예술활동증명에 긴급성을 요하는 특정 사안의 경우 속진제 도입이 고려될 수 있음. 현행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은 제29조(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제30조(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에서 속진제를 인정하고 있음. 산재보험 가입 지원,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한하여만,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하고 이후 정식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야 함.
- 또한 속진제 도입에 따른 실익에 비하여 적용 대상 예술활동증명 사안 여부 기준 마련 및 운영에 있어서 절차상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현행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상 심의위원회 위원 풀을 확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따른 심의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심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위원을 임시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표5-18] 심의위원회 관련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한다. ④ ~ ⑦ (생략)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좌동) 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재단의 상임이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 ⑦ (좌동)

#### 2-4-3. [심의운영]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 개선방안10 [심의운영] 장애예술인 지원 ; 장애 유형별 지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 장애예술인의 예술창작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심의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장애 예술인 및 일부 심의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기존의 예술계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나 전문성과 관련된 기준이 장애 쪽으로 오게 되면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으로 어쨌든 열악한 위치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분들이 많은데 똑같이 적용되면 불이익을 받는 거죠. 기본적으로 발표 기회도 제한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 장애예술인 FGI 내용 중

“큰 틀에서는 예술인이라는 틀 안에 있으되 장애예술인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특별히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신청부터 증명하는 방식 등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원로예술인처럼 서포트 해주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술을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예술인은) 전문예술가로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되게 제한적이다.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장애예술가분들 중에서도 되게 제한적이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비장애인 기준으로 맞추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별도로 하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면...”

- 장애예술인 FGI 내용 중

- 예술활동증명 제도 도입 당시 ‘예술인의 기준은 경력자가 아닌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최소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이를 최소 1년 동안 1건 이상의 예술활동 실적이라고 했음(최소 실적 기준)<sup>23)</sup>. 최소 실적 기준에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기준, 특례 여부 등이 논의되려면 장애예술인의 예술창작 활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함.

23)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2) p.57



- 장애예술인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이전에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대한 논의 및 개선방안 마련은 필요함.
- 시각장애인의 경우, 홈페이지 내용 중 엑셀 표 안의 내용 등 시각장애인용 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없는 내용이 있음. 예술활동증명 관련 일부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때가 있다고 함.
- 발달장애인, 혹은 수어 체계에 익숙한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리터러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예술활동증명 관련 행정용어나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시각장애인용 프로그램 사용 시) 일단 웹 인증을 받아도 콘텐츠가 올라오면 아예 전용으로 만든 게 아니면 문맥도 다르고. (프로그램 특성상) 어쨌든 시각장애인은 순서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듣기 위해서 엄청 빨리 돌린단 말이에요. 원하는 부분을 잡아야 하는데 못 잡으면 다시 듣고 또다시 듣고 하는 거죠. 이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또 청각 장애인은 리터러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수어를 어려서부터 사용하면 한글 해독이랑 수어랑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말이 어려우면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죠.”

- 장애예술인 FGI 내용 중

- 예술활동증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신청 등에 대한 장애 유형별 지원이 필요함. 장애예술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과 같은 곳에서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 증명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 이동이 어려운 재가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도 필요한데, 지역별 장애인 복지기관 및 지역문화재단과 장애예술전담지원기관 ‘이음’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방안(위탁 포함)을 모색할 필요 있음.

#### 2-4-4. [심의운영] 예술대학 졸업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 불가

현행유지

[심의운영] 예술대학 졸업자에 대한 예술활동증명 인센티브 부여 불가

-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직업예술인의 ‘활동’을 확인하는 제도이지, 직업예술인으로서의 자격을 판단하는 제도가 아님.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도입되던 시기에도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자격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으나 ‘예술학과를 졸업했다는 것만으로’ 직업으로서 예술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림. 예술활동증명은 ‘자격에 의한 증명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비슷한 맥락에서 회원·단체 확인서를 활동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sup>24)</sup>가 있었으나 이 또한 ‘현재 활동’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불수용 의견으로 정리됨. 예술대학 졸업 여부, 회원·단체 확인서 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만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 예술활동을 시작하는 예술인을 위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바 예술대학 졸업자에 대한 별도의 예술활동증명 인센티브는 부여하기 어렵다는 결론임.

24) 2021년 7월~8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음.

#### 2-4-5. [심의운영] 심의과정 안내 강화 ; 프로세스 바 개선

##### 개선방안11 [심의운영] 심의과정 안내 강화 ; 작업진행률 프로세스 바 개선

- 심사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불만은 ‘절대 소요 시간이 길다’는 것과 ‘본인의 심의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는 두 가지로 제기됨. 어떤 이유로 늦어지는지 알고 기다리는 것과 모르고 기다리는 것이 예술인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임.
-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상에서 현재 본인의 심의가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작업진행률 프로세스 바(process bar)’를 지금보다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5-5] 예술활동증명 프로세스 바 개선(예시)



#### 2-4-6. [심의절차] 심의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한 기술지원

##### 개선방안12 [심의절차] 심의위원을 위한 심의페이지 구축 ; 문서 탐색과 열람 편의성 구축

- 심의위원의 심의과정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한 가지는 검토해야 할 제출자료 형식의 다양성의 문제, 다른 하나는 자료를 찾고 열고 자료를 오가며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 심의페이지의 인터페이스 부재의 문제임.

“실제 심의할 때인데 제출자료 형식의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첨부자료를 일일이 열어봐야 되는 불편함이 정말 커요. 그래서 이것을 좀 통일시켜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예술인들에게) 지침상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안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중략) 자료 형식이 다양한 것을 열람하는 과정이 심의건수가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예요.”

- 심의위원 FGI 내용 중

“심사가 차수별로 있는데, 만약에 5월에 5차를 했는데 4차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한 케이스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걸 내가 과거 판단은 이런 비슷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또는 다른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싶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 완료 처리에 대한 제 코멘트나 결과에 대해서 건수만 보이고 그걸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 심의위원 FGI 내용 중

- 제출자료 형식의 다양성 문제는 예술활동증명 참여 예술인의 상황과 편의를 고려해 다양한 형식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청 단계에서 제출자료 형식을 제한해 제출자료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거나, 다양한 형식의 자료가 자동 변환되어 보여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함(인터페이스와 연결).
- 초기 단계에서 제출자료의 형식을 제한할 경우, 신청 단계에서 제출자료의 변환을 돕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현재의 심사 전산시스템은 심사를 위한 지원시스템이라기보다는 심사자료를 쌓아놓은 창고 수준임. 압축을 풀고, 각기 다른 포맷의 자료를 일일이 열고 닫으며 자료를 확인해 가야 함.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찾아 확인하고 이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심사위원을 위한 지원 요소는 찾아보기 어려움.
- 가장 시급한 것은 심의위원을 위한 심의페이지를 구성해 제공하는 일임. 예를 들어, 맥os의 탐색기에서 지원하는 ‘미리보기(Preview)’ 기능처럼 다양한 포맷의 문서 첫 페이지를 썸네일 형태로 보여주고, 아이콘을 오갈 때마다 해당 문서의 첫 페이지를 확대해 보여주는 형식의 문서 열람을 위한 인터페이스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문서의 탐색과 열람 시간을 줄여 줄 수 있음.

#### 2-4-7. [심의절차] 예측 가능한 심의절차 운용

##### 개선방안13 [심의절차] 심의건수, 심의시기 등을 사전에 약속

- 심의위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심의 시기와 분량으로 인한 심의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음. 장르별로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의 수가 많은 장르의 경우 심의 시기와 분량이 규칙적이지 않거나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을 경우 심의 지연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심사 건수가 예측 가능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을 내서 할 거 아니에요 본업들이 있으니깐. 오늘 오후에 한두 시간을 할당해서 한 이백 건을 끝내야 하는데 퇴근하고 한 번 더 점검을 하면 또 한 백 건이 들어와 있어요. 이러면 제가 심사를 하는 시간을 배당하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더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좀 예측이 되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안 들어온다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 심의위원 FGI 내용 중

“저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 금요일, 토요일 밤 시간을 주로 활용을 하거든요.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 들어와 있을 때 백 건이 넘게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들어와 있으면 또 백 건이 들어와 있고, 한 달에 몇 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 심의위원 FGI 내용 중

- 심의위원의 심의건수(분량), 심의시기 등을 사전에 정해 놓고 심의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심의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에는 사전에 확보한 심의위원 풀을 활용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때에는 분과별 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심의위원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가능한 심의위원이 심의를 더 하는 방안 등).

2-4-8. [심의절차] 행정심의 인력 충원

개선방안14 [심의절차] 행정심의 인력 충원

-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예술활동증명 행정심사 인력은 정규직 6명과 계약직, 인턴, 실습 포함 9명. 정규직 기준으로 이들이 처리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행정심사 건수는 1인 1일 평균 35.6건에 달함(정규직 기준). 월 4,700건(35.6건×6명×22일=4,699.2건). 2020년 1월 이후 신청 규모가 행정심사 인력의 처리 한계치를 넘어섰으며, 잔여 건이 계속해서 쌓이는 중임.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2년 12월 말에는 51,044건이 남을 것으로 예상

[표5-19] 연도별 예술활동증명 업무 투입인력 증감 현황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인원(명)	증감(명)	인원(명)	증감(명)	인원(명)	증감(명)	인원(명)	증감(명)
정규직	4	(-)	5	(1)	6	(1)	6	(-)
계약직	0	(-)	0	(-)	0	(-)	1	(-)
인턴	3	(3)	12	(9)	16	(4)	7	(-)
실습	0	(-)	0	(-)	16	(16)	1	(-)

\* 인턴(단기): 체험형인턴(최대 5개월 근무), 연 운용인력 합계

\* 실습(단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2개월-4개월). 연 운용인력 합계

-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증가한 심의 소요 기간(코로나 이전 4~7주, 2022년 이후 15~20주로 공지 중)에 대한 가장 빠른 해결방안은 행정심의인력 충원이라고 할 수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체 추산에 따르면, 2022년도 신청 건의 처리를 위해서는 업무투입률 2배 제고, 즉 투입인력 6인 증원 필요함.

[표5-20] 2022년 예술활동증명 처리·잔여 추이 시뮬레이션<sup>25)</sup>

* 연간 처리·잔여 추이 시뮬레이션 (연 9,800건 신청 / 월 4,700건 처리)											
구분	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신청	26,544	9,500	9,500	9,500	8,000	7,500	7,500	7,000	6,500	6,500	98,044
누적	26,544	36,044	45,544	49,000	55,044	62,544	70,044	77,044	83,544	90,044	
처리	4,700	4,700	4,700	4,700	4,700	4,700	4,700	4,700	4,700	4,700	
잔여	21,844	26,644	31,444	36,244	39,544	42,344	45,144	47,444	49,244	51,044	
* 연간 처리·잔여 추이 시뮬레이션 (연 9,800건 신청 / 월 9,400건 처리)											
구분	1-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신청	26,544	9,500	9,500	9,500	8,000	7,500	7,500	7,000	6,500	6,500	98,044
누적	26,544	36,044	45,544	49,000	55,044	62,544	70,044	77,044	83,544	90,044	
처리	9,400	9,400	9,400	9,400	9,400	9,400	9,400	9,400	9,400	9,400	
잔여	17,144	17,244	17,344	17,444	16,044	14,144	12,244	9,844	6,944	4,044	
* 현재 처리 역량을 2배로 올릴 경우, 10월에 잔여 처리건 해소 (신청건=처리건)											

25) '예술활동증명 신청.심의 현황'(2022.4.7. 예술인지원팀)

## 2-4-9. [심의절차] 예술활동증명 상담전담팀 구성

### 개선방안15 [심의절차] 예술활동증명 상담전담팀 구성 및 운영

- 현재 예술활동증명 행정심의를 담당하는 인력은 정규직 6명과 계약직, 인턴, 실습 포함 9명으로 총 15인. 그런데 이들이 행정심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단순문의 및 민원까지 받는 상황임. 실제 예술인 민원의 40% 정도가 아이디 및 패스워드 분실에 대한 단순문의임.

[표5-21] 예술활동증명 관련 부가 업무 및 수행 중인 타 업무 현황

구분	업무 내용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	육아로 인해 예술창작이 중단되지 않도록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이용이 가능한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 2개소 운영(대학로, 마포) 관리
예술인패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및 문화예술종사자(문화예술교육사·학예사·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자·관장) 대상 예술인패스 발급과 재발급 업무(상시) 할인 혜택 제휴사(국공립 미술관·공연장 및 사립 문화예술시설, 식당, 카페, 여행업)발급(상시) 및 할인혜택 취합·안내(매월 1회)
재단 전화상담센터 운영관리	재단 대표번호 전화상담센터 위탁용역 업체 선정, 과업지시, 업무관리, 근태관리, 회계정산 등
지역협력	예술활동증명 협력 협·단체(전국 14개 광역문화재단) 행정심의(신진) 진행 상황 검토, 1:1 방문 교육(수시), 문의사항 응대(상시), 통합 간담회, 정례 방문 모니터링 등
통계솔루션 운영관리	통계솔루션 프로그램 운영관리, 지자체·지역문화재단 요청에 따른 지역 예술인 현황(지역·성별·분야·연령·장애여부 등) DB 추출 및 정제, 회신(월 최소 10건 이상 요청(공문 수발신))
시스템 운영관리	예술활동증명 신청·심의 온라인 시스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및 오류 포착·개선
심의위원회 운영관리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회(15개 분과 115명) 심의 배분 및 심의 진행 상황 점검(수시), 전체위원회(연 1회) 및 분과위원회(수시) 개최, 심의비 정산 및 지급(월 1회)
성과관리 및 대외업무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성과관리 및 경영실적보고서 제작, 중앙 부처 및 국가 감사기관(국회 의원실) 요청자료 작성·제출, 국정감사 대응

- 민원상담 등 부가업무의 부담 여부는 재택근무 시 행정심의 처리 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재택근무 시(사무실에서의 부가 업무의 부담이 줄어들었을 때)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 처리는 47.4건으로 사무실 근무 시보다 1일 20건이나 더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5-22]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 처리 현황(평균)<sup>26)</sup>

근무형태	1인 1일 평균 처리건
사무실 근무	27.0건
재택근무	47.4건
전체	35.6건

[표5-23] 예술활동증명 민원 현황('21년)<sup>27)</sup>

구 분	누적합계
유선민원	114,046건
방문민원	3,948건
1:1 문의	15,655건

-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활동증명 실무인력 외) 내부 전담팀 구성 또는 아웃소싱업체 고용을 고려해볼 수 있음. 이를 통해 행정심의 속도를 높여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낼 것임.
- 아웃소싱의 경우, 신청 예술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민원상담만을 전담하는 방식이어야 함. 아웃소싱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찰, 교육, 워크숍 등의 과정이 필요함.

#### 2-4-10. [심의위원회] 분과별 심의위원회 내부 기준 공식화

##### 개선방안16 [심의위원회] 분과별 심의위원회 내부 기준 공식화

- 현재 각 분과별 심의위원회에서는 활동 실적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 일관성을 위해 내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장르별 심의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분과위원회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 분과별 심의위원회 논의 및 심의위원회 전체 논의 등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 있음. 그리고 현재의 분과별 심의위원회 내부 심의기준을 공식화하고 심의위원회 공식 기록으로 남길 뿐 아니라 이를 예술인에게도 적절한 수준에서 안내할 필요 있음.
- 분과별 특정 내부 기준이 일반화되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시행규칙 및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거나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사전 설명/홍보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인지시키는 과정을 밟을 수 있어야 함.

26) '예술활동증명 신청·심의 현황'(2022.4.7. 예술인지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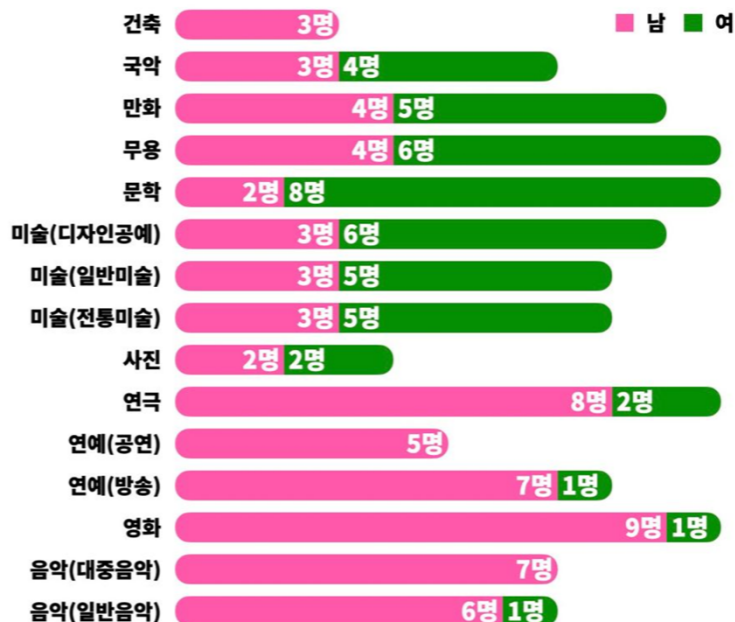
27) '예술활동증명 신청·심의 현황'(2022.4.7. 예술인지원팀)

2-4-11.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성별, 연령별 비율 구성

개선방안17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성별, 연령별 비율 개선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20년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sup>28)</sup> 2021년~2022년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위촉 현황에서는 심의위원 성별 비율이 여성 40%, 남성 60%로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분과별 심의위원 성별 분포를 보면, 분과별로 성별 비율이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분과는 전체 15개 중 6개에 불과. 건축과 연예(공연)의 경우 100% 남성으로만 구성되었음. 운영지침 규정이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기준을 정하였고, 장르별 심의위원 위촉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과별 심의위원의 성별 균형에 대한 고려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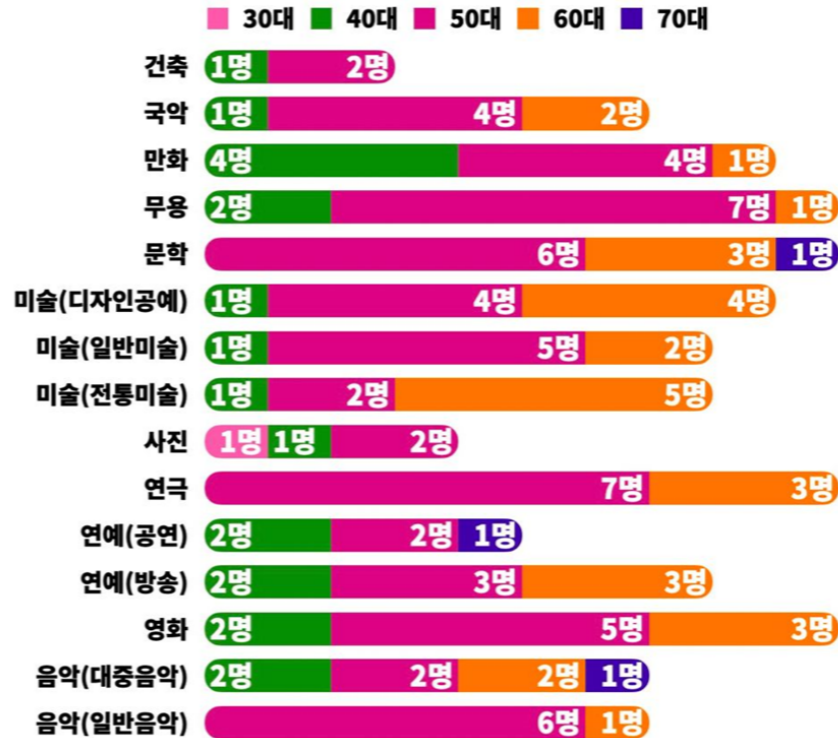
[그림5-6] 2021~2022년 예술활동증명 분과별 심의위원 성별 분포



28)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8조(분과위원회)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분과위원회는 3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연령별 비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2021년~2022년 예술활동증명 분과별 심의위원의 연령대 분포와 2022년 8월 15일 기준 연령별 예술활동증명 현황은 아래와 같음.

[그림5-7] 2021~2022년 예술활동증명 분과별 심의위원 연령대 분포(평균 5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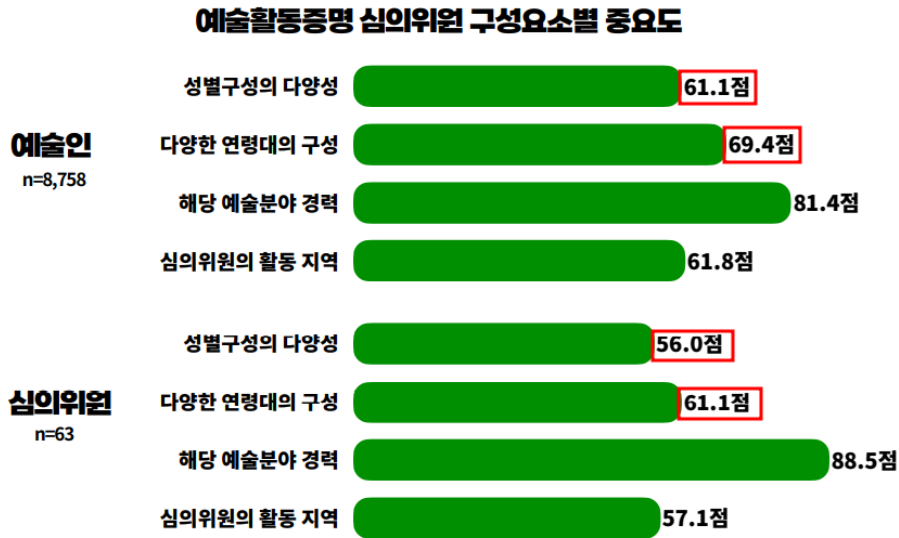
[표5-24] 연령별 예술활동증명 현황(2022.8.15. 기준)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예술인수	28,267	47,969	26,396	19,315	15,231	6,794	2,079	146,051
%	19.4	32.8	18.1	13.2	10.4	4.7	1.4	100.0

- 설문조사에서도 심사위원 및 예술인 모두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연령대별·성별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특히 예술인들의 경우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에 대해 70점 가까운 점수를 보였음.
- 심의위원 연령대 비율의 문제는 심의의 공정성·전문성과 관련한 것이 아님. 다만, 현재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중 52.2%가 20대와 30대인 것에 반해 심의위원 중에서는 30대가 1명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에 심의위원 연령대 분포 비율을 운영지침 등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연령별 예술활동증명 현황을 고려한 심의위원 충원이 필요함.



[그림5-8]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구성요소별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4-12.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임기 확대

**개선방안18**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임기 확대 ; 1년 → 3년

- 현행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은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연임을 허용하고 있음.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 만큼 지속적으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매년 위촉하는 방식보다는 3년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표5-25]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재단의 상임이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④ ~ ⑦ (현재의 ③ ~ ⑥과 동일)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p>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p> <p>⑤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p> <p>⑥ 재단의 상임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p>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p> <p>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p> <p>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p>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

## 2-5. 기타

### 2-5-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개선방안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예술인 복지법>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

- 현행 <예술인 복지법>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활동증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 <예술인 복지법>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예술활동증명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예술활동증명 신청서에 규정하고 있음.
- 예술인활동증명을 전제로 하는 지자체의 다양한 예술인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지역과 지역간의 연계 및 공유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예술활동증명 업무 위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표5-26] 예술활동증명 업무 위탁 근거 마련 관련 법률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p>제6조의5(예술 활동의 증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 활동의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정한 예술 활동의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예술 활동의 증명 및 그에 대한 완료에 관한 업무를 제8조에서 규정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요건, 세부 기준, 절차,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표5-27] 예술활동증명 신청 관련 규정 개정 전후 비교

현행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 <예술인 복지법>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	제6조의5(예술 활동의 증명) ② 제1항에 정한 예술 활동의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을 입증할

<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예술 활동의 증명 및 그에 대한 완료에 관한 업무를 제8조에서 규정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요건, 세부 기준, 절차,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2-5-2.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 개선방안19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 <예술인 복지법> 개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데이터의 외부 공개나 예술인 복지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의 데이터의 공유가 불가능하여 예술인의 소득 수준이나 복지여건, 활동에 대해 전국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지역 단위에서도 지역 예술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움.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 6. (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 ③ (생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 ④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술활동증명 지역협력 협·단체의 해당 지역 예술인 정보 파악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관련 데이터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예술인 복지법>상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그러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비롯한 예술인 복지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의 상당한 제약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이러한 경향은 유관 법률들에서도 확인됨.

## 개인정보 활용 관련 유관 법률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시스템과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정부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제작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기술사법

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관리와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와 내용,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게다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소급효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기 구축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함.
- 한편, 현행 <예술인 복지법> 제6조<sup>29)</sup>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은 예술활동증명 제도와만 연계하여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예술활동증명 제도와만 연계하여 활용되는 현재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사문화된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예술인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토대로 예술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에서 지역 예술인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토대로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취득한 예술활동증명 관련 데이터를 비롯한 예술인 경력증명정보시스템상 데이터의 이용에 대하여 <예술인 복지법>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9) <예술인 복지법>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표5-28]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데이터 활용 관련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 2-5-3. 관련 협·단체에 대한 예술활동증명 업무 위탁 관련

개선방안20	(1) 협·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운영 ; 심의 위탁은 어려움 (2)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역 이관 ; 인력, 예산지원 등에 대한 선제적 검토 필요
--------	---

- 예술활동증명 신청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심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협·단체가 활동증명 신청 및 심의절차 업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예술인 복지법>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심의업무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관련 협·단체에 해당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업무에 관하여 <예술인 복지법>상 근거 규정이 마련되더라도 특정 예술분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를 통한 심의의 경우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또한 해당 단체의 대표성 판단이 어려우며, 특정 분야의 경우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부재한 경우도 있음. 그러나 현행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은 협력 협·단체를 통한 예술활동 증명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협·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이 필요함.
- 한편, 신청 및 심의 절차 담당 기관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발의일자 : 2022.5.4.)

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① 제2조제2호에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원화를 도입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설정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예술활동증명 업무가 이원화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원 가능 여부 및 해당 인력의 예술활동증명 업무 전담 여부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함.
- 2022년 6월 24일(금) 진행한 지자체 예술인복지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광역지자체 담당자들은 현실적인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 중앙의 지원,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 및 전담 인력 확충, 심의위원 풀 공유 - 지역에서의 자체 심의에 대부분 회의적이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행정심사 전담 인력 증원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얘기함.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의 숫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술활동증명의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에 지역연계형 예술활동증명 심의가 예술활동증명의 속도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2-5-4. 예술활동증명 대상 외국인 예술인의 범위

##### 현행유지

##### 현 외국인 예술인 관련 규정 유지

- 현행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은 적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하면서, 다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예술활동증명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과 연관성이 있거나 난민과 같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 국제법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표5-29] 예술활동증명 신청 가능 외국인 예술인

구 분	정의 및 내용	제출서류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F-5 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li> <li>• 혼인관계증명서 (F-6-1의 경우)</li> <li>•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F-4의 경우)</li> </ul>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6-1 결혼이민</li> <li>• F-6-2 결혼.자녀양육</li> </ul>	
③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따른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 F-4 재외동포자격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호에 따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 F-5 영주	
⑤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F-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난민인정 증명서</li> </ul>

-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나 국가 중요 정책상 필요한 특정 분야에서는 외국인을 우리 국민과 달리 대우하는 경우가 있음.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역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사회보장 영역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취하면서 구체적인 규율은 관계 법령에 맡기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지만, 참정권과 같이 관련 기본권의 성질상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본권에 관한 평등권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sup>30)</sup> 또한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 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sup>31)</sup>
- 그러나 외국인 예술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근로자법>상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이 우선으로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움. 또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을 이원화하는 경우, 외국인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 완료를 전제로 하지 않는 <예술인 복지법>상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예술인으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음.

30)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31)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결정.

- 따라서 현행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상 적용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향후 상호주의 등을 이유로 예술활동증명 대상 외국인 예술인의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전면적인 확대 방식보다는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추가하거나 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적절함.

#### 2-5-5.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 개선방안21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 과태료 부과

- 현행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35조는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예술활동증명은 무효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허위로 또는 부정한 방식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제재력이 미비함. 이러한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음.
- 허위자료 제출(예술활동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 제출)뿐 아니라 허위활동 기재(예술활동 증명 요건 구비를 위해 인위적으로 실적·수입 자료를 만드는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및 단체나 업체 등이 이러한 허위 신청이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는 허위자료 제출 및 허위활동 기재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행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적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친 형사처벌을 억제하여 다수 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유형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과태료 부과 방식이 적절하며, 이를 <예술인 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계약체결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서면계약체결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므로, 허위자료 제출 및 허위활동 기재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표5-30]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관련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6(예술 활동 증명의 무효)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완료한 예술 활동 증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무효로 한다.

	<p>1.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허위 사실이나 자료를 기재, 첨부하는 경우</p> <p>2.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신청 내용에 관해서 심각한 정도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자(단체나 법인인 경우 그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3년 내지 5년 의 범위 내에서, 예술 활동 증명 신청 및 재단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p>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들에게 관련 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제6조의7(보고, 자료제공 요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여부 및 제6조의6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무효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들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6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무효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p> <p>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p> <p>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p> <p>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2. 삭제</p> <p>3. 삭제</p> <p>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p> <p>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p>	<p>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의4. (좌동)</p> <p>1의5. 제6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자&lt;신설&gt;</p> <p>3의2. 제6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p>

[표5-31]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관련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4에 따른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4.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5.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제4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1. <u>법 제6조의7</u> 에 따른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4.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5.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제4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4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에 관한 사무 4.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에 관한 사무 5. 제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6. 제3조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제4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7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사무 2. ~ 6. (좌동)

[표5-32]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관련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의2	15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다.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의3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라. 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의4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마.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바. 법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의2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사. 법 제6조의6을 위반하여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경우[신설]	법 제18조 제1항제1의5호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아.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사에서 이동]	법 제18조 제1항제4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표5-33] 허위 신청 관련 규정 개정 전후

현행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제35조(허위자료 제출 시 효력)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은 무효이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5. 제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신설>

#### 2-5-6. 경력단절 예술인 기준의 확대 적용

**개선방안22** 경력단절 예술인 기준의 확대 적용 ;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고려

- 경력단절 예술인의 기준은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기간 이상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으로 소개되어 있음.
- 예술인간담회를 통해 경력단절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됨. 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사례, 혹은 예술활동 진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해 예술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경우 등 운영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이외에도 경력단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물론 ‘등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력단절과 관련한 사례 조사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심의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력단절에 대한 해석과 고려를 할 수 있어야 함.

### 3.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방안 ; 중장기

-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은, 구체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변화 흐름에 대한 예측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예술인 복지의 확대, 지역분권 및 지방자치 확대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변화 등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함.

#### 3-1. 지역 차원의 예술인 복지·지원체계 수립과 예술활동증명

- 지역별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제정의 확산과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지자체 차원의 예술인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지역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문화재단과 별도로 ‘지역 예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 체계적인 예술인 복지·지원정책을 도모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음(중앙정부의 사업 추진과 연계).
- 지역 차원의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역 예술인’에 대한 정의/범위 설정이 요청됨. 지역의 예술인을 예술활동증명 완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지역 예술인’을 정의하고 지역 차원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등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제도와 지역의 관계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예술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를 기준으로 삼았음.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의 기준(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참여 등)을 적용한 사례가 있으나, 절대다수의 지자체가 예술활동증명 완료를 조건으로 내세웠음. 그러다 보니 한편으론 급격하게 예술활동증명 신청자가 몰리고, 다른 한편으론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신청에 대한 어려움(특히 노령층)으로 재난지원금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음.
- 현재의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전국의 모든 예술인의 예술인 복지정책 참여의 조건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비록 현재의 예술활동증명 실적증명이 ‘최소기준’으로 만들어 졌다고 하나, 예술창작활동 여건의 차이, 정보의 차이 등으로 인해 여전히 예술활동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예술인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지역 차원의 예술인에 대한 기준, 관련 제도의 마련 등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지역 예술인 등이 계층화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정책 차원의 관계 정립과 정보 공유,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 있음.

#### 3-2. 예술인,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 현재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기본 구조와 내용은 2012년 제도 수립 당시의 연구를 기반으로 있음. 예술인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쉽지 않고, 예술인 복지정책의 범위와 예산 등이 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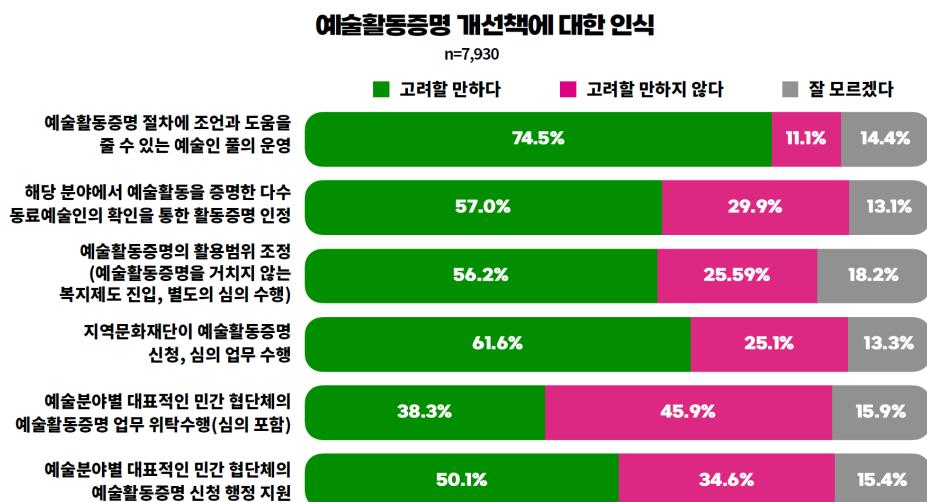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지만 해외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 한국 사회 변화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인식 변화, 대중들의 예술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 있음.

- 2022년 9월 22일 시행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효과의 확산, 지역 차원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등은 중기적으로 예술인 복지 관련한 논의가 확산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 여기에 더해 보편 복지와 예술인 복지의 상관관계 등 또한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주제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 연구자 등을 통한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그 결과물을 예술현장에 꾸준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3-3. 거버넌스 기반의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

- 현행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은 ‘문화예술 분야별 협회 및 단체를 통한 신청’(제3조)이나 ‘협력 협·단체의 지정’(제4조), ‘협력 협·단체를 통한 신청절차’(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11개 지역문화재단과 연계한 신진예술인 행정심의만 이루어지고 있음.
- 설문조사에서 예술인들은 협·단체에게 심의를 이관하는 것에는 반대의견이 많았으나, ‘예술활동증명 절차에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술인 풀의 운영’에 대한 지지(74.5%)나 ‘민간 협·단체의 신청 행정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의견(50.1%)이 높게 나왔음. ‘지역문화재단이 예술활동증명 신청·심의 업무 수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생각함.
- 중장기적으로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방안, 민간 협·단체와의 협력, 동료 예술인을 통한 운영 등 적극적인 거버넌스 전략을 통한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확산과 운영에 대해 고민해야 함.

[그림5-9] 예술활동증명 개선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3-4.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활용 제고

- 현재의 예술활동증명은 기본적으로 ‘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활동의 근거 자료를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활동을 증명하는 방식임. 이러한 증명 방식은 예술활동증명을 ‘예술인 증명’인 것처럼 인식하기 쉽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함.
- 예술인 개개인이 자신의 활동 근거를 확보·보관하고 이를 증빙하는 현재의 접근은 예술활동 증명 제도로써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예술인 100명과 5개의 예술활동이 전부인 가상의 예술계를 가정해 보면, 이 경우 현행 예술활동증명은 5개의 예술활동에 참여한 100명의 예술인이 5개의 예술활동에 참여했던 각자의 근거를 100건으로 신청하게 됨. 이때 예술활동증명의 신청자료 데이터베이스에는 5개의 예술활동에 대한 정보가 100건의 자료로 중복되어 서로 연관 없이 날개로 반영됨.
  - 동일한 가상의 예술계에서 5개의 예술활동을 검토해 예술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가늠하고, 기여가 있는 예술인의 범위를 정해 두면, 100명의 예술인은 자신의 기여가 인정된 예술활동의 코드나 이름만을 밝힘으로써 예술활동증명의 신청을 마칠 수 있음. 이때 예술활동증명의 신청자료는 5개의 예술활동에 대한 정보와 연결되어 절약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될 뿐 아니라 향후 유용성도 높아짐.
- 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예술활동을 심의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과의 연결을 통해 공공지원을 받는 사업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예술활동’ 해당 여부와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술인의 범위를 해당 지원사업의 결과보고와 함께 입력해(별도의 코드와 필드 추가) 두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음.
  - 물론 초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예술인이 소수겠지만 점차 해당 예술활동의 코드만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별도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어 부담이 줄 수 있고, 심의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심의 없이 해당 예술활동을 인정할 수 있어 심의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공공지원을 받는 예술활동에 대한 이러한 작업이 해를 거듭해 이루어지게 되면, 공공지원의 비중이 높은 예술활동의 특성상 예술인과 심의행정 양쪽에 많은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으리라 판단됨.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활용성 제고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시스템의 개발과 연결의 문제, 그리고 별도의 운영체계의 구축과 활용이 필요한 부분<sup>32)</sup>이기도 함. 하지만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관련 시스템의 활용이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과의 통합 등은 이전 연구<sup>33)</sup>에서도 제기되었던 주제이기도 함.
- 장기적으로는 민간 예술단체에서도 자신들의 주최하고 운영한 예술행사와 관련하여 공개 발표된 창작물과 참여한 예술인에 대한 정보를 등록(입력)하고 이를 심의를 통해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진전시킬 수 있을 것임.

32) 장기적으로 공공지원을 받는 사업, 프로젝트 외 민간영역의 예술활동까지도 포함한다면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음.

33)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 방안 연구’(2019.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p.109



## VI. 참고자료

---

1. <예술인 복지법> 개정 제안 내용 정리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 제안 내용 정리
3.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 내용 정리
4.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제안 내용 정리
5. 설문조사지 ; 예술인
6. 설문조사지 ; 심의위원



## 1. <예술인 복지법> 개정 제안 내용 정리

현행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 개정 제안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li> <li>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li> <li>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li> <li>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li> </ol> <p>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p> <p>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p> <p>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p> <p>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p> <p>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p> <p>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li> <li>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li> <li>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li> <li>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li> </ol> <p>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p> <p>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p> <p>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p> <p>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p> <p>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p> <p>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p>

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3. 예술인의 복지 증진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6.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
7.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문화예술융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융역과

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3. 예술인의 복지 증진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6.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
7.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문화예술융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융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 · 갱신 ·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 · 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 · 갱신 ·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 · 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 ·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삭제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2삭제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들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삭제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2삭제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 제6조의4 삭제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5(예술 활동의 증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 활동의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정한 예술 활동의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예술 활동의 증명 및 그에 대한 완료에 관한 업무를 제8조에서 규정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요건, 세부 기준, 절차,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6(예술 활동 증명의 무효)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완료한 예술 활동 증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무효로 한다.

1.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허위 사실이나 자료를 기재, 첨부하는 경우

2.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신청 내용에 관해서 심각한 정도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자(단체나 법인인 경우 그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3년 내지 5년 의 범위 내에서, 예술 활동 증명 신청 및 재단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의7(보고, 자료제공 요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여부 및 제6조의6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무효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 제3장 사회보장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3의2.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

에 따라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6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무효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장 사회보장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3의2.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및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10조의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 또는 그 부모·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무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및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10조의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 또는 그 부모·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무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에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이하 “지원대상 예술인”이라 한다)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국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에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이하 “지원대상 예술인”이라 한다)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국

세·지방세·토지·건물·소득·재산·출입국·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지방세·토지·건물·소득·재산·출입국·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16조의 2에 따라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장 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융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융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삭제
-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16조의 2에 따라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장 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융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융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삭제
- 3의2. 제6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1. 9. 24.>

3. 삭제 <2019. 12. 3.>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삭제 <2021. 9. 24.>

3. 삭제 <2019. 12. 3.>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 제안 내용 정리

현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 제안
<p>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li> <li>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li> <li>3. 삭제</li> <li>4. 삭제</li> <li>5. 삭제</li> <li>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li> </ol> <p>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2조의2(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조의3(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p>	<p>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lt;삭제&gt;</p> <p>제2조의2(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조의3(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p>



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삭제

②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 및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다만, 법 제4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상태 등 직업실태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예술인의 경력 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삭제

②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 및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다만, 법 제4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상태 등 직업실태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예술인의 경력 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불공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수 및 지면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4(불공정행위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 ① 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의4에 따라 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 및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의5(보고 등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 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 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 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불공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수 및 지면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4(불공정행위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 ① 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의4에 따라 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 및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의5(보고 등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 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 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 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p>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p> <p>2. 출석의 경우</p> <p>가. 출석의 일시와 장소</p> <p>나. 출석을 요구하는 사유</p> <p>다.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p> <p>제3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p> <p>1. 예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비속</p> <p>2. 예술인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비속</p> <p>②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p> <p>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p> <p>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금</p> <p>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조회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p> <p>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p> <p>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p> <p>2.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p> <p>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p> <p>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p> <p>3.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p> <p>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p> <p>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p> <p>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p> <p>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p>	<p>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p> <p>2. 출석의 경우</p> <p>가. 출석의 일시와 장소</p> <p>나. 출석을 요구하는 사유</p> <p>다.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p> <p>제3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p> <p>1. 예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비속</p> <p>2. 예술인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비속</p> <p>②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p> <p>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p> <p>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금</p> <p>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조회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p> <p>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p> <p>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p> <p>2.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p> <p>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p> <p>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p> <p>3.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p> <p>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p> <p>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p> <p>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p> <p>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p>
--	--

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자료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말한다.

제4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간  
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4에 따른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4.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5.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제4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자료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말한다.

제4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간  
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7에 따른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4.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5.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제4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4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에 관한 사무
4.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에 관한 사무
5. 제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6. 제3조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의 가입·수급 여부 확인, 소득 및 건강보험 납부액의 확인 등 예술인의 지원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사무
- 제4조의6(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방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7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에 관한 사무
4.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에 관한 사무
5. 제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6. 제3조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의 가입·수급 여부 확인, 소득 및 건강보험 납부액의 확인 등 예술인의 지원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사무
- 제4조의6(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방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3.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안 내용 정리

현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재단의 상임이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⑤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⑤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⑥ 재단의 상임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⑥ 재단의 상임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3(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밝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3(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규칙 별표 1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및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회 이상(연속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자격을 유지한 이후 예술 활동 증명을 재신청하는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되거나 같은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되는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은 같은조 제4항에 따라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으로 한다.

④ 3회 이상(연속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한다.

(제1안)

④ 3회 이상(연속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자격을 유지한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한다.

(제2안)

④ 3회 이상(연속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이 면제된다.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p>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 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p> <p>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p> <p>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p> <p>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p> <p>12. 분쟁해결 관련 사항</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p>	<p>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 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p> <p>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p> <p>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p> <p>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p> <p>12. 분쟁해결 관련 사항</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p>
---	---



#### 4.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안 내용 정리

현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제안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한 이 아니라는 뜻이다.</p> <p>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상 규정된 분류에 맞지 않더라도 예술 활동임이 분명할 경우 심의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p> <p>④ 법상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되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li> <li>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li> <li>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li> <li>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 동포</li> <li>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li> </ol> <p>제2장 신청</p> <p>제3조(신청방법) 예술 활동 증명 신청방법에는 개별 신청과 문화예술 분야별 협회 및 단체(이하 "협·단체"라 한다)를 통한 신청이 있다.</p> <p>제4조(협력 협·단체의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단체 중 엄격한 회원관리(가입 조건,</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한 이 아니라는 뜻이다.</p> <p>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상 규정된 분류에 맞지 않더라도 예술 활동임이 분명할 경우 심의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p> <p>④ 법상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되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li> <li>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li> <li>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li> <li>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 동포</li> <li>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li> </ol> <p>제2장 신청</p> <p>제3조(신청방법) 예술 활동 증명 신청방법에는 개별 신청과 문화예술 분야별 협회 및 단체(이하 "협·단체"라 한다)를 통한 신청이 있다.</p> <p>제4조(협력 협·단체의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단체 중 엄격한 회원관리(가입 조건,</p>

자격 심사 등)를 전제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협·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격의 전문예술(인) 협·단체
2. 해당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다수가 소속된 협·단체
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협력 협·단체에 대해 표본 검증, 민원 발생 시 검증 등 신뢰도 확인을 통해 협력 지속 여부를 결정하되, 최초 3년은 매년 협약을 갱신하며, 3년 연속 협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로는 3년 주기로 협약을 갱신한다.

③ 협력 협·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다.

제5조(협력 협·단체를 통한 신청절차) ① 협력 협·단체는 신청을 희망하는 소속 회원의 경력을 시행규칙 별표 및 동 지침의 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한다.

② 재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이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3장 심의위원회

제6조(심의방법) 예술 활동 증명의 심의방법은 행정심 의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행정심의회는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 검토 및 실적 또는 소득 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한다.

2.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는 제1호에 따라 부합된 자료에 대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체위원회로 운영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행정심의를 재단에 일임하고 행정 심의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분과위원회는 3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학, 미술(일반),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등 15개로 한다.

자격 심사 등)를 전제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협·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격의 전문예술(인) 협·단체
2. 해당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다수가 소속된 협·단체
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협력 협·단체에 대해 표본 검증, 민원 발생 시 검증 등 신뢰도 확인을 통해 협력 지속 여부를 결정하되, 최초 3년은 매년 협약을 갱신하며, 3년 연속 협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로는 3년 주기로 협약을 갱신한다.

③ 협력 협·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다.

제5조(협력 협·단체를 통한 신청절차) ① 협력 협·단체는 신청을 희망하는 소속 회원의 경력을 시행규칙 별표 및 동 지침의 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한다.

② 재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이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3장 심의위원회

제6조(심의방법) 예술 활동 증명의 심의방법은 행정심 의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행정심의회는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 검토 및 실적 또는 소득 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한다.

2.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는 제1호에 따라 부합된 자료에 대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체위원회로 운영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행정심의를 재단에 일임하고 행정 심의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분과위원회는 3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학, 미술(일반),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등 15개로 한다.

제9조(전체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복합 심의 등) ① 예술 활동 실적이 여러 문화 예술 분야에 걸쳐 있어 복합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의 직업이 속하는 분야와 작품이 속하는 분야가 다를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분야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가 불확실하거나 기존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장 근접한 분야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특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특례의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 1인과 재단 직원 1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제4장 인정기준

제11조(예술 활동의 범위) 예술 활동은 국내와 해외에서의 예술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제12조(예술 활동의 기준) 어느 분야의 기준을 적용할지는 작품을 근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연극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을, 악기 연주자가 무용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무용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주로 연극계에서 활동하며 장치, 조명, 분장, 의상 등을 담당하는 무대 미술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업 부분만을 모아 개인전을 열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에는 전시회가 없으므로 미술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기준 기간의 산정) ①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문학에서 2010년 5월 5일로 기록된 저작물의 경우 유효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② 기준 기간이 산정되는 시점은 저작물의 첫 공표 일자로 한다. 단, 출연,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 중 저작물 공표 현장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인력의 경우 최종 공표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제9조(전체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복합 심의 등) ① 예술 활동 실적이 여러 문화 예술 분야에 걸쳐 있어 복합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의 직업이 속하는 분야와 작품이 속하는 분야가 다를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분야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가 불확실하거나 기존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장 근접한 분야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특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특례의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 1인과 재단 직원 1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제4장 인정기준

제11조(예술 활동의 범위) 예술 활동은 국내와 해외에서의 예술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제12조(예술 활동의 기준) 어느 분야의 기준을 적용할지는 작품을 근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연극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을, 악기 연주자가 무용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무용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주로 연극계에서 활동하며 장치, 조명, 분장, 의상 등을 담당하는 무대 미술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업 부분만을 모아 개인전을 열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에는 전시회가 없으므로 미술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기준 기간의 산정) ①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문학에서 2010년 5월 5일로 기록된 저작물의 경우 유효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② 기준 기간이 산정되는 시점은 저작물의 첫 공표 일자로 한다. 단, 출연,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 중 저작물 공표 현장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인력의 경우 최종 공표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최근’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인 미술의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일자가 2014년 7월 1일이라면 ‘최근 5년’은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 후 같은조 제4항에 따라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이나 같은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 후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은 기준 기간의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1편’ 또는 ‘1곡’이란 독립된 작품을 말한다.

② ‘1권’이란 독립된 서적으로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단, 문학 분야 연속출판물의 경우 각각을 1권의 문학 작품집으로 본다.

③ ‘1장’이란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을 말하며 ‘음반’은 디지털 음원을 포함한다.

④ ‘1회’란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말한다.

⑤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⑥ 연극의 경우 동일한 작품이라도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⑦ 연예 분야 가목의 경우 16회 이상 고정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 이상”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⑧ 공동 창작의 경우 N분의 1 배점을 원칙으로 하며 주와 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같은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예정된 발표, 전시, 공연 등의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재난으로 인하여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예술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

③ ‘최근’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인 미술의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일자가 2014년 7월 1일이라면 ‘최근 5년’은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 후 같은조 제4항에 따라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이나 같은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 후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은 기준 기간의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1편’ 또는 ‘1곡’이란 독립된 작품을 말한다.

② ‘1권’이란 독립된 서적으로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단, 문학 분야 연속출판물의 경우 각각을 1권의 문학 작품집으로 본다.

③ ‘1장’이란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을 말하며 ‘음반’은 디지털 음원을 포함한다.

④ ‘1회’란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말한다.

⑤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⑥ 연극의 경우 동일한 작품이라도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⑦ 연예 분야 가목의 경우 16회 이상 고정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 이상”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⑧ 공동 창작의 경우 N분의 1 배점을 원칙으로 하며 주와 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같은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예정된 발표, 전시, 공연 등의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재난으로 인하여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예술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한다.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이 지원하는 비대면 예술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선정 내역, 참여확인서, 예술활동 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발표 매체의 기준) ① ‘문예지 등’, ‘관련 잡지 등’이란 서적, 웹진 등으로 서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관련 매체’란 ‘관련 잡지 등’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첨단 매체들을 폭넓게 포함한다. 다만 블로그 등의 개인매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 ①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이란 ‘스태프(제작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하며 행위의 결과가 저작물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저작물 공표에 반영되어 의미 표출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 경우를 망라한다.

② ‘상당한 정도’란 그것을 제외할 경우 작품에 적지 않은 손상이 갈 수 있고 또한 쉬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지시에 의한 단순 제작이나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행정지원 등 분명 필요하지만 창조력 발휘나 예술적 기여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스태프(제작진)’란 원래 연극, 영화, 방송 등에서 실연자 외에 제작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나 그 범위를 모든 공연, 영상, 전시 분야까지 확대하여 공연, 영상 분야의 실연자와 미술, 사진, 건축, 만화 분야의 창작자를 제외한 참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스태프 중 시행규칙 별표에 별도로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각 분야별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기술지원 인력의 활동 분야는 전시(미술, 사진, 건축, 만화), 공연(음악,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상(영화, 연예), 만화 제작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⑥ 미술, 사진, 건축 분야 전시 기획 인력 중 ‘예술감독 등 기획자’란 전시를 주도적으로 총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기획 인력과 구분한다.

제17조(문학 분야 인정기준) ① ‘문학’은 사상이나 감

출하여야 한다.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이 지원하는 비대면 예술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선정 내역, 참여확인서, 예술활동 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발표 매체의 기준) ① ‘문예지 등’, ‘관련 잡지 등’이란 서적, 웹진 등으로 서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관련 매체’란 ‘관련 잡지 등’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첨단 매체들을 폭넓게 포함한다.

제16조(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 ①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이란 ‘스태프(제작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하며 행위의 결과가 저작물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저작물 공표에 반영되어 의미 표출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 경우를 망라한다.

② ‘상당한 정도’란 그것을 제외할 경우 작품에 적지 않은 손상이 갈 수 있고 또한 쉬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지시에 의한 단순 제작이나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행정지원 등 분명 필요하지만 창조력 발휘나 예술적 기여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스태프(제작진)’란 원래 연극, 영화, 방송 등에서 실연자 외에 제작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나 그 범위를 모든 공연, 영상, 전시 분야까지 확대하여 공연, 영상 분야의 실연자와 미술, 사진, 건축, 만화 분야의 창작자를 제외한 참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스태프 중 시행규칙 별표에 별도로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각 분야별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기술지원 인력의 활동 분야는 전시(미술, 사진, 건축, 만화), 공연(음악,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상(영화, 연예), 만화 제작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⑥ 미술, 사진, 건축 분야 전시 기획 인력 중 ‘예술감독 등 기획자’란 전시를 주도적으로 총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기획 인력과 구분한다.

제17조(문학 분야 인정기준) ① ‘문학’은 사상이나 감

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을 뜻한다.

② 문학 분야 범주로는 시(동시), 시조, 소설(동화, 청소년), 희곡, 수필, 평론, 평전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번역 등이 있다.

③ 아동문학(동시, 동화)과 청소년문학의 경우 등단 여부(신춘문예, 각종 문예지 신인상, 각종 아동문학상)와 순수 창작 저술 활동(출판, 발표)이 추가 되고 교양·교육도서의 저술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정하되, 교양·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는 순수 창작 활동으로 본다.(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는 제외 한다)

④ ‘문예지 등’은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문학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년간 종합 문예지 및 장르별 문예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 된 문학전문 주간지, 지속적·주기적으로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년간 잡지 등을 말한다.

⑤ 공동 문학 작품집은 문예지 등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미술, 사진, 건축 분야 인정기준) ①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공간 예술, 조형 예술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응용미술’은 실제적인 효용에 목적을 둔 미술로 도안, 장식 따위가 있다.

② 미술 분야 범주로는 그림,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프랙탈 아트, 행위 예술 등의 세부 장르와 미술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공공미술은 전시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사진’은 빛의 작용으로 사물의 형상을 감광판(필름, 센서)에 각인시켜 보존하는 이미지를 뜻하며, 널리 사실의 기록과 증명의 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한편 사진가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는 창작수단이기도 하다.

⑤ 사진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⑥ ‘건축’은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요구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예술 또는 그 기술을 뜻한다.

⑦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또는 설계),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⑧ 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는 예술 활동으로

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을 뜻한다.

② 문학 분야 범주로는 시(동시), 시조, 소설(동화, 청소년), 희곡, 수필, 평론, 평전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번역 등이 있다.

③ 아동문학(동시, 동화)과 청소년문학의 경우 등단 여부(신춘문예, 각종 문예지 신인상, 각종 아동문학상)와 순수 창작 저술 활동(출판, 발표)이 추가 되고 교양·교육도서의 저술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정하되, 교양·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는 순수 창작 활동으로 본다.(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는 제외 한다)

④ ‘문예지 등’은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문학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년간 종합 문예지 및 장르별 문예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 된 문학전문 주간지, 지속적·주기적으로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년간 잡지 등을 말한다.

⑤ 공동 문학 작품집은 문예지 등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미술, 사진 분야 인정기준) ①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을 말하며 ‘응용미술’은 실제적인 효용에 목적을 둔 미술로 도안, 장식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② 미술 분야 범주로는 그림,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프랙탈 아트, 행위 예술 등의 세부 장르와 미술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공공미술은 전시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사진’은 빛의 작용으로 사물의 형상을 감광판(필름, 센서)에 각인시켜 보존하는 이미지를 뜻하며, 널리 사실의 기록과 증명의 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한편 사진가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는 창작수단이기도 하다.

⑤ 사진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⑥~⑧ <삭제>

인정하고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통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음악, 국악 분야 인정기준) ① ‘음악’은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며,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 서양 음악에 상대하여 우리의 전통 음악을 이르는 말이다.

② 음악, 국악 분야 범주로는 성악과 기악이 각각 또는 함께 이루는 여러 세부 장르들과 음악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가창, 연주, 지휘, 작사, 작곡, 편곡, 비평,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녹음, 믹싱, 마스터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음악은 고전음악, 현대음악, 퓨전음악, 대중음악, 동요 등을 포함하며, 오페라는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④ 국악은 전통연희, 전통무용 등과 융합 공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연희나 전통무용은 연극, 무용 분야와 병합 가능하며, 창극(국극)의 경우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⑤ 오페라, 창극(국극)의 연출은 음악, 국악 공연의 일반 기술지원 인력과 달리 연극 분야의 연출과 동일한 직종으로 본다.

⑥ 대중음악의 경우 재즈클럽, 라이브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공연이 가능한데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경우는 인정하나 유흥업소로 분류된 스탠드바, 밤무대 공연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⑦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9조(건축 분야 인정기준) ① ‘건축’은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요구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예술 또는 그 기술을 뜻한다.

②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또는 설계),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는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고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통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음악, 국악 분야 인정기준) ① ‘음악’은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며,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 서양 음악에 상대하여 우리의 전통 음악을 이르는 말이다.

② 음악, 국악 분야 범주로는 성악과 기악이 각각 또는 함께 이루는 여러 세부 장르들과 음악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가창, 연주, 지휘, 작사, 작곡, 편곡, 비평,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녹음, 믹싱, 마스터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음악은 고전음악, 현대음악, 퓨전음악, 대중음악, 동요 등을 포함하며, 오페라는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④ 국악은 전통연희, 전통무용 등과 융합 공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연희나 전통무용은 연극, 무용 분야와 병합 가능하며, 창극(국극)의 경우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⑤ 오페라, 창극(국극)의 연출은 음악, 국악 공연의 일반 기술지원 인력과 달리 연극 분야의 연출과 동일한 직종으로 본다.

⑥ 대중음악의 경우 재즈클럽, 라이브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공연이 가능한데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경우는 인정하나 유흥업소로 분류된 스탠드바, 밤무대 공연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⑦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경연, 축제, 행사 등의 성격이 있으나 참여 자체가 일정 수준을 전제로 초청받아야 가능할 경우는 인정할 수 있다.

⑧ 길거리 밴드나 직장 동아리 밴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⑨ 반주 음악(MR)은 1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무용 분야 인정기준) ① ‘무용’은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② 무용 분야 범주로는 한국무용(전통, 창작), 발레(전통, 창작), 현대무용, 실용무용 등의 세부 장르와 무용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안무, 비평, 기술지원(연출,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경연대회(공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경연이나 축제의 성격이 있으나 참여 자체가 일정 수준을 전제로 초청받아야 가능할 경우 등은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연극 분야 인정기준) ① ‘연극’은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 주는 무대 예술이다.

② 연극 분야 범주로는 대사극, 음악극(오페라, 창극(국극), 뮤지컬), 무용극, 마당극, 거리극, 마임, 행위예술, 전통연희(판소리, 가면극, 인형극, 그림자극), 아동·청소년극, 교육연극 등의 세부 장르와 연극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극작,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안무,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학생 공연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작품 개발 차원의 낭독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교육연극의 경우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되 해당 공연이 일정 정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룬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22조(영화 분야 인정기준) ①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② 영화 분야 범주로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세부 장르와 영화 비평이 있

⑧ 길거리 밴드나 직장 동아리 밴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⑨ 반주 음악(MR)은 1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무용 분야 인정기준) ① ‘무용’은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② 무용 분야 범주로는 한국무용(전통, 창작), 발레(전통, 창작), 현대무용, 실용무용 등의 세부 장르와 무용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안무, 비평, 기술지원(연출,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경연대회(공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경연이나 축제의 성격이 있으나 참여 자체가 일정 수준을 전제로 초청받아야 가능할 경우 등은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연극 분야 인정기준) ① ‘연극’은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 주는 무대 예술이다.

② 연극 분야 범주로는 대사극, 음악극(오페라, 창극(국극), 뮤지컬), 무용극, 마당극, 거리극, 마임, 행위예술, 전통연희(판소리, 가면극, 인형극, 그림자극), 아동·청소년극, 교육연극 등의 세부 장르와 연극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극작,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안무,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학생 공연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 ⑤ <삭제>

제22조(영화 분야 인정기준) ①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예술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관람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중송신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② 영화 분야 범주로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세부 장르와 영화 비평이 있



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시나리오,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에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에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④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만화 분야 인정기준) ① ‘만화’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인터넷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관련 매체에 공표된 창작물을 말한다.

② 만화 분야 범주로는 캐리커처, 카툰, 스토리만화(교양만화, 학습만화, 홍보만화 등) 등의 세부 장르와 만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제작 기술지원(스토리, 콘티, 펜터치, 데생, 컬러작업, 배경, 효과, 편집 등), 전시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제25조(소득 기준) 보조금 및 기부금은 해당 예술 활

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시나리오,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연기·무용·연주·가창·만담·마술·곡에, 그 밖의 예능을 공연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에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④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만화 분야 인정기준) ① ‘만화’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인터넷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관련 매체에 공표된 창작물을 말한다.

② 만화 분야 범주로는 캐리커처, 카툰, 스토리만화(교양만화, 학습만화, 홍보만화 등) 등의 세부 장르와 만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제작 기술지원(스토리, 콘티, 펜터치, 데생, 컬러작업, 배경, 효과, 편집 등), 전시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제25조(소득 기준) 보조금 및 기부금은 해당 예술 활

동의 완료를 전제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인 개인에게 귀속된 액수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26조(원로 예술인 인정기준) ① '원로 예술인'이란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활동 기간, 경력(언론보도 내용, 수상실적, 주요 행사 초청 경력, 문화예술 관련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 등을 근거로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은 종신토록 유효하다.

제27조(경력단절 예술인 인정기준) ① '경력단절 예술인'이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기간 이상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경력 단절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경력 단절 사유를 직접 기술하여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또는 기술된 경력 단절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력단절의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경력단절의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경력단절 이전 활동에 대하여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의 사유가 이미 해소된 경우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의 실적을 합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서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산정을 하지 않는다.

⑤ 심의위원회는 판정 시점에서 경력단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예술인에 대하여서는 이후 경력단절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차기 판정 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제28조(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인정기준) ①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이란 작품 발표 주기가 유난히 길다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작업 방식이 특수한 예술인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예술 활동 실적을 근거로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은 해당 분야의 기준을 따른다.

제29조(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 대해서는 예

동의 완료를 전제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인 개인에게 귀속된 액수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26조(원로 예술인 인정기준) ① '원로 예술인'이란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활동 기간, 경력(언론보도 내용, 수상실적, 주요 행사 초청 경력, 문화예술 관련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 등을 근거로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은 종신토록 유효하다.

제27조(경력단절 예술인 인정기준) ① '경력단절 예술인'이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기간 이상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경력 단절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경력 단절 사유를 직접 기술하여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또는 기술된 경력 단절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력단절의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경력단절의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경력단절 이전 활동에 대하여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의 사유가 이미 해소된 경우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의 실적을 합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서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산정을 하지 않는다.

⑤ 심의위원회는 판정 시점에서 경력단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예술인에 대하여서는 이후 경력단절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차기 판정 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제28조(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인정기준) ①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이란 작품 발표 주기가 유난히 길다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작업 방식이 특수한 예술인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예술 활동 실적을 근거로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은 해당 분야의 기준을 따른다.

제29조(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 대해서는 예

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도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 한 예술 활동 증명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제30조(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인정 기준) ① 여러 분야 또는 여러 목의 활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 역량이 서로 연계되어 발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하여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도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 한 예술 활동 증명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인정 기준) ① 여러 분야 또는 여러 목의 활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 역량이 서로 연계되어 발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하여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고 환산, 합산하여 1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장 효력

제3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35조(허위자료 제출 시 효력)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은 무효이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고 환산, 합산하여 1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장 효력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 5. 설문조사지 ; 예술인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대한 예술인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조사 결과를 통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는 약 10분 내외 소요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들은 모두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의견이 본 연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건강한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 응답자 등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추첨에 응하실 분은 설문 마지막 문항에 연락처를 기재해주시시오.)

###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관점]

1. 예술활동에 대한 아래 주장은 자신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아래 척도에 표시해 주세요

1-1. 예술활동증명은 곧 예술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다.

내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음 ○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편 ○	내 생각과 일치하는 편 ○	내 생각과 전적으로 일치함 ○	잘 모르겠음 ○
--------------------------	-------------------------	----------------------	------------------------	-------------

1-2.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내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음 ○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편 ○	내 생각과 일치하는 편 ○	내 생각과 전적으로 일치함 ○	잘 모르겠음 ○
--------------------------	-------------------------	----------------------	------------------------	-------------

1-3. 예술활동증명은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내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음 ○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편 ○	내 생각과 일치하는 편 ○	내 생각과 전적으로 일치함 ○	잘 모르겠음 ○
--------------------------	-------------------------	----------------------	------------------------	-------------

## [예술활동증명 과정]

2. 현재의 예술활동증명에는 <보기>의 11개의 구분에 따라 예술분야를 구분하고, 분야별로 각기 다른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분야의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기> 문학, 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일반, 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예술분야를 더 과감하게 통합해 수를 줄여야 ○	몇몇 예술분야를 통합해 수를 줄여야 ○	현재 적정 ○	몇몇 예술분야를 세분화해 수를 늘려야 ○	예술분야를 더 과감하게 세분화해 대폭 수를 늘려야 ○
------------------------------------	--------------------------------	------------	---------------------------------	--

3. 현재의 예술활동증명에는 <보기>의 3개 구분에 따라 예술활동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각기 다른 기준과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활동유형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기>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예술활동유형을 더 과감하게 통합해야 ○	예술활동유형 통합화 선호 ○	현재 적정 ○	예술활동유형 세분화 선호 ○	예술활동유형을 더 과감하게 세분화해야 ○
-----------------------------	-----------------------	------------	-----------------------	------------------------------

4. 현재의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 5개로 제안하고, 신청 예술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방법이 예술활동증명으로서 적합한 정도를 아래 척도에 표시해 주세요.

### 4-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부적합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부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적합 ○
----------------------------	----------------------------	---------------------------	---------------------------

### 4-2. 예술활동 수입

- 예술활동 수입 120만 원 이상은 1년의 유효기간, 360만 원 이상은 3년의 유효기간 부여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부적합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부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적합 ○
----------------------------	----------------------------	---------------------------	---------------------------

#### 4-3. 기준 외 활동 경우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이나 예술활동 수입 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증명 가능한 사유(경력단절 예술인, 원로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경로)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부적합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부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적합 ○
----------------------------	----------------------------	---------------------------	---------------------------

#### 4-4. 예술활동증명 특례

- 예술인 복지사업 중 1)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2) 산재보험 가입, 3) 예술인 신문고 신고 등 3개 상황에 한해서 특례별 증빙자료만으로 한시적 예술활동 증명을 빠르게 진행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부적합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부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적합 ○
----------------------------	----------------------------	---------------------------	---------------------------

#### 4-5.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신진예술인만이 참여 가능한 지원사업에 한해 활용할 수 있는 2년 유효기간의 신진예술인 증명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부적합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부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적합 ○
----------------------------	----------------------------	---------------------------	---------------------------

#### 5. 예술활동증명시에 본인이 준비했던 자료와 진행 절차 중에 가장 준비가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가장 준비가 어려웠던 자료 또는 절차 :  
어려웠던 이유 :

#### 6. 현재 예술활동증명의 필요자료와 심의기준의 문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턱이 매우 낮다 ○	문턱이 낮은 편 ○	적합한 수준 ○	문턱이 높은 편 ○	문턱이 매우 높다 ○
----------------	---------------	-------------	---------------	----------------

#### 7. 앞으로 예술활동증명의 필요자료와 심의기준의 문턱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턱이 과감하게 낮아져야 ○	문턱이 낮아지는 방향 선호 ○	변화할 필요 없음 ○	문턱이 높아지는 방향 선호 ○	문턱이 과감하게 높아져야 ○
-----------------------	------------------------	----------------	------------------------	-----------------------

8. 현재 예술활동증명은 예술활동 수입을 통해 활동을 증명하는 경우 <보기>와 같은 수입인정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수입 수준과 무관하게, 현재의 수입인정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기> 최근 1년 12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360만 원 이상

기준이 낮다  
○

딱 적절하다  
○

기준이 높다  
○

9. 아래 <보기>에 언급된 활동들은 어떤 경우에 전문적인 예술활동으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보기> 주부합창단 공연, 문화센터·평생교육원·아카데미 수강생 전시, 시민극단 연극, 사내 동아리 문집, 생활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동호회 활동(생활문화예술제 등)

- 오랜 활동 기간 (예: 주부합창단 공연을 20년째 이어오고 있다)
- 활동으로 인한 소득 발생 (예: 동호회 활동 공연으로 부업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 전문예술인 작업 참여 경력 (예: 전문예술인인 안무가가 창작하는 무용 공연에 참여했다)
- 수상 이력 (예: 시민극단의 연극 작품이 지역축제에서 상을 받았다, 문학 분야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 예술 관련 학위 취득 (예: 평생교육원에서 피아노를 배우다 음악대학에 진학, 졸업했다)
- 전문예술 활동 경력 보유 (예: 직업 배우로 활동하다 사고로 포기하고, 취미로 시민극단에 참여하고 있다)
- 뛰어난 예술적 역량 (예: 직업 연주자보다 더 뛰어난 연주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위의 어떤 경우도 전문적인 예술활동으로 여길 수 없음

10. 현재 예술활동증명은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에도 활동의 지속을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정해 <보기>와 같이 재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절차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아래 보기 중 어떤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보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방법과 신청자료는 최초(신규) 신청과 동일

- 재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 재신청 절차는 필요하고, 별다른 개선이 없어도 된다
- 필요하지만, 방법과 신청자료는 간소화되어야 한다
- 필요하지만, 유효기간은 더 늘어나야 한다
- 필요하지만, 재신청 횟수가 거듭되면 유효기간도 늘려가야 한다(예: 재신청 3회 이상은 유효기간 2배)
- 필요하지만, 다른 개선이 있어야 한다

■ ‘1번 재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와 ‘6번 필요하지만, 다른 개선이 있어야 한다’를 선택하신 경우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 [예술활동증명 심의]

11. 예술활동증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래 보기는 각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1. 성별 구성의 다양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중요한 편	매우 중요함	잘 모르겠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2.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중요한 편	매우 중요함	잘 모르겠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3. 해당 예술분야 경력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중요한 편	매우 중요함	잘 모르겠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4. 심의위원의 활동지역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중요한 편	매우 중요함	잘 모르겠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2. 예술활동증명의 심의 결과에 대한 아래 주장은, 자신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니까?

12-1. 예술활동증명의 심의는 공정하다

내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음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편	내 생각과 일치하는 편	내 생각과 전적으로 일치함	잘 모르겠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2-2. 예술활동증명의 심의는 전문성이 있다

내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음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편	내 생각과 일치하는 편	내 생각과 전적으로 일치함	잘 모르겠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예술활동증명의 처리 속도]

13. 현재 예술활동증명은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예술활동증명의 신청에서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주)은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간(주) 숫자 입력 :

14. 현재 예술활동증명에 참여하는 예술인 대부분은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예술분야별로 다양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가 논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에서 완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주)이 당신의 예술활동증명을 위해 적합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간(주) 숫자 입력 :

### [예술활동증명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15. 예술활동증명과 관련해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래 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15-1. 예술활동증명 절차에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술인 풀의 운영

고려할 만하다  
☐

고려할 만하지 않다  
☐

모르겠다  
☐

15-2. 해당 분야에서 예술활동을 증명한 다수 동료 예술인의 확인을 통한 활동증명 인정

고려할 만하다  
☐

고려할 만하지 않다  
☐

모르겠다  
☐

15-3. 예술활동증명의 활용 범위 조정(예술활동증명을 거치지 않는 복지제도 진입, 별도의 심의 수행)

고려할 만하다  
☐

고려할 만하지 않다  
☐

모르겠다  
☐

15-4. 지역문화재단이 예술활동증명 신청·심의 업무 수행

고려할 만하다  
☐

고려할 만하지 않다  
☐

모르겠다  
☐

15-5. 예술분야별 대표적인 민간 협·단체의 예술활동증명 업무 위탁수행(심의 포함)

고려할 만하다  
☐

고려할 만하지 않다  
☐

모르겠다  
☐

15-6. 예술분야별 대표적인 민간 협·단체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행정지원

고려할 만하다  
☐

고려할 만하지 않다  
☐

모르겠다  
☐

## [설문응답 분석을 위한 정보]

### 1. 자신의 예술분야

- |                                 |                                |                              |
|---------------------------------|--------------------------------|------------------------------|
| <input type="radio"/> 문학        | <input type="radio"/> 건축       | <input type="radio"/> 연극     |
| <input type="radio"/> 미술(일반)    | <input type="radio"/> 무용       | <input type="radio"/> 영화     |
| <input type="radio"/> 미술(디자인공예) | <input type="radio"/> 음악(일반)   | <input type="radio"/> 연예(방송) |
| <input type="radio"/> 미술(전통미술)  | <input type="radio"/> 음악(대중음악) | <input type="radio"/> 연예(공연) |
| <input type="radio"/> 미술(디자인공예) | <input type="radio"/> 음악(일반)   | <input type="radio"/> 연예(방송) |
| <input type="radio"/> 사진        | <input type="radio"/> 국악       | <input type="radio"/> 만화     |

### 2. 자신의 예술활동유형

- |                       |                       |                       |
|-----------------------|-----------------------|-----------------------|
|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3. 가장 최근, 자신이 예술활동증명에 참여한 방법

- ☐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 ☐ 예술활동 수입
- ☐ 기준 외 활동 경우
-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4. 가장 최근, 본인이 예술활동에 참여한 목적

- ☐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사회적 안전망 목적
- ☐ 창작지원금 받기 위해
- ☐ 심리상담, 지원사업 등 복지재단의 사업 참여를 위해
- ☐ 예술인으로서의 인정을 위해
- ☐ 기타

### 5. 현재 본인의 예술활동증명 완료 상태

- |                       |                       |                       |
|-----------------------|-----------------------|-----------------------|
| 완료했다                  | 미완료(보완자료 준비 중)        | 미완료(증명 포기)            |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6. 자신의 예술활동유형

- |                       |                       |                       |
|-----------------------|-----------------------|-----------------------|
| 짧았다                   | 적당했다                  | 길었다                   |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7. 가장 최근, 본인의 예술활동증명에 소요된 기간

- |   |       |      |
|---|-------|------|
| 약 | ( )개월 | ( )주 |
|---|-------|------|

8. 해당 예술분야 관련 예술인 중심의 민간 협·단체 소속 여부

- ☐ 소속되어 있고 협·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 소속되어 있지만 협·단체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는 편이다
- ☐ 소속되어 있지 않다

9. 자신의 연령대

- |                           |                           |                              |
|---------------------------|---------------------------|------------------------------|
| <input type="radio"/> 20대 | <input type="radio"/> 40대 | <input type="radio"/> 60대    |
| <input type="radio"/> 30대 | <input type="radio"/> 50대 | <input type="radio"/> 70대 이상 |

10. 자신의 성별

- |                          |                          |                             |
|--------------------------|--------------------------|-----------------------------|
| <input type="radio"/> 여성 | <input type="radio"/> 남성 | <input type="radio"/> 논바이너리 |
|--------------------------|--------------------------|-----------------------------|

11. 자신의 활동지역

- |                          |                          |                          |
|--------------------------|--------------------------|--------------------------|
| <input type="radio"/> 전국 | <input type="radio"/> 대전 | <input type="radio"/> 충남 |
| <input type="radio"/> 서울 | <input type="radio"/> 울산 | <input type="radio"/> 전북 |
| <input type="radio"/> 부산 | <input type="radio"/> 세종 | <input type="radio"/> 전남 |
| <input type="radio"/> 대구 | <input type="radio"/> 경기 | <input type="radio"/> 경북 |
| <input type="radio"/> 인천 | <input type="radio"/> 강원 | <input type="radio"/> 경남 |
| <input type="radio"/> 광주 | <input type="radio"/> 충북 | <input type="radio"/> 제주 |

## 6. 설문조사지 ; 심의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대한 심의위원의 의견을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조사 결과를 통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는 약 10분 내외 소요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모두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의견이 본 연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건강한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관점]

1. 예술활동에 대한 아래 주장은 자신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아래 척도에 표시해 주세요

1-1. 예술활동증명은 곧 예술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다.

내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음 ○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편 ○	내 생각과 일치하는 편 ○	내 생각과 전적으로 일치함 ○	잘 모르겠음 ○
--------------------------	-------------------------	----------------------	------------------------	-------------

1-2.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내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음 ○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편 ○	내 생각과 일치하는 편 ○	내 생각과 전적으로 일치함 ○	잘 모르겠음 ○
--------------------------	-------------------------	----------------------	------------------------	-------------

1-3. 예술활동증명은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내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음 ○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편 ○	내 생각과 일치하는 편 ○	내 생각과 전적으로 일치함 ○	잘 모르겠음 ○
--------------------------	-------------------------	----------------------	------------------------	-------------

## [예술활동증명 과정]

2. 현재의 예술활동증명에는 <보기>의 11개의 구분에 따라 예술분야를 구분하고, 분야별로 각기 다른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분야의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기> 문학, 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일반, 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예술분야를 더  
과감하게 통합해  
수를 줄여야  
○

몇몇 예술분야를  
통합해 수를  
줄여야  
○

현재 적정  
○

몇몇 예술분야를  
세분화해 수를  
늘려야  
○

예술분야를 더  
과감하게 세분화해  
대폭 수를 늘려야  
○

3. 현재의 예술활동증명에는 <보기>의 3개 구분에 따라 예술활동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각기 다른 기준과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활동유형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기>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예술활동유형을 더  
과감하게 통합해야  
○

예술활동유형  
통합화 선호  
○

현재 적정  
○

예술활동유형 세분화  
선호  
○

예술활동유형을 더  
과감하게 세분화해야  
○

4. 현재의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 5개로 제안하고, 신청 예술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방법이 예술활동증명으로서 적합한 정도를 아래 척도에 표시해 주세요.

### 4-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부적합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부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적합  
○

### 4-2. 예술활동 수입

- 예술활동 수입 120만 원 이상은 1년의 유효기간, 360만 원 이상은 3년의 유효기간 부여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부적합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부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적합  
○

#### 4-3. 기준 외 활동 경우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이나 예술활동 수입 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증명 가능한 사유(경력단절 예술인, 원로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경로)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부적합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부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적합 ○
----------------------------	----------------------------	---------------------------	---------------------------

#### 4-4. 예술활동증명 특례

- 예술인 복지사업 중 1)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2) 산재보험 가입, 3) 예술인 신문고 신고 등 3개 상황에 한해서 특례별 증빙자료만으로 한시적 예술활동 증명을 빠르게 진행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부적합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부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적합 ○
----------------------------	----------------------------	---------------------------	---------------------------

#### 4-5.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신진예술인만이 참여 가능한 지원사업에 한해 활용할 수 있는 2년 유효기간의 신진예술인 증명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부적합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부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적합한 편 ○	예술활동증명 방법으로 매우 적합 ○
----------------------------	----------------------------	---------------------------	---------------------------

#### 5. 현재 예술활동증명의 필요자료와 심의기준의 문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턱이 매우 낮다 ○	문턱이 낮은 편 ○	적합한 수준 ○	문턱이 높은 편 ○	문턱이 매우 높다 ○
----------------	---------------	-------------	---------------	----------------

#### 6. 앞으로 예술활동증명의 필요자료와 심의기준의 문턱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턱이 과감하게 낮아져야 ○	문턱이 낮아지는 방향 선호 ○	변화할 필요 없음 ○	문턱이 높아지는 방향 선호 ○	문턱이 과감하게 높아져야 ○
-----------------------	------------------------	----------------	------------------------	-----------------------

#### 7. 현재 예술활동증명은 예술활동 수입을 통해 활동을 증명하는 경우 <보기>와 같은 수입인정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수입 수준과 무관하게, 현재의 수입인정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기> 최근 1년 12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360만 원 이상

기준이 낮다 ○	딱 적절하다 ○	기준이 높다 ○
-------------	-------------	-------------

8. 아래 <보기>에 언급된 활동들은 어떤 경우에 전문적인 예술활동으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보기> 주부합창단 공연, 문화센터·평생교육원·아카데미 수강생 전시, 시민극단 연극, 사내 동아리 문집, 생활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동호회 활동(생활문화예술제 등)

- ☐ 오랜 활동기간 (예: 주부합창단 공연을 20년째 이어오고 있다)
- ☐ 활동으로 인한 소득 발생 (예: 동호회 활동 공연으로 부업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 ☐ 전문예술인 작업 참여 경력 (예: 전문예술인인 안무가가 창작하는 무용 공연에 참여했다)
- ☐ 수상 이력 (예: 시민극단의 연극 작품이 지역축제에서 상을 받았다, 문학 분야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 ☐ 예술 관련 학위 취득 (예: 평생교육원에서 피아노를 배우다 음악대학에 진학, 졸업했다)
- ☐ 전문예술 활동경력 보유 (예: 직업 배우로 활동하다 사고로 포기하고, 취미로 시민극단에 참여하고 있다)
- ☐ 뛰어난 예술적 역량 (예: 직업 연주자보다 더 뛰어난 연주능력을 가지고 있다)
- ☐ 위의 어떤 경우도 전문적인 예술활동으로 여길 수 없음

## [예술활동증명 심의]

9. 예술활동증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래 보기는 각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9-1. 성별 구성의 다양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중요한 편      매우 중요함      잘 모르겠음  
☐                      ☐                      ☐                      ☐                      ☐

### 9-2.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중요한 편      매우 중요함      잘 모르겠음  
☐                      ☐                      ☐                      ☐                      ☐

### 9-3. 해당 예술분야 경력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중요한 편      매우 중요함      잘 모르겠음  
☐                      ☐                      ☐                      ☐                      ☐

### 9-4. 심의위원의 활동지역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중요한 편      매우 중요함      잘 모르겠음  
☐                      ☐                      ☐                      ☐                      ☐

10. 예술활동증명의 심의 결과에 대한 아래 주장은, 자신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니까?

### 10-1. 예술활동증명의 심의는 공정하다

내 생각과 전혀      내 생각과 일치하지      내 생각과      내 생각과 전적으로      잘 모르겠음  
 일치하지 않음      않는 편      일치하는 편      일치함        
☐                      ☐                      ☐                      ☐                      ☐



## 10-2. 예술활동증명의 심의는 전문성이 있다

- |  |   |  |  |                                 |
|--|---|--|--|---------------------------------|
| 내 생각과 전혀<br>일치하지 않음<br><input type="radio"/> | 내 생각과 일치하지<br>않는 편<br><input type="radio"/> | 내 생각과<br>일치하는 편<br><input type="radio"/> | 내 생각과 전적으로<br>일치함<br><input type="radio"/> | 잘 모르겠음<br><input type="radio"/> |
|--|---|--|--|---------------------------------|

### [예술활동증명 처리 속도]

11. 현재 예술활동증명은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예술활동증명의 신청에서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주)은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간(주) 숫자 입력 :

12. 현재 예술활동증명에 참여하는 예술인 대부분은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예술분야별로 다양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가 논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에서 완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주)이 당신의 예술활동증명을 위해 적합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간(주) 숫자 입력 :

13. 예술활동증명 소요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설문응답 분석을 위한 정보]

#### 1. 자신의 예술분야

- |                                 |                                |                              |
|---------------------------------|--------------------------------|------------------------------|
| <input type="radio"/> 문학        | <input type="radio"/> 건축       | <input type="radio"/> 연극     |
| <input type="radio"/> 미술(일반)    | <input type="radio"/> 무용       | <input type="radio"/> 영화     |
| <input type="radio"/> 미술(디자인공예) | <input type="radio"/> 음악(일반)   | <input type="radio"/> 연예(방송) |
| <input type="radio"/> 미술(전통미술)  | <input type="radio"/> 음악(대중음악) | <input type="radio"/> 연예(공연) |
| <input type="radio"/> 미술(디자인공예) | <input type="radio"/> 음악(일반)   | <input type="radio"/> 연예(방송) |
| <input type="radio"/> 사진        | <input type="radio"/> 국악       | <input type="radio"/> 만화     |

#### 2. 해당 예술분야 관련 예술인 중심의 민간 협·단체 소속 여부

- ☐ 소속되어 있고 협·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 소속되어 있지만 협·단체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는 편이다
- ☐ 소속되어 있지 않다

3. 자신의 연령대

- |                           |                           |                              |
|---------------------------|---------------------------|------------------------------|
| <input type="radio"/> 20대 | <input type="radio"/> 40대 | <input type="radio"/> 60대    |
| <input type="radio"/> 30대 | <input type="radio"/> 50대 | <input type="radio"/> 70대 이상 |

4. 자신의 성별

- |                          |                          |                             |
|--------------------------|--------------------------|-----------------------------|
| <input type="radio"/> 여성 | <input type="radio"/> 남성 | <input type="radio"/> 년바이너리 |
|--------------------------|--------------------------|-----------------------------|

5. 자신의 활동지역

- |                          |                          |                          |
|--------------------------|--------------------------|--------------------------|
| <input type="radio"/> 전국 | <input type="radio"/> 대전 | <input type="radio"/> 충남 |
| <input type="radio"/> 서울 | <input type="radio"/> 울산 | <input type="radio"/> 전북 |
| <input type="radio"/> 부산 | <input type="radio"/> 세종 | <input type="radio"/> 전남 |
| <input type="radio"/> 대구 | <input type="radio"/> 경기 | <input type="radio"/> 경북 |
| <input type="radio"/> 인천 | <input type="radio"/> 강원 | <input type="radio"/> 경남 |
| <input type="radio"/> 광주 | <input type="radio"/> 충북 | <input type="radio"/> 제주 |